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해단식  
&  
사단법인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의  
**2024년 정기총회**

- 일시 : 2024년 1월 11일(목) 오후 3시 ~ 5시
- 장소 : 공간채비

## ■ 차례 ■

환영사 .....	3
축 사 .....	4
출범선언문 .....	5
진행순서 .....	6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조직 및 회원 현황 .....	7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활동보고 .....	11
[보고안건] 1호 2023년 정기총회 회의록 .....	16
2023년 임시총회 회의록 .....	20
2호 감사보고서 .....	22
2024년 의결권 안내 .....	25
회원별 의결권(회비 및 특별회비 납부 현황) .....	26
[심의안건] 1호 2023년 활동보고 .....	29
2호 2023년 결산보고 .....	42
3호 2024년 사업계획(안) .....	44
4호 2024년 사업예산(안) .....	48
5호 기타안건 .....	49
요청 및 공지사항 .....	49
붙임자료	
1)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관 .....	50
2) 2024년 사회적경제 여건 전망과 활동 방향 .....	57
3)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보고회 자료집 .....	69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후원가입 신청서	

## 환영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 이승석입니다.

총선을 불과 3개월여 앞둔 바쁜 시기임에도 총회에 참석해주신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김영배 의원님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석은 못 하셨지만 사회적경제에 응원을 보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사회적경제 대표님들, 진심으로 고맙고 환영합니다.

인사에 앞서, 먼저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개월간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바람을 담지 못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참으로 참담합니다. 사회적경제를 대표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전국 사회적경제 현장에서의 고통과 비명이 무겁게 제 마음을 짓 누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희망을 놓지 않게 된 이유는 지난 투쟁 과정에서 전국의 사회적경제 현장에서 보내주신 분노, 연대의 열망을 분명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전국단위 공동대책위원회 뿐만 아니라 여러 광역단위에서 자체적으로 공대위가 구성되었고, 다양한 행동으로 연대와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사회적경제의 분노와 투쟁의 목소리가 국회본청을 찌렁찌렁하게 메아리치던 출범식의 순간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보내주신 그 '연대의 힘'이야말로 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고 보다 내실있고 힘 있는 사회적경제로의 견인차가 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총회는 한국 사회적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전례 없는 예산 삭감과 탄압 속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하고 연대의 틀을 보다 강고히 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활동을 냉철하게 평가하고, 그 속에서 진취적이고 현실적인 사업계획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어려운 때라고 말하지만 역사의 모든 진보는 그같은 상황에서 그 벽을 허물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승석**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

저는 사회적경제의 힘과 저력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 축사

### 진선미 서울 강동구갑 국회의원

전)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호주제 위헌소송변호인단  
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운영위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백인변호인단

전)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원위원장

전) 제7대 여성가족부 장관

전) 국회 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2023~24)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경제위기대응센터  
자문위원장 등 역임



### 김영배 서울 성북구갑 국회의원

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현) 민주당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 입법추진단장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

전)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초대의장

전)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 상임대표

전) 민선 5기 6기 성북구청장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기획위 비서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현)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현)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자문단장

전)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2023~24)

전)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세월호 희생자 추모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 제안자



#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출범선언문

- 협동과 연대로 더 나은 세상을 향하여 -

오늘날 지구촌 곳곳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다. 이유는 이윤 추구가 최대 목표인 자본 기업이 중심이 되어 이끌어온 세계 경제가 세상을 심각하게 병들게 했기 때문이다. 부의 집중으로 양극화는 심화되었고 굶주리는 사람은 더 늘었다. 노동자들은 실업과 해고의 위협으로 시달리고 있다. 급기야 ‘묻지마 살인’과 같은 심각한 사회 병리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사회적 위기 속에 사회적 경제는 자본가, 투자자의 이윤을 위한 경제 활동이 아니라 협동조합, 공제조합과 같이 조합원의 필요나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 행위를 한다. 국가의 전체 경제에서 사회적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편에 속하는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의 나라들이 제일 살기 좋은 나라로 꼽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 사회적 경제라는 영역이 등장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다. 사회적 경제의 한 분야인 소비자협동조합은 일제 침략기인 1920년대에 출범하여 활발하게 진행되다가 총독부의 탄압으로 막을 내렸다. 이후 해방과 군사 독재시대를 거치면서 민간 소비조합이 여러 차례 시도되었지만 활성화되지 못했다. 반면,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고 육성지원한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조합원의 호혜와 자율 운영이 실종된 채 양적으로 성장했다. 협동조합을 제외한 사회적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진행되었다. 노동자들이 실업을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조직을 만들고 자활단체를 시작했다. 그리고 2007년에 정부가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법을 시행하면서 본격적으로 사회적 경제가 등장하였다.

이런 가운데 “세계 협동조합의 해”인 2012년은 한국의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운동에서 큰 자취를 남긴 해다.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협동조합기본법으로 노동자, 소비자, 농민, 자영업자 등 누구나 5인 이상만 모이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동안 한국에는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생협 등은 있었으나 노동자협동조합을 비롯하여 다양한 협동조합을 만드는 길은 막혀 있었다. 그래서 2007년부터 시작된 사회적 기업도 협동조합으로 하지 못하고 주식회사와 같은 상법상의 기업 또는 사단법인 등의 형태로 해야 했다.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으로 사회적 기업, 자활기관 등 여러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협동조합이라는 적합한 옷을 입고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간 민간은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 시행되자 사회적 경제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이고 정부 대응력을 갖추기 위해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를 만들고 2011년에는 협동조합기본법을 만들기 위해 ‘협동조합기본법제정연대회의’를 조직하여 활동해왔다. 이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두 조직이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라는 이름으로 새로 출범하고자 한다. 두 조직을 통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둘째, 사회적 경제에 속한 조직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다. 셋째, 정부와 소통하는 창구를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오늘 출범하는 연대회의는 특히, 사회적 경제 현장 조직들이 성공하고 중심이 되도록 지원할 것이다. 아울러 각 분야의 연합 조직이 튼튼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이제 자본 중심의 폭주하는 기관차는 멈추어야 한다. 그래야 아름다운 푸른 별 지구가 보전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 중심의 경제에서 벗어나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경제가 되어야 한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2012년 11월 21일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 ■ 진행 순서 ■

---

### 공대위 해단식: 60'

안내	10분	행사안내 및 주요 참석자 소개
인사 소개	15분	공대위 참여 단체별 활동 소개와 인사
공대위 활동보고	7분	하재찬 상임이사
인사	5분	이승석 상임대표
인사말 & 연대사	25분	공대위 공동대표 1인, 지역대표 1인, 참석 국회의원, 유관기관 등 외부 영상 인사
마무리 및 기념촬영	8분	

---

### 소소한 마음이 통하는 길 목 : 15'

---

### 정기총회

성원보고	하재찬 상임이사
개회선언	이승석 상임대표
서기 임명	
기명날인인 지명	
의순채택 및 기타안건 확인	
의결권 안내	하재찬 상임이사
보고 안건	
1호) 2023년 임시총회 회의록	
2호) 감사보고서	이현배 감사
의순채택 및 심의	
1호) 2023년 활동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	
2호) 2024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 승인의 건	
3호) 기타 안건	

폐회선언

---

사단법인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의  
조직 및 회원 현황

## □ 조직도



## □ 6기 임원현황: 18명 / 유형 4명, 지역 5명, 업종 4명, 당연직 6명(중복 1인)

이 사 회	<b>상임대표</b> (지역) 충남사회경제연대 이승석 상임대표 <b>공동대표</b> (지역) 대구사회경제가치연대_회장 강현구 이사장 (유형: 부문)한국자활기업협회 서용식 회장 (유형: 부문)전국협동조합협의회 박강태 상임대표 (유형: 생협)두레생협연합회 김영향 회장	<b>감사</b> (업종: 신협) 주민신협 이현배 이사장
	<b>이사</b> (지역)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오단이 공동대표 (지역) 광주사회적경제연합회 이정일 회장 (지역) 경기사회적경제지원센터협의회 박재성 회장 (유형: 부문) 임팩트얼라이언스 허재형 이사장 (업종) 한국YMCA연맹 김경민 사무총장 (업종) 통합지원기관전국협의회 윤봉란 공동대표 (업종) 한국의료(사협)연합회 임종환 회장 (업종)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이창수	<b>당연직이사</b> 교육위원장 신재걸 사회적금융위원장 유유미 정책기획위원장 강민수 제도개선위원장 윤봉란 정체성위원장 윤형근 대외협력위원장 상임이사 하재찬

## □ 위원회현황: 5개 상설위원회(59명)

<b>교육위원회(11명) 위원장_ 신재걸(협동조합교육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b>				
(사협) 공동체세움	신효영	한국대학생협연합회	정선교	행복중심생협연합회 신이찬희
<b>광주</b> 더블랜비	김지원	<b>경남</b>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김윤미	한국의료사협연합회 송지은
(사협)마음의숲	박봉희	<b>제주</b>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김정음	일하는사람들의협동조합연합회 김왕영
<b>광주</b> (사협)살림	박지연			

사회적금융위원회(13명) 위원장 유유미(전국주민협동연합회 상임이사)					
사회연대은행	안준상	한국사회혁신금융	이상진	전국주민협동연합회	유유미
신나는조합	문성환	함께일하는재단	박지영	임팩트얼라이언스	김재현
동작신협	김현숙	주민신협	이현배	사회투자지원재단	안인숙
사회투자지원재단	문보경	충남사회경제연대		대구사회적경제가치연대	김지영
정책기획위원회(15명) 위원장 강민수(전국협동조합협의회 정책위원장)					
강원사회적경제연대	임지현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김현철	지역농업네트워크(협)연합회	김종안
한국자활기업협회	박기홍	광주사회적경제연합회	최유진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	진현호
한살림연합	정규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박은경	대구사회적경제가치연대	이창원
임팩트얼라이언스	전일주	한국의료(사협)연합회	우세옥	사회적경제활성화네트워크	강영덕
한국지역자활선협협회	이문수		유한밀	(한국YMCA전국연맹)	
제도개선위원회(12명) 위원장 윤봉란(사회적협동조합 살림) / 총괄위원 이기대					
강원사회적경제연대	조세훈	서울협동조합협의회	이기대	경기사회적경제지원센터협의회	오경아
충남사회경제연대	황은하	경북 지역과소셜비즈	박철훈	부산 사회적기업연구원	김병규
전국협동조합협의회	김대훈	전국학교사협연합회	연정민	전국시민발전(협)연합회	김영란
행복중심생협연합회	안인숙	한국의료사협연합회	김종필		
정체성위원회(8명) 위원장 윤형근(모심과살림연구 부소장) / 총괄위원 안인숙					
사회투자지원재단	신명호	서울협동조합지원센터	강민수	사회투자지원재단	문보경
사회적협동조합너머	김정원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이경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신호진
행복중심생협연합회	안인숙				

## □ 회원현황: 29개 연합체 / 25개 단체

지역 연합체	업종 연합체	유형 연합체	소셜미션 및 업종									유형			
			ngo	신협	금융/공제	교육	돌봄/의료	시민발전	지원조직	연구/언론	IT 플랫폼	부문	생협	노협	소벤
9	12	8	1	7	7	2	2	1	11	5	1	2	4	1	1

### 지역 : 광역 9개 지역 연합체

대구사회적경제가치연대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충남사회경제연대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    강원사회적경제연대    인천사회적경제협의회    광주사회적경제연합회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 업종 : 8개 영역 / 12개 연합체 / 25개 단체

[시민사회] 1개 연합체: 한국YMCA전국연맹

[금융/신협] 7개 단체:

경동신협    서울행복(구 논골)신협    단원신협    동작신협    경기제일(구 안중제일)신협    장안신협  
 주민신협

[금융/공제] 2개 연합체, 4개 단체 재단법인밴드      사회연대은행(사)함께만드는세상      전국주민협동연합회      함께일하는재단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전국협)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신나는조합
[교육] 2개 연합체: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전국학교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전국협)
[돌봄/의료] 2개 연합체: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전국협)
[시민발전] 1개 연합체: 시민발전이중협동조합연합회(전국협)
[지원조직] 4개 연합체 경기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협의회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연합회      지역자활센터플러스사회적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전국협의회 8개 단체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협)충북사회적경제센터      (사협)사람과세상      (사협)살림      상생나무 커뮤니티와경제      지역과소셜비즈      경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연구/언론] 5개 단체 사회투자지원재단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성공회대사회적기업연구센터      한겨레신문사(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새로운사회를위한연구원
[IT/플랫폼] 1개 단체 ..... 사회적협동조합'빠띠'
<b>유형/부문: 4개 영역 8개 연합체</b>
[부문] 2개 연합체: 전국협동조합협의회      한국자활기업협회
[생협] 4개 연합체: 두레생협연합회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노동] 1개 연합체: 노동자자협동조합연합회
[소셜벤처] 1개 연합체: 임팩트얼라이언스

#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활동보고

##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참여단체(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외 89개 단체):** 광주사회적경제연합회, 강원사회적경제연대, 대구사회적경제가치연대,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인천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충남사회경제연대,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 (준)세종사회적경제연대, 세상만사, 한발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경기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협의회, 두레생협연합회,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임팩트얼라이언스, 전국협동조합협의회, 한국자활기업협회,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지역자활센터플러스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공동육아외공동체교육,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연합회, 전국주민협동조합회, 한국의료(사협)연합회,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 전국학교(사협)연합회, 시민발전이중협동조합연합회, 일하는사람들의협동조합연합회, 강원사회적경제센터, 사회연대은행, 사회투자지원재단,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기업연구센터, 밴드, 경기제일신협, 경동신협, 서울행복신협, 단원신협, 동작신협, 빠띠, 장안신협, 주민신협,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협동조합연구소, 함께하는재단, 한국마을연합, (준)통합돌봄(사협), 가슴기살균제피해자단체, 천안사회적경제연대, 강원도사회적기업협의회, 안산시시민발전협동조합, 살림, 신나는조합, 경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상생나무, 여주시사회적경제마을통합지원센터, 원주협동사회네트워크, 춘천사회적경제협의회, 영월사회적경제협의회, 광진구사회적경제협의회, 옥천사회적기업네트워크, 옥천순환경제공동체, 칼폴라니연구소, 인라이프케어이중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경제활성화\_충북네트워크, 산림형사회적경제협의회, 한국사회주택협회, 대전동구사회적경제연합회, 사협마을살림공작소, 서울시재생기업협의회(준), 광주의료복지(사협),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서울자치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연대회의, 로컬프라이중협동조합연합회, 건강한의료복지(사협), 시흥희망의료복지(사협), 강원의료복지(사협), 전주의료복지(사협), 인천평화의료복지(사협), 느티나무의료복지(사협), 살림의료복지(사협), 안산의료복지(사협), 행복한마을의료복지(사협). 충북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13기.

## □ 2024년 사회적경제 사업 예산 편성안 및 최종 확정안에 대한 증감 현황

○ 23년 예산(1,118,351) → 24년 예산(479,966) / 삭감규모 및 비율: -634,585(56.7%) / 증액: 5,201

부처	사업명	부문	정부편성안(단위: 백만원)				증액 (단위: 백만)	24년예산 (단위: 백만)
			2023 (A)	2024 (B)	증감 (B-A)	증감율		
금융위	신용보증기금 사회적경제 보증사업	금융	150,000	0	-150,000	-100%		0
	서민금융진흥원 사회적경제 대출지원	금융	10,000	0	-10,000	-100%		0
	사회투자펀드 조성 및 운영	금융	300,800	0	-300,800	-100%		0
기재부	협동조합 활성화	비금융	7,500	780	-6,720	-90%	800	1,580
교육부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비금융	500	0	-500	-100%		0
과기부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지원	비금융	1,272	636	-636	-50%		636
행안부	마을기업 육성	비금융	6,995	2,695	-4,300	-61%		2,695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비금융	3,500	0	-3,500	-100%		0
문체부	스포츠산업 예비초기 창업 지원	비금융	6,968	0	-6,968	-100%		0
	문화재 사회적 기업 육성	비금융	0	500	500	신규		500
농식품 부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비금융	5,900	0	-5,900	-100%		0
	농업농촌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비금융	900	0	-900	-100%		0
	농촌 사회적경제 서비스공급 기반조성	비금융	900	0	900	-100%		0
산림청	산림형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비금융	650	0	-650	-100%		0
	산림일자리발전소 운영	비금융	3,900	0	-3,900	-100%		0
	신품종 생명자원 활용 공동체 활성화	비금융	4,000	0	-4,000	-100%		0
산업부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비금융	21,000	9,440	-11,560	-55%		9,440
중기부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지원	비금융	2,560	2,560	0	0%		2,560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비금융	12,600	12,600	0	0%		12,600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사업	비금융	4,851	4,851	0	0%		4,851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사업(수지차보조)	비금융	17,031	16,480	-551	-3%		16,480
	소셜벤처 육성	비금융	2,000	0	0	-100%		0
	소셜임팩트 보증	금융	265,800	265,800	0	0%		265,800
	사회적경제기업 정책자금 지원	금융	70,000	70,000	0	0%		70,000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금융	15,000	15,000	0	0%		15,000
환경부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육성	비금융	1,300	0	-1,300	-100%		0
고용부	사회적기업육성(지원)	비금융	93,880	28,589	-65,291	-70%	4,401	32,990
	사회적기업육성(지특)	비금융	103,377	47,665	-55,712	-54%		47,665
	사회적기업육성(제주)	비금융	4,937	2,370	-2,567	-52%		2,370
여가부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활성화지원	비금융	230	0	-230	-100%		0
합계			1,120,144	481,990	-634,355	-56.7%	5,201	485,167

□ 예산 증액 세부 내용: 52억 1백만원 증액

- 협동조합: 8억원
  - 교육(2억) + 감독및경영공시(1억) + 판로지원및홍보(2억) + 협동조합 등 정책개발(1억) + 기타사업(2억)
- 사회적기업: 44억 1백만원
  - 청년등사회적기업가육성: 11억 5천6백만원(기지원 창업팀 사후관리 및 멘토링 10억5천6백, + 온라인콘텐츠 개발 확충 1천)
  - 사회적기업 판로지원: 13억 6천3백만원(온라인 판로지원 2억 + 소셜벤더 지원 11억6천3백)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전문컨설팅) 10억
  - 사회적기업 인식개선: 6억 4천만원(사회적기업 인식개선 3억 + 사회적기업 주간행사 1억 + 사회적기업 국제포럼 9천 + 국내외사회적경제 정책 사례 확산 1억 5천)
  - 지방성장지원센터 이전 지원: 2억 4천2백(파견수당 1억9천2백 + 이사비용 5천)

□ 2024년 예산

	'23년 본예산(A)	'24년		국회 증감 (C-B)	전년 대비 (C-A)
		정부안 (B)	최종 (C)		
총수입(증가율)	625.7	612.1(Δ2.2)	612.2(Δ2.2)	+0.1	Δ13.5
총지출(증가율)	638.7	656.9(+2.8)	656.6(+2.8)	Δ0.3	+17.9
관리재정수지(GDP대비)	Δ58.2(Δ2.6)	Δ92.0(Δ3.9)	Δ91.6(Δ3.9)	+0.4	Δ33.4
국가채무(GDP대비)	1,134.4(50.4)	1,196.2(51.0)	1,195.8(51.0)	Δ0.4	+61.4

- 2024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
  - 역대 최저 총지출 증가율(2.8%)로 정부 예산안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에 대한 '감액 내 증액' 조정 원칙에 따라 Δ4.2조원 감액, +3.9조원 증액하여 총지출 규모를 656.9조원에서 656.6조원으로 Δ0.3조원 축소함.
  - 올해 실질 GDP 성장률, 1.4%도 달성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OECD가 9월에 발표한 세계 경제성장률 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분기별 실질 GDP 성장률은 각각 0.3%, 0.6%, 0.6%임. 이 경제성장률 달성에 민간 지출의 기여도는 평균 0.7%, 정부 지출의 기여도는 평균 -0.2%임. 경제 성장률을 약화시킬 정도로 정부 지출이 작은 상황에서 양당 교섭단체 합의 예산은 정부 제출안에서 3조원을 추가 감액함.
  - 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예산, 저소득 구직자 취업 지원 예산, 여성·청소년 보호와 피해자 지원 예산, 중증장애인 취업지원 예산 등 다수의 민간 예산 저의 전액 삭감된 상태이며, 민생 살림 예산 패키지 제안에 함께 했던 주체의 예산증액은 없었음.

□ 공대위 활동에 대한 평가

- 52억 증액 견인
  - 예산 대응을 진행한 주체들의 예산 증액이 없었던 것에 비해 일정 정도의 성과가 있었음.
  - 하지만 취약계층 및 활동가 일자리를 지키고자 했던 것을 지키지 못 함.
- 사회적경제 계가 정부의 정책지우기에 대하여 투쟁한 첫 사례란 의미가 있음.

- 사회적경제체는 시민사회 주체 중 가장 빠르고 적극적인 집단 대응을 함.
- 윤석열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지우기에 대한 직접적인 공동대응으로 우리 정체성 강화 및 내부 패배 의식을 감소시킴
- 가장 큰 어려움이 있는 사람 중심의 <누구도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는 연대와 그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문제제기 속에서 경기/광주/제주 등 지방정부의 대체 예산 편성에 긍정적 영향을 끼침.
- 예산의 실질적 활용 측면에서 현장 소통을 통해 꼭 필요한 대응 분야에서의 대응을 진행함.
  - 농업, 소셜벤처 등 부처와의 소통이 원활히 진행되는 경우 이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노력함.
  - 창업 분야의 경우 적절한 대응 주체가 없어 지원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함.
- <민생살림 예산 패키지>를 시민사회에 요구함으로 다양한 주체와의 연대와 협력의 기틀을 마련함. → 예산 대응 후 21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할 민생법안 대응 진행
- 보다 강력한 요구를 할 수 있었으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 주요 주체에 대한 관리를 하지 못하여 초기 국회(민주당)에 메시지(요구)의 혼란이 있었음.
- 공대위 차원에서의 예산 원상복구 대응은 적극적이면서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각 프로세스별 진행함. 하지만 국회의 예산 협상 과정별 대응 시점을 보다 빠르게 할 필요가 있음.
  - \* 9월 중 하순 예산에 대한 정당의 대응 방안이 수립됨
- 국회 대응은 보완적 수단이며 정부의 예산안을 수립 단계에서의 대응이 꼭 선행되어야 함.

## □ 예산 대응을 위한 프로세스 및 단계별 제안

단계	주요내용	시기	대응
사업방향 제출	지역 및 진흥원 등에서 내년 사업 방향 제출	3월	사회적경제 관련 언급이 예산 수립의 명분을 줄 수 있어 큰 도움이 됨
예산안 제출	사업 방향을 기초로 한 내년도 사업계획안 제출(예산안 수립)	6~7월	<b>* 실질적인 사업/예산 대응 기간으로 여당과의 협력이 중요하며, 상임위 내 우리 편인 의원을 세원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함</b>
부처안 정리	지방정부 및 주요 관계기관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안을 기반으로 부처안을 정리하여 기재부에 제출	7~8월	지방정부 및 진흥원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함. 단계로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에서 제출된 계획안 등을 포함하여 부처사업을 수립하는 단계로 부처와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함.
정부안 정리	기재부가 정부안을 최종 확정	8월	지방/관계기관의 관련 부서 및 국회 등을 통해 부처에서 사회적경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야 함.
국회심의 및 확정	정당별 예산에 대한 입장과 주요 사업별 대응 방침 마련	9월	사회적경제체의 입장을 빠르게 정하여 여/야 정당별 대응 방침에 개입하거나 관여하도록 해야 함.
	상임위별 예산소위 및 상임위원회 논의 진행	9~11월	상임위에서 대응 예산 관련 (구두/서면)질의가 해당 부처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상임위 및 예결위 내 우리 편 의원실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함.
	상임위원회 논의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 논의 진행	10월~11월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 대응이 함께 진행되어야 하며, 여당보다는 야당 중요. 세부 계획을 중심으로 우선순위 등 구체적인 요구안 제시해야 함.
	예산결산소위원회(개수위원회)	11월	
	예산결산소소위원회 및 교섭단체간 협의 진행	12월 첫 주	지역(구)에서 강력한 국회(의원) 요구는 늘 가장 효과적인 대응 전략이나, 이 시기는 이것 이외 할 수 있는 대응방안이 없음

\* 공대위 활동 예산 p.46쪽 참조

# 보고안건

1호 2023년 정기총회 회의록  
2023년 임시총회 회의록

2호 감사보고서

# 보고안건 1호 2023년 정기총회 회의록 2023년 임시총회 회의록

## 2023년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기총회 회의록

- ※ 일시: 2023년 2월 24일(금) 오후4시
- ※ 장소 : 공간 채비(서울시 충무로)

### 1. 개요

- 사단법인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연대회의')는 '공간 채비'에서 2023년 정기총회를 진행한다.
- 이승석 상임대표를 선두로 하여 원형으로 돌아가며 서로 소개와 안부를 나누고, 참석한 내/외빈의 축사와 연대사 그리고 국회의원 영상축사를 함께 나누며 정기총회 전 1부 행사를 진행한다.
- 기념촬영 후 이승석 대표의 인사말과 함께 2부 정기총회 본회의를 시작하다.

### 2. 개회 및 경과보고

#### □ 성원 보고 및 개회선언

- 전성욱 사무국장이 총 55개 단체 중 34개 회원 참석, 위임 4개 단체로 성원 되었음을 이승석 의장에게 보고하고, 이승석 의장이 2023년 정기총회의 개회를 선언하다.

#### □ 서기 및 기명날인 지명

- 의장이 사무국장을 서기로 추천하고 참가자의 동의를 구하여 전성욱을 본 회의의 서기로 지명하다.
- 의장이 기명날인으로 강민수, 윤형근, 안인숙을 추천하고 참가자 전원의 동의를 구하여 기명날인 회원으로 지명하다.

#### □ 의순 채택

- 의장이 회의 진행을 요청하고 윤봉란이 동의하고 김명숙이 재청하여 제안된 의순대로 진행한다.

#### □ 전차 회의록 보고

- 하재찬 상임이사가 전차 회의록을 보고하고 의장이 이견을 물어 이정일이 동의, 안준상이 재청하여 전차 회의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회의록을 접수하다.

#### □ 2022년 감사 보고

- 이현배 감사가 회원단체가 다양한 필요를 해결하기 위하여 4차 네트워크 조직인 연대회의를 위원회/추진단/TFT 등을 제안하여 활용하고, 부설 연구소 추진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이현

배 감사가 감사보고를 하다.

### 3. 안건논의

#### □ 회의안건 채택

- 의장이 본 회의 안건 및 논의 순서를 안내하고 기타 안건 제안을 요청하다.
- 의장이 기타 안건 제안이 없는지 재차 확인한 후 안건 및 논의 순서를 안내한 대로 진행할 것에 대하여 요청하고 참여자에게 동의를 구하다.
- 이에 참가자 전원이 동의하다.

#### □ 1-1호 안건 : 2022년 활동보고/활동 승인의 건

- 상임이사가 연대회의 주요활동으로 사회연대실험 활동 및 백서 제작, 조직강화 및 현장지원, 새로운 공동행동, 사회적경제 청년그룹과의 연계, 판로지원 및 확대, 부설연구소 추진, 이로운넷 재정안정화를 위한 후원회 조직 및 사업 지원, 시민사회 협력강화, 대선 및 지선대응, 국회대응 활동 등 2022년 연대회의 사업 및 활동에 대해 보고하다.
- 상임이사가 부재중인 하정은 위원장을 대신해 2022년 사회적금융위원회의 활동과 23년도 주요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내정된 신임 사회적금융위원회 유유미 위원장을 소개하고 유유미 위원장이 인사하다.
- 정책기획위원회의 강민수, 교육위원회의 신재걸, 제도개선위원회의 윤봉란, 정체성위원회 윤형근 위원장이 22년도 위원회 활동 보고 및 23년도 주요계획을 보고하다.
- 의장이 2022년도 사업 및 활동 보고와 관련하여 참석자들에게 질문 사항이나 의견을 묻고,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고 활동 보고를 접수하다.

#### □ 1-2호 안건 : 2022년 결산 보고/결산 승인의 건

- 사무국장이 2022년 결산 보고를 하다.
- 의장이 2022년도 결산 보고와 관련하여 참석자들에게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을 묻고,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고 활동 보고를 접수하다.

#### □ 1호 안건 승인 : 2022년 활동 및 결산 보고 승인의 건

- 의장이 접수된 보고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다.
- 이에 윤봉란 동의와 전일주 재청으로 제1호 안건 활동 및 결산 보고를 승인하다.

#### □ 2-1호 안건 : 2023년 사업계획(안)

- 상임이사가 2023년 사업계획(안)을 준비한 배경과 목적, 기초를 밝히고, 재정안정화, 새로운 공동행동, 회원 간의 연대와 협력, 소통채널 강화를 위한 사업(포털/인트라넷) 등 세부적인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며 사업계획(안)을 안건으로 제출하다.
- 부설연구소의 설립을 위한 그 동안의 추진 경과를 추진단장 김기태가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설명함에 의장이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및 추가하고 싶은 것이 있는지 등을 묻고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원안대로 접수하다.

□ 2-2호 안건 : 2023년 사업예산(안)

- 상임이사가 2023년 사업예산(안) 수립의 방향과 원칙 등에 관해 설명하고 안건을 제출함에 의장이 사업예산과 관련하여 질문이나 추가하고자 하는 사안을 묻고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원안대로 접수하다.

□ 2호 안건 승인 : 2023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의장이 2023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다.
- 이에 이현배 동의와 강민수 제청, 그리고 참석자의 전원 박수로 제2호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다.

□ 3호 안건 : 새로운 공동행동 결의안 채택의 건

- 상임이사가 SE로운공동행동이 제안된 배경과 논의과정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며 결의안을 제출하다.
- 강민수가 연대회의 공동행동이 제도개선 등의 활동에서 현장 사업으로 확대된 것이며, 1차 공동행동이 진행되는 과정 중이라도 연대회의를 기반으로 한 추가적인 공동행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다. 더불어 업종별 컨소시엄 등 사업연대를 조직화해 나가기 위한 것임을 확실히 해 줄 것을 요청하다.
- 이에 의장이 강민수의 의견에 동의하며 SE로운공동행동에 대한 의미와 방향성을 강조하여 밝히며, 지명된 3인(최유진, 이정일, 엄승용)에게 결의안 낭독을 요청하다.
- 최유진, 이정일, 엄승용 3인이 결의안을 낭독하고 의장이 결의안 채택에 대해 승인을 요청하다. 이에 참석자 전원이 박수로 화답하여 결의안이 원안대로 승인되다.

□ 기타의견

- 의장이 폐회 전 참석자의 기타의견을 묻다.
- 이정일이 어려운 현재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위축을 떨쳐내기 위해서 조직적이고 단결된 힘을 드러내는 결의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며, 자신이 먼저 이를 실천하기 위해 하루 1천원씩 365일간 모아 36.5만원을 연대회의에 후원을 밝히다. 자신의 실천에 이어 릴레이로 참여해 줄 것을 윤봉란에게 요청하며, 이런 릴레이 실천으로 연대회의를 후원하여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며 새롭게 도약하고, 현장에 필요한 연구소가 자리잡도록 우리 스스로 힘이 될 것을 강조하다.
- 이정일 제안에 윤봉란이 화답에 이어 오수산나가 연대회의(제도개선위원회) 활동을 하며 갖게 된 보은의 마음을 갖게 된 경위와 함께 이정일의 제안에 용기내어 후원을 결정하게 되었음을 밝히며 다른 분들의 동참을 요청하다.
- 이어 유유미가 연대회의 후원계좌로 자동이체를 총회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실시했음을 밝히며 월 5천원씩 20년 자동이체할 것을 추가 제안하며 바로 연대회의 단체가 함께 하고 있는 단체카톡에 후원계좌를 올려 줄 것을 요청했고, 엄승용도 동참할 것을 밝히다.
- 하재찬이 이정일(광주사회적경제연합회 회장)의 제안과 화답한 윤봉란(살림 이사장), 오수산나(시민발전 사무처장), 유유미(주민협동연합회 상임이사), 엄승용(충북사회혁신센터장)에게 감사를 표하며, 이러한 참여가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이들에게 다음 사람을 지목해 줄 것과 참석자와 연대회의 회원단체가 적극적으로 호응해 줄 것을 요청하다.

- 이러한 결의가 지속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후원 릴레이에 모두 참여할 것을 참석자 전원이 박수로 호응하다.

□ 총회 회의록

- 서기 전성욱이 총회 회의록을 읽고 참석자 전원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고 전원 동의하다.

□ 폐회 선언

- 의장이 연대회의 후원 및 부설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제안해 주신 이정일 과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신 분들 그리고 박수로 위 제안을 환영한 참여 회원에게 감사를 표하며 정기총회 폐회를 선언하다.

2023년 2월 24일

서기 전성욱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직인)



기명날인

강민수

강민수  
(인/서명)

안인숙

안인숙  
(인/서명)

윤형근

윤형근  
(인/서명)

# 2023년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임시총회 회의록

- ※ 일시: 2023년 5월 19일(금) 오후2시
- ※ 장소: 신나는조합(서대문)

## 1. 개요

### □ 개요

- 사단법인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연대회의')는 '신나는조합'에서 2023년 임시총회를 진행한다.
- 참석자 서로 인사를 나누고, 각 위원회와 부설연구소 활동을 보고하다.
- SE로운공동행동 제안설명과 깜짝 이벤트를 진행한 후 본 임시총회를 진행한다.

## 2. 개회 및 경과보고

### □ 성원 보고 및 개회선언

- 하재찬 상임이사는 총 49개 단체 중 참석 10명 위임 33명 43명으로 성원 되었음을 이승석 의장에게 보고하고, 이승석 의장이 2023년 임시총회의 개회를 선언하다.

### □ 서기 및 기명날인 지명

- 의장이 상임이사를 서기로 추천하고 참가자의 동의를 구하여 서기로 지명하다.
- 의장이 기명날인으로 하정은, 문성환, 오단이를 추천하고 참가자 전원의 동의를 구하여 기명날인 회원으로 지명하다.

### □ 의순 채택

- 의장이 회의 진행을 요청하고 참석자 전원이 동의하여 제안된 의순대로 진행한다.

## 3. 안건논의

### □ 회의안건 채택

- 의장이 본 회의 안건 및 논의 순서를 안내하고 기타 안건 제안을 요청하다.
- 의장이 기타 안건 제안이 없는지 재차 확인한 후 안건 및 논의 순서를 원안대로 진행할 것에 동의를 구하고, 참가자 전원이 동의하다.

### □ 1호 안건 : 2023년 정기총회 회의록 승인의 건

- 의장이 1호 안건을 상정하고 상임이사가 2023년 정기총회 회의록을 간단히 보고하고, 이미 대표자 단독을 통해 공유하여 검토 절차를 진행한 바가 있음으로 설명하다.
- 의장이 회의록에 대한 수정보완 사항이 있는지 확인함에 참석자 전원이 이미 회의록을 검토한 것으로 통화할 것을 동의하다.
- 의장이 2023년 정기총회 회의록을 승인하다.

□ 2호 안건 : 2023년 제6기 임원 선출의 건

- 의장이 2호 안건을 상정하고 상임이사가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상임대표와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협의회 회장이 변경됨에 따라 이사 결원이 발생하였음을 설명하고, 이사 후보 전국협동조합협의회 박남수 상임대표와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협의회 박재성 회장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다.
- 의장이 후보의 이사 선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참석에게 묻고 참석자 전원이 동의하다.
- 의장이 신임 이사를 환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참석자 전원이 박수로 환영하다.

□ 기타 의견

- 의장이 추가로 논의하여야 하거나 공지할 사항이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다.
- 오단이 회원이 의결권 설명을 요청하여 상임이사가 16쪽에 있는 의결권을 설명하다.
- 오단이 회원이 추가로 의료사협이나 시민발전협의회 등 전국협에 통합된 경우 의결권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위원장 등 개인 자격으로 이사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등 보다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청하다.
- 의장이 이를 받아 차기 총회 전 검토하여 보다 명확히 정리할 것을 약속하다.

□ 총회 회의록

- 서기 하재찬이 총회 회의록을 읽고 참석자 전원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고 전원 동의하다.

□ 폐회 선언

- 의장이 참여 회원에게 감사를 표하며 정기총회 폐회를 선언하다.

2023년 5월 19일

서기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직인)



기명날인

하정은

(인/서명)

문성환

(인/서명)



오단이

(인/서명)



2023년  
감사보고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2024년 1월 5일 12:30 ~ 15:00
- 감 사 일: 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
- 감사범위: 수입 및 지출,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
- 감사내용: 활동보고 및 총준위 주요 평가, 통장내역과 금천출납부 등 회계자료

## [감사결과]

3년간의 코로나19 터널을 지나 숨을 고르기도 전에 사회적경제 정책 지우기와 6천3백억 예산 삭감이란 이상기후를 만났습니다. 어려움 속에 여러 주체 간 이해 충돌과 입장 차이로 적지 않은 혼란도 볼 수 있었지만, 사회적경제의 단단함도 느낄 수 있었던 23년 이었습니다. 이러한 소회와 함께 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요 활동과 결산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결산은 회계 규칙과 원칙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연대회의가 상임이사과 상임대표, 그리고 사무국장의 활동비를 고려할 때 년 6천만원(월5백만원 이상)의 회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치·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회비(3천6백6십만원)를 납부해 주셨고, 특별회비(2백만원)와 후원금 1천4백7십만원(행사 후원금 1천1백만원 및 전국협 지원금 250만원 제외)이 있어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공동 행정간사 인건비가 지출되지 않았고, 행사비에서 일부 남은 비용 등으로 상임이사로부터 차입한 1천5백원 중 5백만원을 상환할 수도 있었습니다.

연대회의 운영에 성실히 회비를 납부해 주시는 회원단체에 감사를 드리며, 큰 힘이 되어 주시는 후원자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올 해는 시민발전 주체의 후원을 특히 세겁니다. 또한 매년 사회적경제활동가대회를 위해 잊지 않고 후원해 주시는 신협중앙회와 지난 총회에서 광주 이정일 회장님의 제안으로 1일 1천원 후원을 하는 365후원자, 월 정기 후원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카페보네 로스터리 사업단>을 통해 협력후원을 해 주시고 계신 전주의 덕진자활센터(센터장 박준홍)에도 감사드리며, 다른 곳들과 확장된 시도를 검토해 볼 것을 제안드립니다.

결산 과정에서 상임이사, 상임대표와 부설연구소장 활동비 지급 누락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지급과 상임이사의 퇴직연금 가입도 바랍니다. 지급 누락 등의 문제는 사무국장 부재로 인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무국장이 빠른 시일 내에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무국장이 안정적으로 상근하기 위해선 현재 월평균 3백만원 정도의 회비 납부가 월 6백정도로 2배가 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요청드립니다.

23년 사업은 <2022 사회적경제 정체성 보고서>를 출판하고 제안된 공동행동을 핵심 사업으로 한 1차 <SE로운 공동행동>이 추진된 것과 하반기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

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활동이 가장 중요한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행동은 상반기 애써 활동한 흔적도 보이나 큰 성과가 있다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반기 예산 싸움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한계만이 아니라 다른 한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23년의 경험을 살려 잘 평가하여 멈추지 않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대위 활동은 해단식에서 정리한 바 그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공대위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취약계층과 우리 동료 <사람>을 지키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힌 연대회의 대표자 회의에 박수를 보내고, 이것이 우리 사회적경제의 정신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견지했으면 좋겠다는 강조의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가 약화되고 중심을 잃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적경제는 경제가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사회로 재창근 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연대회의 제7기는 지금까지의 사회적경제의 소통과 협력체계에 대한 연대와 협력의 관점은 넓히는 한편, 사업과 활동은 사회의 필요와 문제에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시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대회의의 출범선언문에서 밝히고 있는 자본 중심의 폭주하는 기관차를 멈춰 세우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사회의 필요와 문제를 자본이 아닌 사람중심이란 비영리 영역과 함께 힘을 키우고 연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체성 보고서에서 이야기하듯 사회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이렇기 위해선 유형과 부문을 넘어선 소셜미션과 업종을 중심으로 한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연대효능감과 시민체감도를 높이는 노력을 우리 모두 함께 기울이길 바랍니다.

연대회의가 한 발 앞서 바람 막이가 되어야 할 것과 한 발 뒤에서 응원할 때가 잘 정리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 위원회에서 해야 할 것인지, 새로운 협력 체계를 통해 할 것인지, 사무국이 중심이 되어 할 것인지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올해 앞당겨 정기총회가 이루어지는 것인 바람직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회원단체별로 총회가 준비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연대회의와 보다 충실히 소통되고 많은 것이 서로에게 제안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사회적경제와 사회가 단단해지고 담대해 지도록 하는 제7기 연대회의의 체계와 사업계획이 4월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봄을 앉아 기다리기 보다 모두 함께 일어나 봄을 마중하러 나갑시다!

2024년 1월 5일

감사: 이 현 배

# 2024년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의결권

## □ 정관에 따른 회원 구분

구분	정관상 자격 요건	승인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비고	
정회원	조직	지역/업종/유형/부문 등으로 네트워크와 개별 조직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음	이사회	有	有	有	기본적으로 (피)선거권과 발언권 모두를 가지나 회비·입회비 여부에 따라 달라짐.
	개인	사회적경제 기여도 및 기여 가능성 등을 고려	이사회	無	有	有	기본적으로 피선거권과 발언권 모두를 가지나 회비·입회비 여부에 따라 달라짐.
후원회원	조직	소정의 가입절차를 통해 확인	집행위	無	無	有	조직과 개인을 구분하지 않고, 월 1만원 이상으로 납부하면 됨.
	개인			無	無	有	

## □ 의결권 및 회비

구분	의결권			회비	비고	
	기초	광역	전국			
정회원	연합체		2	3	4	월 회비 10만원 이상 1차 조직으로서 연대회의 회원인 조직이 연합체 회원으로 통합될 경우 연합체는 납부하던 회비에 이 조직이 납부하던 회비의 30% 이상을 추가하여 납부해야 함
	조직	1차 조직*	0	0	0	월 회비 5만원 이상 연합체 소속 1차 조직은 의결권을 가질 수 없음. 단, 연합체 소속이 아닌 1차 조직과 동일회비(월 회비 5만원 이상)를 별도로 납부할 경우 별도 의결권을 가질 수 있으며, 월 회비 1개월치 이상의 입회비(2021년 현재 5만원 이상)를 별도로 납부할 경우 (피)선거권 없이 회원으로서 발언권을 가질 수 있음.
		미소속(개별 가입)	1	2	3	월 회비 5만원 이상 (피)선거권을 갖지 않으면서 회원으로서 발언권만 갖고자 할 경우 2개월치 이상의 월회비를 입회비(2021년 현재 5만원 이상)로 납부하면 됨
	개인		1		월 회비 2만원 이상	연대회의 위원회 위원장이거나 임원으로 추천/파견된 경우 납부하지 않음. 피선거권을 갖지 않으면서 회원으로서 발언권만 갖고자 할 경우 1개월치 이상의 월회비를 입회비(2021년 현재 2만원 이상)로 납부하면 됨
후원회원		0		1만원 이상	조직과 개인을 구분하지 않음	

\* 전국단위 또는 광역(시/도)이나 기초(시/군/구) 단위 협의체에 소속된 개별 조합 기업 등 법인을 의미함.

EX1) A협동조합이 전국협동조합협의회에 가입한 제주지역협동조합협의회에 가입한 경우

EX2) B사회적기업이 대구사회적경제가치연대에 가입한 동구사회적기업협의회에 가입한 경우

- 추가의결권 부여: 의결권을 가진 회원조직(개인회원 제외)의 경우 월회비 최하기준의 3배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고 추가의결권에 대하여 요구할 경우 공동대표자 회의를 통하여 부여할 수 있음.

□ 2024년 정기총회 회원별 의결권(49개 회원단체의 회비납부 현황)

23년 회비 납부 단체	37개 단체 / 75.5%	3년 간 회비를 1년 이상 납부한 단체 46개(93.9%) 단체임
3회 회비 납부 단체	37개 단체 / 75.5%	
2년 회비 납부 단체	4개 단체 / 8.2%	
1년 회비 납부단체	5개 단체 / 10.2%	

> 정기총회 성원: 39개 단체로 성원됨 \_ 참여단체 20개 + 위임단체 19개

2024년\_1월\_10일

- 회비기준: (연합체)월회비 10만원 이상, (단체)월회비 5만원 이상
- 특별회비: 1천만원 차입금 및 2천만원 정도의 적자 해소를 위해 50만원 납부 결의

연번	회원	구분	연합체 여부	21~22년 미납분		23년 회비납부	비 고 * 단위(만원)
				회비	특별회비		
계				1,380	1,100	3,800	
1	광주사회적경제연합회	지역	○	-	-	120	
2	강원사회적경제연대	지역	○	-	-	120	
3	대구사회적경제가치연대	지역	○	-	50	-	
4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지역	○	60	50	-	
5	인천사회적경제협의회	지역	○	60	50	-	
6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지역	○	-	50	-	23.1.2. 22년 회비 60만원 납부 월회비 5만원으로 환산
7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지역	○	-	50	60	
8	충남사회경제연대	지역	○	-	-	240	
9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	지역	○	-	50	-	23.3.24. 22년 회비 60만원 납부 월회비 5만원으로 환산
10	두레생협연합회	유형(생협)	○	-	-	120	
	아이쿱연합회	유형(생협)	○	-	-		22년 12월자로 탈퇴 의료사협으로 가입 의사 밝힘
11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	유형(생협)	○	60	-	120	
12	한살림연합	유형(생협)	○	-	-	360	
13	행복중심소비자생협연합회	유형(생협)	○	-	-	60	월회비 5만원으로 환산
14	임팩트얼라이언스	유형(부문)	○	-	-	120	
15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유형(부문)	○	-	50	200	250만원... 시민발전
16	한국자활기업협회	유형(부문)	○	-	-	120	
17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업종_돌봄	○	-	-	120	
18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업종_교육	○	-	-	60	월회비 5만원으로 환산
19	한국YMCA전국연맹	업종_NPO	○	*	*	*	활동가대회 지원금 300만원
20	경기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협의회	업종_지원	○	60	50	60	월회비 5만원으로 환산
21	지역능업네트워크협동조합연합회	업종_지원	○	-	-	120	23.1.15. 23년 회비 납부
22	지역자활센터플러스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업종_지원	○	-	-	120	

연번	회원	구분	연합체 여부	21~22년 미납분		23년 회비납부	비 고 * 단위(만원)
				회비	특별회비		
계				1,380	1,100	3,800	
23	통합지원기관전국협의회	업종_지원	○	-	-	120	
24	경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업종_지원		-	-	60	
25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업종_지원		-	50	120	
26	사단법인 상생나무	업종_지원		-	50	-	
27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업종_지원		-	50	-	
28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업종_지원		-	-	60	특별회비 50만원 추가 납부
29	(사협)충북사회적경제센터	업종_지원		-	50	60	충북사회적경제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업종_지원		-	50	-	탈퇴의사를 밝힌 상태임.
30	지역과소셜비즈	업종_지원		-	-	60	특별회비 50만원 추가 납부
31	커뮤니티와경제	업종_지원		-	-	60	
32	사회투자지원재단(재)	업종_연구		-	-	120	
33	새로운사회를위한연구원	업종_연구		120	50	-	
34	성공회대사회적기업연구센터	업종_연구		60	50	-	
35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업종_연구		-	50	60	
36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업종_연구		-	-	60	
37	경기제일신협	신협		-	-	-	납부예정
38	경동신협	신협		120	50	-	
39	단원신협	신협		-	50	120	
40	동작신협	신협		240	50	-	
41	서울행복신협(구 논골신협)	신협		120	50	-	
42	장안신협	신협		240	50	120	
43	주민신협	신협		-	-	120	24.1.11. 23년 회비 납부
44	전국주민협동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우리함께)	금융	○	-	-	120	
45	재단법인 밴드	금융		-	-	120	
46	사회연대은행(사)함께만드는세상	금융		-	-	120	특별회비 50만원 추가 납부
47	한국마이크로크레딧 신나는조합	금융		-	-	120	특별회비 50만원 추가 납부
48	함께일하는재단	금융		240	50	-	
49	사회적협동조합 띠띠	업종(IT)		-	-	60	
50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업종_의료	○				전국협 통합
51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	업종_상조	○				전국협 통합
52	전국학교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업종_교육	○				전국협 통합
53	시민발전이중협동조합연합회	업종_에너지	○				전국협 통합 * 810만원 후원 (250만원 전국협 후원금 포함)
54	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유형	○				전국협 통합

# 심의안건

- 1호 2023년 활동 보고
- 2호 2023년 결산 보고
- 3호 2024년 사업계획(안)
- 4호 2024년 사업예산(안)
- 5호 기타안건

# 심의안건 제1호 2023년 활동 보고

월별 주요 활용

위원회별 주요 활동

사무국 & 부설연구소 활동

## I. 월별 주요 활동

### □ 1월: 주요활동

- 2023 사회적경제신년회 진행(1월 17일)
- 2023 사회적경제 학습회 진행(1.14 ~ 2.25 / 매주 토요일 5회)
- 연대회의 총회 준비: 총회준비위원회 및 이사회 진행
- 공동행동 준비 모임: 공동행동 TFT 회의 및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협의
- 조직활동: 임팩트얼라이언스 사무국 미팅, 경기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워크숍 참석
- 연대활동  
: 시민사회연대회의 신년회 참석,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및 시민사회활성화네트워크 참석  
: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회장 미팅 및 국회토론회 참석
- 대한민국사회적경제박람회 지역 평가 진행
- 사회연대신탁 백서 제작: TFT 및 인터뷰 진행

### □ 2월: 주요활동

- 2023년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기총회 실시(2.24) \_ 공동행동 결의문
- 부설연구소 준비: 추진단 회의 및 간담회 진행
- 공동행동 준비 모임: 공동행동 TFT 회의 및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협의
- 조직활동: 한국의료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임팩트얼라이언스/전국주민협동연합회/사회적경제활성화네트워크/시민발전이중협동조합연합회/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강원도사회적경제연대 총회 참석, 사회혁신금융 미팅, 흡사랑 미팅, 사회적협동조합 '함께' 미팅, 지역신탁미팅,
- 연대활동  
: 시민사회 후원회원 기부금 대법원 판결 긴급간담회 및 시민사회활성화 위원회 참석  
: H-ESG 참석
- (지방)정부대응: 행정안전부 회의 참석,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이사회 참석,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이사회 참석, 대통령실 미팅,
- 사회연대신탁 백서 제작: TFT 및 인터뷰 진행

### □ 3월: 주요활동

- SE로운 공동행동 출발식(3.30)
- 부설연구소: 운영위원회

- 제도개선위원회 및 교육위원회 워크숍
- 조직활동: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행복중심생협/한국자활기업협회/광주사회적경제연합회/한살림연합/아이쿱생활소비자연합회/전국협동조합협의회/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 총회 참석, 성남시의회 사회적경제 포럼 참석, 사회적협동조합/너머' 미팅, 밴드 미팅, 청주에너지협동조합 총회 참석,
- 연대활동
  - : 시민사회활성화 위원회 및 비영리조직 경영전문성 강화 워크숍 참석
  - : H-ESG 참석 및 이로운넷 협력 활동을 위한 논의
- 공동행동 준비 모임: 공동행동 TFT 회의 및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협의
- 국회대응: 더불어민주당 전국 사회적경제위원장 역할 강화 활동(진선미 의원 간담회 및 김영배 의원 연계 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면담, 판로지원법 공청회 준비 및 참석 등 회의 모니터링,
- 제5회 대한민국사회적경제박람회 추진단 회의 및 자문회의 참석
- 사회연대실험 백서 제작: TFT 및 인터뷰 진행
- 사회적경제 정책 포럼 준비회의 참석

#### □ 4월: 주요활동

- 연대회의 임시총회 준비
- 정책기획위원회 워크숍
- 연대활동: 이로운넷 협력 활동을 위한 논의
- 공동행동 추진: 공동행동 TFT 회의, 충남사회연대경제 설명회, 세상만사 이사회 미팅,
- 제5회 대한민국사회적경제박람회 공동추진위원회 참석
- 사회연대실험 백서 제작: TFT 및 인터뷰 진행

#### □ 5월: 주요활동

- 연대회의 이사회 진행 및 임시총회(5월 19일) 진행
- 공동행동 준비 모임: 공동행동 TFT 회의, 경기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협의회 설명회,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설명회
- 사회적금융위원회 워크숍
- 조직활동: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교육 지원, 도봉구 쉼터장 미팅, 두레마을 미팅, 고려농조합 미팅,
- 연대활동
  - : 행복나래 대표 및 불교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미팅,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참석
  - : 윤석열 정부 정책 평가 토론회 참석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미팅
- 임팩트금융 전문가 양성과정 1차년도 정리 및 2차년도 준비(23년 6월 ~ 24년 5월)
- 국회대응: 신동근 기획재정위 간사 미팅, 강은미 의원 미팅,

- (지방)정부대응: 경기도사회적경제원 회의 참석,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회의 참석

□ 6월: 주요활동

- 공동행동 준비 모임: 공동행동 TFT 회의, 세상만사 이사회 참석, 광주사회적경제연합회 설명회
- 사회적경제플랫폼 구축 준비: 빠티 미팅
- 조직활동: 사회적경제활성화충북네트워크 포럼, 주민신탁 방문, 커뮤니티와경제 미팅, 사회적경제활성화네트워크 워크숍 참석, 전국주민협동연합회 한마당 참석,
- 연대활동  
: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미팅, 시민사회연대회의 후원행사 및 거버넌스센터 미팅
- 사회적경제 정책 포럼 진행(6.27)
- 임팩트금융 전문가 양성과정 2차년도 사업 진행: 사회적금융 포럼 진행(6. 30)
- (지방)정부대응: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회의 참석, 현실 속 기본소득 포럼 참석,
- 제5회 대한민국사회적경제박람회 공동추진위원회 참석 및 박람회 개최(6.30~7.2)

□ 7월: 주요활동

- 공동행동 준비 모임: 공동행동 TFT 회의,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미팅
- 연대활동  
: 시민사회활성화네트워크, 지역균형발전포럼 공동 주관 회의 참석(거버넌스센터)  
: ICA 회장(아르헨티나 대사관) 간담회 및 지방균형발전 국회포럼 참여  
: 더불어민주당 지방 의원 전국 순회 워크숍\_사회적경제 교육 진행(호남/충청)
- 국회대응: 정부예산 점검 및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진선미 의원 및 주요 위원회), 기본소득당 및 정의당 협력 활동

□ 8월: 주요활동

- 공동행동 준비 모임: 공동행동 TFT 회의, 세상만사 미팅 및 사회적경제활성화네트워크 회의, 광주사회적경제박람회 공동행동 부스 운영 및 설명회 진행
- 사회적경제플랫폼 구축 준비: 빠티 미팅
- 예산대응 활동: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면담
- 조직활동: 주민신탁 아우네쉽플스테이 개원식 참석, 한국자활기업협회 비전전략 수립 회의 참석, 경남 모두의경제 교육 지원,
- 연대활동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국회공청회 개최를 위한 협력 활동  
: 더불어민주당 지방 의원 전국 순회 워크숍\_사회적경제 교육 진행(영남/서울경기)  
: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국회토론회, 지방균형발전 국회포럼 지역혁신가 간담회 참석
- 연대회의 이사회: 총회준비위원회 및 공대위 대응 준비
- 국회대응: 정부예산 점검을 위한 주요 의원실 확인

□ 9월: 주요활동

- 예산대응 활동: 연대회의 대표자회의(공동대책위원회 제안) 및 <지역/업종·소셜미션/유형·부문> 등 협의를 통한 공동대응을 위한 활동 진행, 공대위 추진단 회의 진행,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국회토론회, 사회적경제 정책 국회토론회 진행(9.20),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회장 미팅
- 국회대응: 진선미&김영배&허영 의원 예산 대응 및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 주요 의원실 방문
- 조직활동: 한국YMCA연맹 방문, 사회투자지원재단 프로젝트 협력, 빠띠 & 밴드 협력 지원
- 연대활동  
: 제4차 지방분권과 거버넌스 개최(9.8~9)  
: 서울협동조합지원센터 10주년 컨퍼런스 참석, 솔라시 포럼 참석 및 사회적경제 안내
- (지방)정부대응: 경기도사회적경제원 개원식 및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회의 참석

□ 10월: 주요활동

- 예산대응 활동: <지역/업종·소셜미션/유형·부문> 등 협의를 통한 공동대응을 위한 활동 진행, 공대위 추진단 회의 및 (확대)실행위원회 진행,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10. 18) / 국회본청계단 4백여명 참석), 경남 도의회 방문,
- 국회대응: 환노위(한기협 중심 소통), 기재위/예결위/정당(공대위 중심 소통)
- 조직활동: 충북 사회적경제인의 날 참석, 한국자활기업협회 비전선포식 참석, 광주 사회적경제 별별포럼 참석, 전주 사회적경제 포럼 참석, 옥천기금 & 밴드 연계, 옥천사회적경제협의회 출범식 참석, 경남 사회적경제 포럼 참석, 친환경지원센터(두꺼비협동조합) 방문
- 사회적경제활동가대회 준비
- 연대활동  
: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아시아미래포럼 참석 및 이로운넷 창립 15주년 기념 포럼 참석  
: 예산삭감 9개 시민사회단체 대응 회의 참석
- (지방)정부대응: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회의 참석

□ 11월: 주요활동

- 사회적경제활동가대회 진행(11.16~17)
- 예산대응 활동: <지역/업종·소셜미션/유형·부문> 등 협의를 통한 공동대응을 위한 활동 진행, 공대위 추진단 회의 및 (확대)실행위원회 진행, 대전 사경 공동행동의 날 진행(11.21), 서면질의 및 민주당 협상안 압박, 예산결산위원회 방문 면담 집중 진행
- 국회대응: 환노위(공대위 대응으로 전환), 기재위/예결위/정당(공대위 중심 소통)
- 연대회의 총회 준비: 총준위 및 인사위원회 가동
- 연대활동  
: 예산삭감 9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참석 및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박주민) 면담  
: 신탁중앙회 방문(신탁중앙회 사회공헌재단 협력 사업 모색)
- 사회적경제 정책 포럼 진행(11. 8)

## □ 12월: 주요활동

- 예산대응 활동: 예산안 협상 진행과정 모니터링 및 공동대책위원회 보고회 진행(12.14)
- 국회대응: 환노위(공대위 대응으로 전환), 기재위/예결위/정당(공대위 중심 소통)
- 연대회의 총회 준비: 연대회의 이사회 진행
- 조직활동: 충북 사회적경제 포럼 참석, 전주 정책 포럼 참석, 완주 사회적경제 포럼 참석
- 연대활동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회의 협력 및 지연입법 과제 간담회 참석  
- 사회적경제기본법 외 시민사회 중요 법안 토론회 진행(12. 21)
- (지방)정부대응: 세종시 회의 참석,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회의 참석
- 임팩트금융 전문가 양성과정 3차년도 사업 준비

## II. 2023년 주요 활동

### □ SE로운공동행동

- ▶ 연대회의 주요활동으로서 계획을 수립한 것에 비하여 활동이나 성과가 미미하였음.
- 추진단 구성 및 주요 관계자 협력: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더센몰 등 각 주체의 활동계획과 연결하여 진행하고자 추진단을 구성하여 진행.
- 충남, 경기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협의회 및 경기도지역협동조합협의회, 광주, 대전, 세종,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등 설명회 진행
- 대전 공동행동 사무국 렛츠로 결정  
⇒ 한두레를 지역화폐 시스템에 탑재한 상태임. 렛츠 총회 후 집중 홍보 등을 진행할 예정임
- 한살림 등 논의를 촉진하는 역할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됨.
- 상반기 사무국 차원에서는 주어진 여건 속에서 나름 활동을 하였으나, 8월부터 예산 대응으로 모든 활동이 집중되어 활동하지 못 함.

### □ 공대위 출범 및 대응 일정

→ 공대위 해단식 관련 자료 참조

### □ 사회적경제 및 시민사회 활성화 활동

- 임팩트금융 아카데미의 스کیل업 심화과정 2년차 마감 → 3년차 진행 준비 중
- 사회적경제 & 시민사회단체 감사 대응: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연대 활동
- 시민사회활성화네트워크: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들이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입법을 중심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네트워크 회원활동 진행

-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시민사회연대회의 산하 위원회로서 시민사회 내부 소통과 연대 강화를 위한 활동을 하는 위원회 참여하고 있음.
- 장애인, 여성, 외국인노동자 등 예산 삭감된 영역과의 연대활동 진행
- <민생살림예산 패키지> 제안하여 민주당 박주민 수석부대표 면담 등 예산대응에 힘을 싣기도 함.
- 거버넌스센터 및 국가균형발전포럼 등과의 연대활동 진행
- 제도개선 과제 연대와 협력 진행: 21대 국회에서 제정해야할 시민사회 법안으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선정되어 12월 국회에서 토론회를 진행함.

## □ 국회 및 기본법 제정 대응

- 21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제도개선 과제를 시민사회 및 먹거리 쪽과 이종으로 협력 대응 중
- 시민사회연대회의: 국회토론회 진행 및 민주당 협의
  - \* 12월 21일 국회 토론회 진행
- 먹거리연대, 친환경급식연대, 농민기본소득 등과 국민의힘 포함 국회에 협상과 압박 진행 중
- ※ 사회적경제연대포럼 및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참여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음.

## □ 조직강화 및 현장 지원 활동

- <지역/업종·소셜미션/유형·부문> 차원의 다양한 행사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소통 진행
- 신년회 및 활동가대회 추진
- 공동행동과 공대위 중심 활동 진행

## □ 위원회 및 부설연구소 주요활동 평가와 향후 추진 방향

주요 활동 및 계획	
교육위원회	<p>□ 23년 활동 보고 및 평가</p> <p>○ 23년 교육위 활동</p> <p>1) 5차례 회의와 및 워크숍 진행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회의 : 23년 1월 18일</li> <li>- 2차 회의 : 23년 2월 6일</li> <li>- 3차 회의 : 23년 3월 24~25일 (워크숍) - 4개 TF팀 구성</li> <li>- 4차 회의 : 23년 5월 3일</li> <li>- 5차 회의 : 23년 12월 27일</li> </ul> <p>2) 교육위 4개 TF팀 구성 (교육위원 활동 재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교육위원회 참여단체 대상 교육사업(내부, 외부) 현황조사 (파트장: 김정음)</li> <li>② 진흥원 백서, 매뉴얼 등 스터디 (파트장: 박지연)</li> <li>③ 포럼 (파트장: 김윤미)</li> <li>④ 정체성 선언 보고서 교육, 기획, 실행 (파트장: 김은석--&gt; 신재걸)</li> </ul>

	<p>⑤ 2024 사회적경제 교육담당자 워크숍 준비</p> <p>○ 23년 교육위 활동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년과 비교할 때 회의 활동이 저조하였음. 5월 4차 회의 이후 12월까지 교육위원 소속 단체의 업무와 사경 예산 원상회복 투쟁 등으로 인하여 회의를 못함.</li> <li>- 4개 TF팀으로 교육위원을 편재하여 교육위원회 활동 활성화를 꾀했으나 TF팀 활동과 성과가 아직 외화되지 않고 있음.</li> <li>- 사회적경제 정체성위원회와 정체성선언 보고서에 근거한 다양한 교육 기획을 논의하였고, 교육위원회 교육기획팀의 논의 결과로 만들어진 정체성선언 교육 워크숍 기획안을 1차 구성한 것이 성과임.</li> </ul> <p>□ 24년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개 TF팀을 실질적인 활동 체제와 축소 통합하여 교육위원회 활동 활성화</li> <li>- 중간지원조직의 교육 기능 축소/약화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서 민간주체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교육에 대한 교육위원회 차원의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강사단 구성, 교육기획, 공동교안 작성 등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적극적인 대응</li> </ul> </li> </ul> <p>○ 2024년 사회적경제 교육담당자 워크숍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내용 - 교육 기획 /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내용 공급</li> <li>: 일시 및 장소 - 연대회의 임시총회 이후 ~ 사경박람회 전으로 추진</li> <li>: 참여자 조직 - 사회적경제 및 사경과 관련된 교육 단위로 확대 조직</li> </ul>
<p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사회적금융 사회적금융 위원회</p>	<p>□ 23년 활동 보고 및 평가</p> <p>○ 활동 방향 : 현안이나 이슈 대응 및 다양한 사회적금융 활동 모색 등을 위해 사회적금융 주체들이 정례적으로 소통하며 상호 이해를 위한 활동으로 전환</p> <p>○ 활동 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차 회의 : 23년 7월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현안 발굴, 사회적금융 운용 현황조사 및 흐름, 학습계획 및 역할분담</li> </ul> </li> <li>2) 2차 회의 : 23년 7월 2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진수원장 저서 &lt;우리가 몰랐던 진짜 금융 이야기&gt; 학습회 진행 사회적금융에 대한 토론 진행, 이후 학습자료 논의</li> </ul> </li> <li>3) 3차 회의 : 23년 9월 1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대위 회의참석(줌), 현안 논의 및 공동사업논의</li> </ul> </li> <li>4) 4차 회의 : 23년 10월 1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북사회적경제한마당 참석, 공동사업논의(기금 및 협업논의)</li> </ul> </li> <li>5) 5차 회의 : 23년 12월 1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년모임 및 이후 방향논의</li> </ul> </li> </ol> <p>○ 23년 금융위원회 활동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팩트금융 전문가양성과정 운영(밴드운영)</li> <li>- 현 정부 기조에서 사회적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사회적금융 중요성은 커지나 위원회 공동의제 과제 설정 어려움 및 참여 주체 별 현안이 다르게 존재하여 활동에 집중되지 못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위원회 내 역할별 금융에 대한 이해와 체감이 다르게 존재하여 공동이슈에 대한 발굴은 어려워보임. 사회적금융 지원별 소그룹으로 주요이슈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li> <li>- 위원회 참여가 활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위원회 내부토론이 가장 먼저 되어지고 이후 위원회 역할에 대한 전면조정이 필요함</li> </ul> <p>□ 24년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4년 정기회의 지속 개최</li> <li>- 임팩트금융 3년차 운영</li> <li>- 사회적금융 공급실태 조사 및 당면 문제에 대한 회원조직 현안 파악</li> <li>- 사회적기금 현황파악을 위한 업종별 대표 간담회(정책토론회: 사회적경제박람회)</li> </ul>																																	
정 책 기 획          위 원 회	<p>□ 23년 활동 보고 및 평가</p> <p>○ 활동방향: 사회적경제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경제를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분석하고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개입전략을 기획, 제안한다.</p> <p>○ 운영: 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정책생산과 여론형성을 위한 논의 진행</p> <table border="1" data-bbox="264 860 1414 1532"> <thead> <tr> <th>월</th> <th>내용</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1월</td> <td>• 22년 정책위 평가 및 23년 운영방안 • 제22대 총선대비 사회적경제 공통 공약 정책 개발 및 사회화결의</td> <td>1월 31일</td> </tr> <tr> <td>2월</td> <td>• 윤석열 정부 정책모니터링 추진 결의</td> <td>2월 24일</td> </tr> <tr> <td>3월</td> <td>• 윤석열 정부 사회적경제 예산 분석 • 사회적경제 총선 공약 발굴을 위한 지역순회 토론회 개최 결의</td> <td>3월 30일</td> </tr> <tr> <td>4월</td> <td>• 연대회의의 정치에 대한 가이드라인(방침) 개발 결의</td> <td>4월 26일</td> </tr> <tr> <td>5월</td> <td>• 정책모니터링 및 22대 총선 대응 방향에 대한 토론</td> <td>5월 24일</td> </tr> <tr> <td>6월</td> <td>• 23년 윤석열정부 사회적경제 정책모니터링 FGI</td> <td>6월 27일</td> </tr> <tr> <td>7월</td> <td>• 모니터링을 위한 자료는 국회 등을 통해 사전 협조 요청 • 6개 중앙부처의 사업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진행 결의</td> <td>7월 20일</td> </tr> <tr> <td>8월</td> <td>• 부처별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한 분석과 토론 진행</td> <td>8월 22일</td> </tr> <tr> <td>9월</td> <td>• 23년 윤석열정부 정책모니터링 결과 발표</td> <td>9월 22일</td> </tr> <tr> <td>12월</td> <td>• 정책위 평가 및 24년 방향 토론</td> <td>12월 5일</td> </tr> </tbody> </table> <p>○ 주요 추진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윤석열정부 정책모니터링 사업: 이번 사회적경제 정책모니터링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진행되는 첫 번째 평가라는데 의미가 있었으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소통'과 '정책지원', '사회적경제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li> </ul> <p>□ 24년 계획</p> <p>○ 윤석열정부 사회적경제 정책 모니터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예산 삭감 이후 정책변화가 주요부처와 지자체의 사업과 사회적경제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li> </ul> <p>○ 제22대 총선 사회적경제 공통 공약 정책 개발 및 사회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당 공약에 사회적경제 정책요구안이 반영되도록 활동</li> </ul>	월	내용	비고	1월	• 22년 정책위 평가 및 23년 운영방안 • 제22대 총선대비 사회적경제 공통 공약 정책 개발 및 사회화결의	1월 31일	2월	• 윤석열 정부 정책모니터링 추진 결의	2월 24일	3월	• 윤석열 정부 사회적경제 예산 분석 • 사회적경제 총선 공약 발굴을 위한 지역순회 토론회 개최 결의	3월 30일	4월	• 연대회의의 정치에 대한 가이드라인(방침) 개발 결의	4월 26일	5월	• 정책모니터링 및 22대 총선 대응 방향에 대한 토론	5월 24일	6월	• 23년 윤석열정부 사회적경제 정책모니터링 FGI	6월 27일	7월	• 모니터링을 위한 자료는 국회 등을 통해 사전 협조 요청 • 6개 중앙부처의 사업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진행 결의	7월 20일	8월	• 부처별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한 분석과 토론 진행	8월 22일	9월	• 23년 윤석열정부 정책모니터링 결과 발표	9월 22일	12월	• 정책위 평가 및 24년 방향 토론	12월 5일
월	내용	비고																																
1월	• 22년 정책위 평가 및 23년 운영방안 • 제22대 총선대비 사회적경제 공통 공약 정책 개발 및 사회화결의	1월 31일																																
2월	• 윤석열 정부 정책모니터링 추진 결의	2월 24일																																
3월	• 윤석열 정부 사회적경제 예산 분석 • 사회적경제 총선 공약 발굴을 위한 지역순회 토론회 개최 결의	3월 30일																																
4월	• 연대회의의 정치에 대한 가이드라인(방침) 개발 결의	4월 26일																																
5월	• 정책모니터링 및 22대 총선 대응 방향에 대한 토론	5월 24일																																
6월	• 23년 윤석열정부 사회적경제 정책모니터링 FGI	6월 27일																																
7월	• 모니터링을 위한 자료는 국회 등을 통해 사전 협조 요청 • 6개 중앙부처의 사업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진행 결의	7월 20일																																
8월	• 부처별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한 분석과 토론 진행	8월 22일																																
9월	• 23년 윤석열정부 정책모니터링 결과 발표	9월 22일																																
12월	• 정책위 평가 및 24년 방향 토론	12월 5일																																

	<p>○ 연대회의 정책대응력 및 지역정책 역량 제고를 위한 포럼 진행 - 제도를 넘어 실제로서의 사회적경제 구성을 위한 시민사회 등과의 포럼 추진</p>
<p>정 체 성  위 원 회</p>	<p>□ 23년 활동 보고 및 평가</p> <p>○ 활동 방향: 윤리위원회에서 '정체성위원회'로 변경하고, 사회적경제 정체성 논의의 확산 및 구체화에 힘쓰며, 지역과 부문 등에서의 정체성 논의와 보고서 제작을 촉진한다.</p> <p>○ 활동 내용</p> <p>1. 2023년 공부모임</p> <p>1) &lt;사회적경제의 조직, 경영론&gt; 5차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상호의존의 조직학 : 돌봄,</li> <li>- 2차 협동조합의 조직과 사업</li> <li>- 3차 사회적경제의 노동</li> <li>- 4차 협동적 경영론</li> <li>- 5차 사회적경제의 경영과 조직</li> </ul> <p>2)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적으로 20여명 참가, 회당 참여자 10명 내외로 2021년 학습회보다 저조</li> <li>- 내용의 완성도가 떨어져 정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논의해 갈 주제임을 확인함</li> </ul> <p>2. 위원회 회의</p> <p>1) 1차 회의 : 23년 4월 11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3년 사업계획 확인 : 정체성 공론화, 지역보고서 작성 지원, 사경 7원칙 마련 등</li> </ul> <p>2) 2차 회의 : 23년 7월 6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체성 공론화 지역 모집 논의, 조사연구 작업 확인, 학습회 제안</li> </ul> <p>3) 3차 회의 : 23년 8월 8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위원회와 협업 논의, 지역보고서 매뉴얼 검토, 웹자보 검토 확정,</li> <li>- 사회적경제 정치학 발제</li> </ul> <p>4) 4차 회의 : 23년 10월 13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체성 공론화사업 신청 지역(원주, 청주) 현황 검토</li> </ul> <p>5) 5차 회의 : 23년 11월 7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심층면접 결과 보고, 학습회 커리큘럼 방향</li> </ul> <p>6) 6차 회의 : 23년 12월 15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체성 공론화 관련 지역현황 공유, 학습회 목표 및 운영방안 논의</li> </ul> <p>7) 7차 회의 : 23년 12월 26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회 계획 및 커리큘럼 확정</li> </ul> <p>3. 공론화 관련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년부터 제주, 천안아산, 원주, 청주 등 워크숍, 세미나 등 진행</li> <li>- 정체성 공론화, 지역보고서와 관련하여 제주, 원주, 청주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li> <li>- 원주 지역의 비전 작업 지원 2024년에도 지속 예정</li> </ul> <p>4. 조사, 연구 작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소 설립으로 조사, 연구 작업 이관</li> <li>- 23년 학습회의 과제였던 &lt;사회적경제의 조직문화&gt; 사례모음 집필 작업은 진행 중</li> </ul> <p><b>○ 23년 정체성위원회 활동 평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경제 정체성과 관련된 주제를 중심으로 학습회 지속 운영</li> <li>- 공론화, 지역보고서 작성은 연대회의의 조직력, 집행력 강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는데, 예산문제 등 사회적경제 지역 상황과 관련하여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활동 방식에 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음</li> </ul> <p><b>□ 24년 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4년 학습회 주관</li> <li>○ 정체성 공론화, 지역보고서 작성 지원, 정체성을 중심으로 한 논의 장 마련과 지역 확산</li> <li>○ 정체성위원회 위원 교체 &amp; 세대 교체</li> </ul>														
<b>제도 개선 위원회</b>	<p><b>□ 23년 활동 보고 및 평가</b></p> <p><b>○ 활동방향 :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 사회적경제연대포럼, 중소기업벤처부 옴부즈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력으로 문제 해결</li> <li>- 시급성과 중요성 그리고 보편성을 기준으로 우선과제를 설정</li> <li>- 현재 입법 발의된(정부입법, 국회) 제도개선 과제 중심의 해결</li> <li>- 8월부터 지속적으로 국회 방문을 통해서 제도개선 활동 추진</li> <li>- 2023년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보고서 사회적경제위원회 공유</li> <li>- 제도개선 사안별 국회 상임위 의원 간담회 또는 발표회 추진</li> </ul> <p><b>○ 주요 활동</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례회의 개최 : 활동계획 수립, 진행상황 검토 등</li> <li>- 위원회 위원 : 15명</li> </ul> <table border="1" data-bbox="292 1279 1409 2038"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f9cb9c;"> <th style="text-align: center;">월</th> <th style="text-align: center;">주요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3.8.</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간담회</li> <li>- 사회적경제기본법 및 판로지원법 입법 대응</li> <li>- 2022년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10대 과제 제도개선 과제 현황</li> <li>- 중소기업벤처부 옴부즈만 사회적경제 기업 규제·애로사항</li> </ul>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24.</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차 정례회의</li> <li>- 위원회 구성과 23년도 운영 및 주요활동 그리고 일정 정리</li> </ul>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14.</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개선위원회 워크숍</li> <li>- 최근 4년간 취합된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이슈 리스트 (중복/유사 이슈 통합)정리</li> </ul>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20.</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개선위원회 임원회의: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제안보고서' 이슈 리스트 최종 정리</li> <li>- 4월14일 1차 정리 이슈리스트 2차 정리 (시급성과 중요성)</li> <li>-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이슈 우선순위 과제(123개 과제)와 중소기업 옴부즈만 87개 의제</li> </ul>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24.</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의당 강은미 의원 간담회: 제도개선 과제 공동협력 의제 제안</li> </ul>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7.24.</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례회의: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제안 보고서 (49개 이슈) 최종 결정</li> </ul> </td> </tr> </tbody> </table>	월	주요 내용	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간담회</li> <li>- 사회적경제기본법 및 판로지원법 입법 대응</li> <li>- 2022년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10대 과제 제도개선 과제 현황</li> <li>- 중소기업벤처부 옴부즈만 사회적경제 기업 규제·애로사항</li> </ul>	3.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차 정례회의</li> <li>- 위원회 구성과 23년도 운영 및 주요활동 그리고 일정 정리</li> </ul>	4.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개선위원회 워크숍</li> <li>- 최근 4년간 취합된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이슈 리스트 (중복/유사 이슈 통합)정리</li> </ul>	5.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개선위원회 임원회의: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제안보고서' 이슈 리스트 최종 정리</li> <li>- 4월14일 1차 정리 이슈리스트 2차 정리 (시급성과 중요성)</li> <li>-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이슈 우선순위 과제(123개 과제)와 중소기업 옴부즈만 87개 의제</li> </ul>	5.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의당 강은미 의원 간담회: 제도개선 과제 공동협력 의제 제안</li> </ul>	7.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례회의: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제안 보고서 (49개 이슈) 최종 결정</li> </ul>
월	주요 내용														
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간담회</li> <li>- 사회적경제기본법 및 판로지원법 입법 대응</li> <li>- 2022년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10대 과제 제도개선 과제 현황</li> <li>- 중소기업벤처부 옴부즈만 사회적경제 기업 규제·애로사항</li> </ul>														
3.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차 정례회의</li> <li>- 위원회 구성과 23년도 운영 및 주요활동 그리고 일정 정리</li> </ul>														
4.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개선위원회 워크숍</li> <li>- 최근 4년간 취합된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이슈 리스트 (중복/유사 이슈 통합)정리</li> </ul>														
5.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개선위원회 임원회의: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제안보고서' 이슈 리스트 최종 정리</li> <li>- 4월14일 1차 정리 이슈리스트 2차 정리 (시급성과 중요성)</li> <li>-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이슈 우선순위 과제(123개 과제)와 중소기업 옴부즈만 87개 의제</li> </ul>														
5.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의당 강은미 의원 간담회: 제도개선 과제 공동협력 의제 제안</li> </ul>														
7.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례회의: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제안 보고서 (49개 이슈) 최종 결정</li> </ul>														

9.7.	○ 국회 사회적경제연대포럼 간담회: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제안보고서] 및 7대 중점의제 제안
12.2.	○ 정례회의: 23년 활동 평가 및 24년 활동 방향 논의

○ 주요 추진사업

<p style="text-align: center;"><b>사회적경제 제도개선 제안 보고서</b></p> <p style="text-align: center;">2023.07.</p> <p style="text-align: center;"><b>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제도개선위원회</b></p> 	<p><b>목 차</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협동조합 의결권 행사 개선(서면투표 및 전자투표 가능)</li> <li>2. (사회적)협동조합 변경신고, 변경등기 개선</li> <li>3. 사회적협동조합 불분할 자산에 대한 세제지원</li> <li>4. 협동조합 농지소유 가능 개선</li> <li>5. 협동조합 총회·이사회 의사록 공증면제</li> <li>6. 협동조합 비분할적립금 공제</li> <li>7. 협동조합 조직변경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문제 개선</li> <li>8. 협동조합 조직변경 시 취득세 부과 문제</li> <li>9. 협동조합에 대한 대도시 등록면허세 과세세 문제 개선</li> <li>10. 상인조직에 기본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포함</li> <li>11. 안전교육법상 지원대상에 사회적협동조합 추가</li> <li>12. 경관·경정 사업 위탁단체에 협동조합 추가</li> <li>13. 역세권 개발사업 시행자에 협동조합 추가</li> <li>14. 완전자본잠식 법인 협동조합 조직변경 허용</li> <li>15. 일반협동조합연합회 우선출자 발행 허용</li> <li>16.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완화</li> <li>17. 사회적기업 공제기금의 법적 근거 마련</li> <li>1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li> <li>19. 신탁 타법인 출자 허용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li> <li>20. 마을기업육성지원법 제정</li> <li>21.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및 활성화에 대한 법률 제정</li> <li>22. 도시재생 사업의 시행자 유형에 협동조합 추가</li> <li>23.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외이사, 사외감사 허용</li> <li>24. 생협 설립인가 신청 시 출자금 완납 증명 역할별</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5. 자조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협동조합 공제사업</li> <li>26. (사회적)협동조합 임직원 경직금지 개선 필요</li> <li>27. 협동조합연구소 설립 요건 개선</li> <li>28. 에너지협동조합 법인세 과세 특례</li> <li>29. 에너지협동조합 출자금 배당소득세 및 이자소득세 감면 필요</li> <li>30. 에너지협동조합 출자금 변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문제</li> <li>31. 에너지협동조합 이용과 배당 포함 불합리</li> <li>32. 에너지협동조합 지역사회공헌에 사용비용 손급 처리 필요</li> <li>33. 협동조합 설립신고 후, 기한 내 등기하지 못한 경우 신고 무효화</li> <li>34. 전문건설협회 취득 시 사회적협동조합 포함</li> <li>35. 사회적협동조합 공인중개업 불가 개선</li> <li>36. 설립등기하지 않은 협동조합에 대한 변경신고 문제 개선</li> <li>37. (사회적)협동조합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고/변경등기 우선순위 결정</li> <li>38. 협동조합 출자금 부분환급 불가능 개선</li> <li>39. 협동조합 공동이사장 허용</li> <li>40. 빈집경비사업 시행자에 사회적협동조합 추가 요청</li> <li>41. 협동조합의 상호부조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 개정(소액대출, 공제 등)</li> <li>42.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내국법인 인정</li> <li>43. 비영리형 사회적경제 기업 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경비</li> <li>44. 택시협동조합 이슈 해결(운송수익금 전액관리 제도 및 운송비용 전가금지 제도)</li> <li>45.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대상 확대(회원조합, 양원수 등)</li> <li>46.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저소득층) 인가 요건 기준 완화</li> <li>47. 지역 중심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제도 신설</li> <li>48. 사회적기업 녹색구매지원센터 위탁 운영 자격 부여</li> <li>49. 협동조합연합회 회원(조합원) 확대</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협동조합 총회, 이사회 의사록 공증면제 →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제안 보고서 &lt;목차 5번&gt;</li> <li>2. 신용협동조합 타법인 출자 허용 →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제안 보고서 &lt;목차 19번&gt;</li> <li>3. 연합회 이슈 -연합회 회원에 연합회 가능 허용 →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제안 보고서 &lt;목차 49번&gt; -연합회 조합원이 아닌 자 임원 선출(사외이사, 사외감사) →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제안 보고서 &lt;목차 23번&gt; -연합회 공제사업 대상 확대(회원 조합에 조합원까지) →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제안 보고서 &lt;목차 25번&gt;</li> <li>4. 협동조합 총회 및 이사회 서면 및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서면, 전자투표제) →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제안 보고서 &lt;목차 1번&gt;</li> <li>5. 협동조합 배당소득세 감면(에너지협동조합 등)-지속가능성, 환경, 기후위기, 사회성 등 고려 →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제안 보고서 &lt;목차 29번&gt;</li> <li>6. 사회적협동조합 불분할 자산 →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제안 보고서 &lt;목차 3번&gt;</li> <li>7. 일반협동조합 비분할 적립금 →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제안 보고서 &lt;목차 6번&gt;</li> </ol>		

	<p>□ 24년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행정부)의 반 사회적경제 기조를 고려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에 집중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3년도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보고서]를 중심으로 제도개선에 집중</li> <li>- 위원회 역할: 이슈 리스트업 및 국회가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고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의제/이슈 선정과 의제/이슈별 상임위 협력 국회의원 선정</li> <li>· 후 개선을 위한 집중 활동 전개</li> </ul> </li> <li>- 제도개선 의제/이슈별 국회 상임위와 연계한 지역/업종을 대응 활동팀 구성 및 운영, 이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 활동에 집중</li> </ul> </li> <li>○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 조사 및 조례 제(개)정 활동 촉진</li> <li>○ 실천력 제고를 위한, 위원회 참여 단체 변화에 따른 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 방안 모색</li> </ul>
<p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부설 연구소</p> <p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부설 연구소</p>	<p>□ 23년 활동 보고 및 평가</p> <p>○ 23년 연구소 활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협동연구: (한국협동조합연구소)사회적경제 통계 작성 작업의 방법론을 정리하고, 시범사업으로 농협세부통계를 체계화하는 작업을 진행(농협경영계수요람 20년치, 농협연감 15년치의 파일화 및 통합작업 진행, 기본 매년 중요 통계 발표 보고서 작성, 실험과 새마을금고 연관 통계 검토) → 연구결과는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연구성과로 발표</li> <li>2) 협력연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두레생협연합회 혁신위 자문, 생협 발전방향 제시(직원 및 이사장, 실무책임자 모임 발표), 생협 공동사업(생협함께) 발전방향 제시</li> <li>② 서울협동조합협의회 조직발전 방안 연구 및 이사회 통과, 총회 자문 등 진행</li> </ol> </li> <li>3) 토론회 주제발표/토론 &amp; 주제발표형 강의를 통해 사회적경제 방향 제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현정부 사회적경제 여건 진단 및 발전방향(전북대, 한국마을연합, 전북농촌종합지원센터 연찬회, 경기사회적경제활성화네트워크, 광주사회적경제활성화네트워크,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전주시 사회적경제협의회 등 다수)</li> <li>② 위탁선거법(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제도) 및 농협사업구조개편 관련 국회 토론회(농협유통 조직개편 방향) 주제발표 및 토론</li> </ol> </li> <li>4) 자체연구: 사회적경제운동론 정립을 위한 연구작업 및 과정 내용 공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접근법 검토 및 테제정리(지속), 정세분석 방법론 및 시범분석 1차초초안 작성(24년 총회 자료 참고)</li> </ol> </li> <li>5) 연대회의 활동에 대한 내용적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공대위 방향 정립 토론 참여 및 각종 선언문, 결의문 초안 작성</li> <li>② 정부 예산안 분석 및 대응논리 개발 등</li> </ol> </li> </ol> <p>○ 23년 연구소 활동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사업 추진 제약 및 연구위원 선임, 연구원 채용 미진행 등 기반 조성이 지체되었음</li> <li>- 1인 운영 연구소로서 체계적이고 일상적인 연구활동을 전개하지 못함</li> <li>- 제한된 여건에서도 이후 연구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24년 연구소 운영을 위한 토대를 만들어 나갔음.</li> </ul> <p>□ 24년 계획</p> <p>○ <b>전제:</b> 최소한 현장 지향적 연구를 지향하는 석사급 연구원 0.5명과 함께 협력하면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공간적, 재정적 조치가 있어야 함.</p>

- 연구원 급여 : 1,750만원(연봉3,500×0.5) : 연대회의 사무국장 겸업
- 독립적 연구공간 확보(자료관리&회의실) : 10평(전세 4천만원 내외)

○ **협동연구**

- 연대회의 연구/교육 관련 회원조직과의 협동프로젝트 2건 이상 진행(인건비)
- 협동연구의 결과는 공동세미나를 통해 외부에 전파
- 예: 사경통계 초초안 발표 등

○ **협력연구**

- 업종별연합회의 발전방향을 위한 연구 진행 : 택시, 햇빛에너지, 의료사협, 전국적 사회적경제기업(연대성격 강한 조직:돌봄, 공제) 등
- 24년 기본방법론 정리 및 최소 1건 추진

○ **자체연구**

- 사회적경제운동론(초안) 정리 및 내부세미나를 통해 보완
- 연대회의연구소의 시각을 에세이 형식으로 정기 발표(최소 월 1회)

○ **조직화 및 현장/연대회의 회원 지원**

- 볼он티어강사/컨설턴트단 조직 및 운영(운영계획 및 사용설명서 별도 작성)
- 이들을 중심으로 연구위원 및 연구운영위 구성
- 현장 사회적경제 교육 수요에 실비 대응(최소 연간 50회 운영, 7월 중간 평가 후 목표 조정)

## 심의안건 제2호 2023년 결산 보고

### <후원 및 특이 사항>

- 특별회비(200만원): 지역과소셜비즈, 신나는조합, 살림, 사회연대은행
- 특별 후원금(1,010만원 + ∞)
  -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810만원(전국협동조합협의회 후원금 : 250만원 포함)
  - 사회투자지원재단: 100만원 / 주민신협: 100만원 + 활동가대회 이용료 할인
- 신년회 후원(300만원): 행복나래 300만원      □ 협력 후원<카페보네>: 5.7만원
- 활동가대회 후원(800만원): 신협중앙회 500만원 / 사회적경제활성화네트워크(한국YMCA연맹) 300만원
- 개인 및 정기 후원(496.5만원)

후원자	납부액	비고	후원자	납부액	비고
안인숙/안금숙	70만원	매월 2만원, 3만원/특별후원 10만원	하정은	10만원	매월 1만원(3월부터)
하재찬/이혜정	48만원	매월 2만원 2만원	엄승용	9만원	매월 1만원(4월부터)
신이찬희	24만원	매월 2만원	오수산나	36.5만원	매일 1천원
윤모린	46.5만원	매월 1만원(3월부터)/매일 1천원	이정일	36.5만원	매일 1천원
유유미	20만원	매월 2만원(3월부터)	지역농업	11만원	매월 1만원(김종환?)
윤형근	36.5만원	매일 1천원	윤봉란	36.5만원	매일 1천원
131000306376	12만원	매월 1만원			

※ 하재찬 차입금 1,500만원 -> 1,000만원 / 퇴직금 미적립액 약 450만원 -> 600만원

※ 공동무실(전국협동조합협의회,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연대회의) 보증금: 1,000만원

거래일시	거래종류	출금 (수수료포함)	입금	잔액	수수료	내용	메모	거래점
2022-09-16 15:08:55	기업병행	10,000,000원	0원	5,607,637원	0원	서울현금 전대차		신협

### □ 현금 자산 현황

no	계좌번호	조합명	잔액	구분	비고
1	137-008-449090	서울행복	6,566,992	입출금계좌	
2	131-021-612662	서울행복	0		
3	131-021-714658	서울행복	0	퇴직금	
4	131-021-714689	서울행복	1,196	예수금	전성욱 퇴직금(8,494,286원) 지급
5	135-000-135120	주민	3,739,532	공동대책위원회	※ 1월 3일 2,684원 이자 미 포함
6	137-008-594618	서울행복	715,773	후원금	
7	137-008-594663	서울행복	0	기타사업비	
8	137-009-369120	서울행복	290	KSD나눔재단사업	※ 이자
9	137-009-369182	서울행복	6,338,140	연구소활동비	2,840원 이자 포함
	사무국 현금잔액		7,283,961	5, 8, 9번 제외	1,000만원(차입금)/500만원 상환

□ 2023년 수입 및 지출 현황

수입		지출		비고	
회비	이월금	5,550,408	급여	7,200,000	270만원(사회보험료 224,260원) * 3월
	일반회비	35,450,000	사무국장 퇴직금 등	8,543,835	퇴직금(8,494,286원) + 운영이체(49,549원)
	특별회비	2,000,000	상임이사 활동비	16,480,670	150만원(사회보험료 140,030원) * 11월 / 1개월 & 19,330원 미납
	소계	37,450,000	상임대표 활동비	2,000,000	월 20만원 * 10월 / 1개월 미납
미납액	개인 및 정기	4,965,000	연구소장 활동비	1,200,000	월 20만원 * 6월 / 1개월 미납
	행사 후원금	11,000,000	소계	35,424,505	
	특별 후원금	10,100,000	운영비	2,319,648	교통비, 기장료, 명함 등 소모품비 등
	소계	25,700,000	회의비 및 위원회 활동비	1,544,370	집행위원회 포함 6개 위원회, 이사회 등 각종 회의 및 활동비
이자	42,160	홈페이지 제작비	2,200,000	빠티 믹스	
수입총계	69,107,568	부설연구소 활동비	6,600,000	3월 연구소장 활동비 포함 100만원 지급 / 1개월 미지급	
공동사무실 보증금 1천만원: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연대회의가 함께 하고 있음.		행사비 및 기타비	6,225,084	총회 및 신년회, 활동가대회 진행비, 감사패 등 제작비	
		전국협 지원금	2,500,000	시민발전이 전국협에 기부금처리를 하면서 후원하기 위하여 연대회를 거쳐 지원	
		차입금 상환	5,000,000	※ 2024년 1월 현재 1천만원의 차임금이 남음.	
		지출 총계	61,813,607		

□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수입 및 지출 현황

항목 공대위		비고
수입 총계	6,051,432	한국자활기업협회 포함 26개 단체, 그리고 주민신탁 이현배&최복희 포함 10명의 개인이 참여함 / ※ 1,432원 이자
공대위 출범식	1,150,000	현수막 등 제작비
감사선물비	270,000	57만원 중 30만원(안인숙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회장과 연대회의가 각 15만원 부담)
국회 공대위 보고회	165,000	공대위 활동기금 투적 단체 및 개인: 한살림연합, 경기제일신탁, 수원시이중협동조합연합회,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 (주)오티움, 강원도사회적경제연대, 경기도협동조합협의회, 상생연대, 사회적협동조합, (사)한국YWCA연합회, (사)상생나무, 이중협동조합연합회, 여수사경센터, 주민신용협동조합, 경기광주신탁, 한국자활기업협회, 발달장애지원이중협동조합, 영월군사회적경제협의회, 전국주민협동연합회, 광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한국YMCA전국연맹,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사회투자지원재단, 사회적협동조합, 사협 세상만사 / 김지인, 김대훈(전국협), 이기찬(수지신탁), 최복희(주민신탁), 이현배(주민신탁), 정기연(주민신탁이사), 박영균(장안신탁), 김재춘, 유유미(전국주민협동연합회), 조두휘(선린신탁),
활동비 및 교통비	376,200	
회의비	350,700	
지출총계	2,311,900	
남은 잔액	3,739,532	

# 심의안건 제3호 2024년 사업계획(안)

출범배경과 기초

2024년 사회적경제 연건 전망

2024년 사업계획서

## I. 출범배경과 기초

### □ 출범 배경 및 목적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구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2017년 2월 명칭변경)는 2011년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을 위해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협동조합기본법제정연대회의>와 2006년<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통합된 조직으로 2012년 11월 21일 출범하였음.

자본 중심의 경제에서 벗어나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경제가 되도록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과 조직 간 정보 공유 및 정부와의 효과적 소통, 현장 조직의 성공지원 및 각 분야 연합 조직 구축을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자본 중심 기관차를 멈추게 하여 아름다운 푸른 별 지구가 보전되는 등 더 나은 세상을 위함.

□ **사명:** 사회적경제 이념과 한국 사회에 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의 지향을 담은 태도와 철학으로 운영되는 당사자 전국 네트워크로서 회원간 정보공유와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 정관상 목적 및 주요사업

- 목적: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동과 연대를 통해 사회적경제 영역의 확대와 업종·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자본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경제, 지속가능한 사회건설 기여
- 주요사업: ① 사회적경제운동의 네트워크 및 연대. ② 주체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의 교육기회 확대 및 지원활동. ③ 정보의 소통과 축적 및 조사, 통계연구. ④ 정책연구 및 대변 활동 등 연대회의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원칙:** ① 연대회의의 창립 목적을 수행하고, 활동 역사를 이어감. ② 변화하는 외부환경과 성장 변화하는 사회적경제의 내부환경을 반영함. ③ 네트워크 방식을 기반으로 사업 대상과 실천 방식 설정. ④ 시대정신에 맞는 발전 방향 모색

□ **계승할 것:** ① 운동성·전문성. ② 회원에 의한 내용생산과 재정적 독립성. ③ 참여자의 권위 인정

□ **정체성과 규범:** ① 연대회의의 회원으로서의 정체성 선언과 경영·운영. ② 정체성에 근거한 조직 운영·경영 및 윤리규범 준수. ③ 협동과 연대의 사회적경제 원칙 준수. ④ 자조와 자립의 사회적경제 신조 준수

## II. 2024년 사회적경제 여건 전망

- 현 정부 출범 후 5년간 사회적경제에 비우호적 환경이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2024년도는 예산 삭감,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서 사회가치 폐지, 시도별 중간지원조직 폐지 등 본격적인 정책적 후퇴가 나타나고 있음.
- 다만, 4월 총선 결과에 따라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기조가 전환하느냐 아니면 향후 3년간 지속되느냐 결정될 것임. 두 경우를 다 염두에 두고 총선 (정책) 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임.
- 코로나19에서 벗어난 세계 경제는 2023년을 기점으로 성장률이 상승하고 있고, 과도한 유동성과 글로벌 공급망 혼란에 의해 촉발된 인플레이션도 3년간 큰 폭으로 상승한 후 안정세로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음.
- 반면 우리나라는 2023년 1.35%에 이어 올해도 1.8~2.0%의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GDP 성장률이 예상되어 **구조적 저성장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번지고 있음.
- 출생률 0.7로 인한 **저출생/노령화**의 속도가 높아지면서 사회 전반의 돌봄 체계의 재구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노인빈곤율 40% 상황에서 저비용의 포용적 돌봄 사회서비스 체계**를 만들기 위한 사회혁신의 필요성이 높아짐.
- 러-우크라 전쟁의 지속, 중동분쟁의 확산이 예상되는 가운데, 석유-천연가스의 에너지 비용이 불안할 전망이며,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라 미-중 분쟁의 귀추가 주목됨.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자본과 EU가 주도하는 **ESG는 계속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에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홀대에도 불구하고 **햇빛에너지협동조합 등 환경관련 사회적경제 조직의 필요성**은 계속 높아질 것임.
- **국내외의 정치경제적 불안정성은 사회의 포용적 역할을 더욱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의 역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임.
- 사회적경제 예산삭감 대응을 통해 1천억의 요구에 1/20에 해당하는 52억원의 증액이 이뤄졌음. 특히 협동조합 예산의 증액분에 대한 민간의 신속한 집행원칙과 방향 제시가 필요함. 또한 **지방정부 사회적경제 예산 및 사업에 대한 모범사례를 파악하여 전파함으로써 중앙정부 예산 축소의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마련해야 함.
- 행정자원이 축소된 상황에서도 사회적경제의 양·질적 발전/최소한의 후퇴를 목표로 민간의 자원을 최대한 융합하여,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연대활동의 방법과 사례들이 개발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임.**

## III. 2024년 사업 계획

### □ 사업 방향

- 사회적경제를 둘러싼 환경 변화에 사회적경제 다운 방식으로 사회적경제의 필요와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기존 제도로 불리던 사회적경제를 넘어 실체로서의 사회적경제로 확장해 나감
- 이를 위해 2024년 사회적경제 조직간 연대와 협동을 촉진하고 그 결과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높임

### □ 특별 사업 : 사회적경제에서 사회연대경제로

※ 사회연대경제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 추진목적:

- 사회적경제를 사회연대경제로 바꾸어 한국 사회적경제 운동의 정체성 확립 계기 마련

○ 추진이유

- 2013년, 유엔 사회연대경제 태스크포스(UNTFSSSE)가 발족한 이후 유엔은 공식 용어로 사회연대경제(Social and Solidarity Economy)를 사용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기존 사회적경제라는 명칭을 사회적경제에서 사회연대경제로 국제적 표준을 채택하면서 한국 사회적경제운동의 일신을 대내·외에 알림
- 이는 단지 사회적경제의 명칭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조직이 상호성, 민주성, 연대성을 기반으로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면서 동시에 지역사회의 잠재력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 사회적경제 정체성 구축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논의와 결의를 진행

○ 추진계획

- 2024년 총회를 통한 특별결의
- 2024년 상반기 사회적경제를 사회연대경제로 바꾸기 위한 TF 구성
- 2024년 7월 사회적경제 행사 시 공식선포

□ 사회적경제 공동행동

- **개념:** 사회적경제 공동행동은 사회적경제조직의 필요나 문제를 사회적경제 다운 방식으로 함께 해결해 나감으로써 조직간 연대감을 키우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함

○ 추진배경

- 사회적경제기업은 협동과 연대를 통해 꾸준히 사회적 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의 체감도는 높지 않은 상황임.
- 이에 시민들이 사회적경제를 보다 넓고 깊게 체감할 수 있도록 연대회의는 2023년 사회적경제를 위한 제1차 공동행동으로 ‘한두레 조합원이 되기’ 캠페인을 제안함.



- 다만 제1차 공동행동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자평하면서도 동시에 그 필요에 공감하

여 지난 공동행동을 교훈 삼아 2024년에는 사회적경제조직들의 구체적 필요를 파악하여 N개의 사회적경제 공동행동을 전개하고 자 함

### □ 연대회의 교육지원 사업

- 2024년 사회적경제 분야 예산은 2023년 1조 1,183억 원 대비 약 6,332억 원 삭감된 4,851억 5,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음. 지난 20년간 사회적경제 중간지원 체계가 급격하게 축소되면서 새로운 정책환경을 맞이하고 있음
- 이에 연대회의는 부설 연구소와 기존 연대회의 교육위원회 협력을 통해 사회적경제 현장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 컨설팅을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업을 통해 수행해 나가고 함

구분	추진내용				
추진 단계	준비		진행		종결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기획                      교육/컨설팅                      기획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준비                      일정/장소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홍보/모집                      대상 모집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사업진행                      진행/                      모니터링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종결                      평가                 </div>
추진 사업	강사단 공동 학습 진행 및 사회적경제운동 유튜브 강의/인터뷰 등 교육컨텐츠 활용 프로보노 강사/컨설턴트단 구성 및 실비로 현장 교육 활성화 지원				

### □ 조직 정비

- **위원회 재정비:** 변화된 상황에 조응하는 방식으로 공동행동 및 교육지원 사업이 가능하도록 위원회 활동 재구성
- **사무국 활성화:** 내부 예산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무국 상근 역량을 보완하여 집행력 보완

## 심의안건 4호 2024년 사업예산(안)

단위\_만원

항목	산출내역	금액	계	비고
인건비-직원급여(상임이사)	150만원 x 12개월	1,800		
인건비-직원급여(사무국장)	240만원 x 12개월	2,880		
인건비-퇴직금(하재찬)		150	<b>3,830</b>	연금보험 가입
운영비-사대보험(상임이사)	144,812원 x 12개월	174		
운영비-사대보험(사무국장)	231,698원 x 12개월	279		
운영비-수용비	10만원 x 12개월	120	<b>573</b>	
업무추진비-활동비	40만원 x 12개월	480		상임대표, 연구소장 활동비
업무추진비-교통비	25만원 x 12개월	300	<b>790</b>	
운영사업비-(임시)총회	60인 x 1만원 x 2회	100		
운영사업비-공동대표단	5인 x 1만원 x 3회	15		
운영사업비-이사회	15인 x 3회 x 1만원	45		
운영사업비-집행위	6인 x 12회 x 1만원	72		
운영사업비-정책위	1회 x 12개월 x 10만원	100		
운영사업비-교육위	1회 x 12개월 x 10만원	100		
운영사업비-금융위	1회 x 12개월 x 10만원	100		
운영사업비-제도개선위	1회 x 12개월 x 10만원	100		
운영사업비-정체성위	1회 x 12개월 x 10만원	100	<b>732</b>	
내부사업비-활동비	1인 x 12개월 x 10만원	100		
내부사업비-공동행동	1회 x 12개월 x 20만원	240		
내부사업비-국회/정부대응	1회 x 12개월 x 10만원	100		
내부사업비-활동가대회 등	2회	160	<b>600</b>	회원단체 및 유관기관의 협력/후원을 통해 사업추진
예비비		65	65	
차입금 상환			300	차입금 1,000만원
<b>지출총계</b>			<b>6,900</b>	
회비수입(월회비/연회비)		5,000		24년 회비: 3,980만원 22~23년 미납: 1,440만원
후원금-정기	45만원x12개월	600		23년 정기후원금 460만원
후원금-특별		800		23년 특별후원금 1,100만원
이월금		500		
<b>수입총계</b>			<b>6,900</b>	

## 심의안건 5호 기타 안건

### 요청 및 공지사항

- **2024 사회적경제 학습회 참여해 주세요. →→→**

주제: 사회적경제의 정치학

1월 15일까지 신청

1월 20일~2월 24일 매주 토요일 진행(설날 주간 제외)

학습회 전 목요일까지 1p 에세이 제출

참가비: 무료

- 총회준비위원회 회의에 **1번 초대**해 주세요.

총회 내용 설명과 활동제안을 드리고, 연대회의 세부 사업 제안도 받고자 합니다.

- 임시총회 일정<**4월 두 번째 목요일 오후 4시**>을 캘린더에 메모해 주세요.

연대회의 세부 사업계획과 제7기 임원구성을 확정지어야 합니다.

모두 함께 하는 자리에서 보다 활기차게 제7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 매년 1월 두 번째 목요일 오후 연대회의 정기**총회**

매년 4월 두 번째 목요일 오후 연대회의 임시**총회** 진행합니다.

- 연대회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세요.

연대회의를 활용한 공동행동을 기획 제안해 주세요.

필요한 (비상설) 위원회나 TFT, 동아리 등 모임을 제안해 주세요.

- 1월 중 **22대 총선 공약 개발**을 위한 논의 자리에 함께 해 주세요.



- 연대회의 **후원자**가 되어 주세요. 준비된 후원가입 신청서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 정기 후원: 매월 일정 금액 후원

- 365 후원: 1일 1천원

- ←←← **덕진지역자활센터 [덕진카페보네 로스터리]**와 같이 협력사업을 진행해 주세요.

빠띠믹스를 통해 새로 구축한 연대회의 홈페이지이자 사회적경제 플랫폼<<https://ksenet.mixon.io>>을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하겠습니다.

# 붙임자료 1

## 사단법인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관

개정 2021년 6월 4일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단체는 사단법인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라 한다)라 한다.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두며, 국내·국외의 필요한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및 사업)** 연대회의는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동과 연대를 통해 사회적경제 영역의 확대와 업종·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자본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경제, 지속가능한 사회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연대회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운동의 네트워크 및 연대
2. 주체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의 교육기회 확대 및 지원활동
3. 정보의 소통과 축적
4. 조사, 통계연구
5. 정책연구 및 대변 활동
6. 그 밖의 연대회의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연대회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2장 회원

**제4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① 연대회의의 회원은 조직회원과 개인회원,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정회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 지역 기반 네트워크 조직
2. 사회적경제 업종, 유형, 부문 및 목적 기반 네트워크 조직
3. 사회적경제 유관 시민사회조직 등 연대회의 이사회가 승인한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

③ 연대회의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 중에서 이사회 의결로서 후원회원을 둘 수 있다.

④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하는 자

**제5조(가입)** ① 연대회의에 가입하고자 하는 조직은 가입신청서를 이사회에 제출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이사회는 가입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자에게 가입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입 불허시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 ③ 가입 신청자는 가입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연대회의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 ④ 회원의 가입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6조(탈퇴)** ① 연대회의에 탈퇴하고자 하는 조직은 탈퇴신청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탈퇴 회원에 대한 효력은 탈퇴신청서 제출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 ③ 탈퇴 회원이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으며, 미납 회비가 있는 경우 탈퇴 신청서를 제출 한 달 이전까지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탈퇴 신청일이 20일 이후일 경우 탈퇴 신청한 달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자격정지 또는 제명)** ① 회원자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격이 정지된다.

1. 1년을 초과하여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기타 회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음이 현저하고 명백한 경우
-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된다.
1. 연대회의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끼친 경우
  2. 연대회의의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 ③ 회원의 자격정지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원의 제명은 총회 재적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회원의 자격정지 및 제명의 절차와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8조(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의결권 및 연대회의 주관의 모든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단, 후원회원은 발언권과 연대회의가 주관하는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권리만을 갖는다.

- ②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연대회의 주관의 모든 사업과 활동에 참여하고 연대회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 ③ 회비는 회원 조직의 규모, 재정상태 등에 따라 차등하여 책정할 수 있으며, 각 회원의 자발적 기여를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④ 회비의 결정, 납부, 반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둔다.

## 제3장 임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연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상임대표(이사장)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사 20인 이내
4. 감사 2인 이내

**제10조(임원의 선출)**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②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③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3조(상임이사)**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상임대표(이사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상임대표는 총회 및 이사회, 공동대표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공동대표는 공동대표회의에 참여하거나 업무를 분장하여 상시적으로 연대회의를 대표한다.

③ 상임이사는 이사회 및 공동대표회의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 1. 사업 기획 . 집행
- 2. 사무 업무 총괄
- 3. 대외 업무 및 연대활동 수행
- 4. 이사회 및 공동대표회의로부터 위임 받은 역할 수행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연대회의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 1. 연대회의의 회계 및 업무에 관한 감사
- 2. 제1호에 따른 감사결과의 총회 또는 이사회 보고
- 3. 제2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4. 그 밖에 연대회의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임원의 처우)** 연대회의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않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단, 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장 총회

**제17조(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최고의결기구로 정회원의 대표로 구성하고, 상임대표가 의장이 된다.

**제18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개최하며,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1.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④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대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제명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회비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6. 사업실적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7.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해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0조(총회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17조 제1호 및 제2호, 제4호 중 회원의 제명에 관하여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은 회원이 속한 단체의 성원에게 권한을 위임해 대리출석 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단, 표결의 결과가 가부동수인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긴급을 요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우편, 전자메일 등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되, 그 의결방법은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한다. 단, 서면으로 의결을 한 경우 차기 회의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⑤ 의결권은 회원의 조직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한다. 의결권의 수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제5장 이사회

**제21조(이사의 구성)** ① 이사회는 상임대표, 공동대표,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상임대표로 한다.

**제22조(이사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4개월에 1회 개최하며,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1.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이사회 의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3.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제23조(이사회 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2. 기본재산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사항
4. 제규정 제.개정
5. 이사회 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각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각 위원회 의 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
8. 사무국(주사무소) 및 부설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10. 기타 이사회 의 의장이 부의한 사항
11. 기타 법령 또는 이 정관에 의해 이사회 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4조(이사회 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긴급을 요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되, 그 의결방법은 제1항 및 제3항과 같이 한다.

③ 의장은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단 표결의 결과가 가부동수인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6장 기타 조직

**제25조(기구 의 종류)** 연대회의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총회
2. 감사
3. 이사회
4. 공동대표회의
5. 집행위원회
6. 위원회
7. 사무국

**제26조(공동대표회의의 구성 및 의결사항)** ① 공동대표는 이사회에서 이사 중에 선출한다.

② 공동대표회의는 상임대표, 상임이사, 공동대표로 선출된 이사로 구성한다.

③ 공동대표회의 의장은 상임대표로 한다.

④ 공동대표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2. 긴급을 요하는 정책 및 연대협력 사항
3. 기타 상임대표가 부의한 사항

**제27조(위원회와 집행위원회)** ①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대회의 산하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

② 집행위원회는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제28조(사무국)** ① 상임대표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⑤ 사무국은 연대회의 각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 회람 후 사무국에 비치한다.

## 제7장 재산과 회계

**제29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0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1조(수입금)** ①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총당한다.

② 홈페이지([www.ksenet.org](http://www.ksenet.org))를 통해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32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4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 제8장 보칙

**제37조(정관변경)** 연대회의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다.

**제38조(해산 및 합병)** 연대회의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9조(잔여재산의 귀속)** 연대회의가 해산하는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대회의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0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 붙임자료 2

## 2024년 사회적경제 여건 전망과 활동 방향

### □ 여건 전망 및 활동방향 구상을 위한 관점(요약)<sup>1)</sup>

#### ○ 사회적경제운동과 사회적경제조직 운영

- 전체 사회적경제의 활동방향을 의식적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조직 운영과 사회적경제 운동을 개념적으로 분리해야 함.

(사회적경제 운동의 미래를 전망하려면 사업, 운동, 부문이라는 3가지 차원에서 동시에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여기서 사업이란 사회적경제운동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출현하고 성장한 사회적경제기업의 구체적 비즈니스를 말하며, 운동이란 특정한 목적을 이루고자 함께 모인 사람들의 사회적경제 운동을 의미하며, 부문이란 사회적운동이 자본과 국가와는 다른 부문이라는 의미라고 하겠다. 사회적경제 운동이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려면 개별기업의 사업이 가지는 미션과 비전을 합쳐 질적으로 다른 부문 운동으로서 사회적경제 운동이 가지는 미션과 비전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 사회적경제운동은 사회적경제 주체 전체의 공동의 활동을 기본단위로 삼아,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식적인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이는 사회경제문제를 사업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본 단위로서 사회적경제기업을 운영하는 것과 다른 집합적 특징을 가짐.
- 사회적경제조직의 운영은 그 자체로도 사회운동의 범위에 들어감. 특히 대규모 소비자협동조합의 운영이나 전국적 농업협동조합연합회의 운영은 다수의 소비자조합원 혹은 농민조합원을 적극적으로 동원할 경우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
- 이런 점에서 사회적경제운동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운영은 교집합을 가질 수 있지만, 운영이 주로 개별 조직단위의 사회경제문제 해결에 주목하는 것이라면 사회적경제운동은 사회적경제생태계 전체의 발전을 통한 전체 사회가 더 나은 사회로 변화되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는 운동이며, 이 운영의 결과를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의 운영이 더욱 쉽고, 활성화되도록 기여하는 운동임.

#### ○ 여건 전망의 목표와 방법론

##### □ 여건 전망의 목표

- 일반적인 트렌드 분석과 달리 사회적경제의 여건 분석은 사회적경제의 목표인 사회경제 문제의 발생의 원인과 흐름을 정리함으로써 사회적경제운동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임.
- 사회경제 문제가 발생할 때 대부분은 취약계층과 서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됨. 따라서 사회경제적 커다란 변화를 보면서 특히 취약계층과 서민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함. 평균이 아니라 중위 소득 이하 서민의 현실, 노인과 유소년, 여성 등 약자들의 삶의 흐름, 도시가 아니라 주변부의 통계 등이 더 많이 분석되고 정리되어야 함.

1) 이 장은 사회적경제운동론의 초안적 테제를 모은 것임.

## □ 여건 전망 방법론

- 사회적경제생태계 요인별로 주체의 자원/역량을 진단하고, 활동의 대상인 객체적 여건을 확인함.(2019년 지역사회적경제생태계 연구 참고)
- 여건의 공간적 범위는 세계/한국/지역 순으로 하고, 분석 영역은 1)경제 2)정치 3)사회로 하되, 각 영역은 다시 세부적으로 구분할 수 있음.
  - 1) 경제 여건은 1-1)전체 전망 및 경제정책, 1-2))주도적 기업의 동향, 1-3)서민경제의 애로사항으로 나눠서 분석함.
  - 2) 정책제도 여건은 2-1)중요 정치 일정과 영향, 2-2)사회적경제 정책 및 예산, 2-3)사회적경제 및 민간의 흐름으로 나눠서 분석함.
  - 3) 사회 여건은 3-1)식, 3-2)주, 3-3)醫(보건의료돌봄), 3-4)기타로 나눠서 분석함.
- 중기 상황에 대한 파악을 기본으로 하고, 연도별 구체적 상황을 확인함.
- 각 요인별 상관관계를 논리적으로 파악하며, 가급적 양적 수치들로 설명함.

## ○ 활동방향 수립 방법론

- 주체란 공동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범위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비전 및 공동활동에 대한 동의 정도에 따라 2~3단계로 분류할 수 있음.
- 주체의 활동방향은 주체들의 (양적)확대 및 (질적)영향력의 강화라는 목표에 맞춰 정렬되어야 함. 이때 주체를 확대하기 위해 집중 연대의 대상에 대해서 관계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고 정할 수 있음.
- 사경의 활동방향은 1)사업(라인기능), 2)정책/제도, 3)조직화(스텝기능)의 4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음.
- 사경의 활동방향과 그에 따른 세부적인 활동들은 최대한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효과성을 극대화함

## □ 중장기 흐름에 대한 이해

### ○ 경제 여건

- 우리는 대략 250년 전 출현한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살아왔고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인류의 삶을 빠르게 변화시켜왔음
-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였고, 산업혁명 이후 인류의 삶은 크게 달라졌음. 그러나 인류의 생활수준이 과거에 비해 100배 나아졌다고 해서 인류의 행복이 100배 나아진 것은 아니고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현재 불평등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음.
- 한편 시장사회의 출현과 1950년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로 특징되는 소비자본주의가 확산된 이후에는 지구의 생태위기가 심각해지고 있고, 최근 코로나 19에 대응 차원에서 진행된 대규모 재정투입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급격한 물가상승(인플레이션)을 경험하였음.
- 이처럼 물가와 이자가 가파르게 오르면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사회 취약계층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임.

- 이에 국가는 전체선이 아니라 공동선의 관점에서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와 불평등, 지역소멸, 기후위기 같은 사회문제 해결에 나서야 함.
- 현 정부의 대응과 달리 국제사회는 사회연대경제를 우리 시대가 처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자로 생각하고 있음
- 사회적경제는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전망을 포기하지 않으며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야기한 불평등, 생태위기에 대해 보다 적극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음

○ 정책제도 여건

- 지난 20년간 정부의 정책 지원과 자체 노력을 통해 사회적경제는 꾸준히 성장해왔음.
-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그림 1>과 같은 구조에서 수립·시행되고 있음

<그림 1> 사회적경제 정책 전달 체계



출처 : '한국의 사회적경제', 한국 사회적기업진흥원(2019).

- 그림이 시사하는 바는 사회적경제가 이미 국가와 시장에서 담당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경제적인 필요에 대응해온 것에 대해 정부에서도 그 역할을 이해하고 정책의 주요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실제 문재인 정부의 경우 사회적경제를 국정 100대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해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을 16개 부처에서 56가지 사업으로 추진하였음
- 한편, 정책을 수립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중간지원조직은 2019년 8월 기준으로 30개 시도, 170개 시군구에서 사회적경제 조례를 제정해 사회적경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76개 시도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정책에서 사회적경제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음.
- ※ 120대 국정과제에서 사회적경제가 사라지고 사회적경제 관련 주요부처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으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회적가치 항목이 사라짐.
- 윤석열 정부 등장이후 사회적경제가 정부정책에서 사라진 것에 대해 사회적경제 진영의 일부가 지난 대선 시기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행동 때문이라는 분석

이 있으나 근본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기  
 조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 다만 주목할 것은 과거 사회적경제 내 논쟁이 정부정책의 과도함이 야기하는 문제(제도적 동형화)에 대한 것이었다면 윤석열 정부의 등장 이후 사회적경제의 정책축소(예산삭감)과정을 복기해 보면 정부 정책의 과도함이 아니라 과소가 문제가 되었고 작아진 자원의 둘러싼 내부의 이견이 표출되어 논의를 더 복잡하게 하고 있음

○ 사회 여건

- 사회란 개인들이 특정한 목적이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결성한 것으로 인류와 함께 끊임없이 변화해 왔음.
- 사회적경제 운동은 결국 인간사회의 실제적 경제활동을 회복시켜 인간이 지금보다 더 자유로운 생활세계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연대회의에서 사회 또는 사회문제를 분석하는 이유는 우리의 활동을 통해 더 나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할 것임
- 이때 한 사회가 처한 사회문제란 많은 사람이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비정상이라고 ‘인식’하는 사회현상을 말하며 사회문제는 인간들의 집합적 실천을 통해 해결되어 왔음.
- 오늘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사회적경제가 해야 할 일을 찾는 과정이기도 함.

우리시대의 사회문제 (사회적경제정책체성 보고서 中)	
1) 갈등의 심화와 인간 존중의 후퇴	2) 유대의 해체와 파편화
3) 사회적 격차 심화	4) 지방 소멸과 수도권 일극화
5) 돌봄의 위기	6) 기후위기와 생태계 변화
7) 과학기술이 초래하는 삶의 위기	

□ 사회적경제 주체의 흐름

○ 기존 활동의 평가

- 연대회의는 정체성 보고서 작업을 통해 한국 사회적경제 운동이 지난 100년 동안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사는 세상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키워왔다고 함.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1,713	1,877	2,122	2,435	2,777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10,640	12,540	14,550	16,869	19,429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1,377	1,442	1,514	1,556	1,652
보건복지부 자활기업	1,186	1,092	1,211	1,176	1,062
합계	14,916	16,951 (13.6% ↑)	19,397 (14.4% ↑)	22,036 (13.6% ↑)	24,920 (13.8% ↑)

출처: 사회적경제전문위원회(2021년 5월 20일)

- 동시에 사회적경제 운동은 누구보다 근본적으로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혁신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런 활동이 제도로 인정받는 과정을 지나 사회적경제 운동은 부문, 업종, 유형, 지역을 넘

어 확장하면서 국가와 시장 사이에서 사회적경제 부문의 역할을 확고히 하고 있다고 평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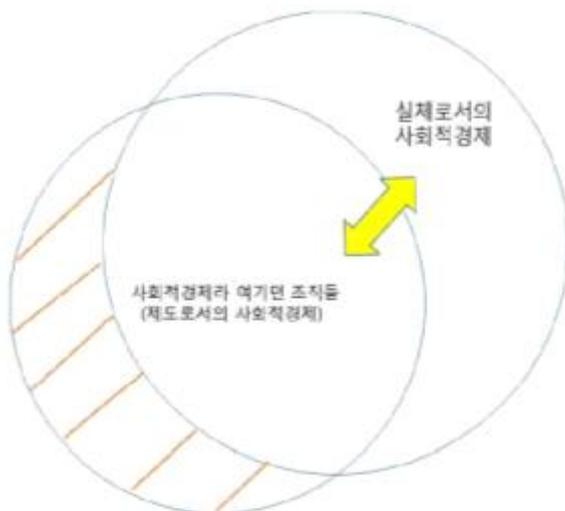
- 실패는 있었지만 사회적경제 운동은 지난 100년 동안 협동하려는 인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해 왔음.
- 구체적으로 한국의 사회적경제운동은 시민의 삶의 가까이에서 혁신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 시에도 시장의 실패를 극복하는 사회개혁의 주체가 되어왔음.

### ○ 역할

-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행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무엇으로 인식되어 왔음.
- 이런 생각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역할을 매우 좁게 해석하는 것으로, 사회적경제가 가진 본래의 의미를 사회 속에서 온전히 실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음.
-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지난 활동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창출이나 단순히 사회서비스를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 국가와 시장에 의해서 충족되지 못하는 다양한 시민사회의 필요에 대응하는 거시적 혁신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 ○ 중기 과제

- 만약 한국의 사회적경제 운동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다면 부는 바람이 순풍인지 역풍인지 알기 어렵듯이 사회적경제 운동이 지금보다 나아지면 무엇보다 사회적경제 운동의 미션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함.
-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사회적경제 운동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서비스를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 국가와 시장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다양한 시민사회의 필요에 대응해 사회에 배태된 경제 기능(본래 시장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을 회복하도록 만드는 거시적 혁신자로서의 미션을 가져야 함.
-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는 불평등, 양극화, 기후위기, 지역 소멸과 같은 우리 사회가 처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혁신자가 되어야 함



- 제도를 넘어 실체로서의 사회적경제로 연대회의를 재구성
  - 사회적경제는 제도로서의 사회적경제와 그것을 뛰어넘는 실체로서의 사회적경제로 존재함.

실체로서의 사회적경제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며 제도화된 사회적경제가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실제 실체로서의 사회적경제를 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지도와 체감도 높아질 수 있고 이를 위한 한국 사회적경제가 가지는 잠재력은 작지 않음. 따라서 아래와 같은 과제를 정하고 중장기적으로 실행해야 함

- **첫째, 사회적경제의 정체성 논의를 지속해야 함**

외부의 질문과 공격에 대한 방어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 운동의 풍부한 잠재력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적경제가 무엇인지 더 풍부하고 깊이 있게 연구되고, 모두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야 함.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소유할 수 없으므로 비록 그것이 어설피고 비록 잠정적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언어로 우리를 정의하고 우리가 가진 잠재력을 사회와 함께하려는 노력을 멈출 수는 없음.

- **둘째, 사회적경제의 협동과 연대는 지금보다 깊고 풍부해져야 함**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더욱 조밀한 네트워크 구조 위에서 업종별로 조직되면 사회적경제 전체의 역량이 높아질 것임. 이는 다양한 네트워크 위에서 각자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비해 더 높은 성과를 만들고 더 지속해서 사회적 필요에 대응하며 변화하는 미래의 환경에서 더욱 능동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임.

한편, 사회적경제 운동은 시민사회단체, 주민자치운동 등 지역의 사회적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지원해야 함. 사회적경제기업들의 활동이 풍부해지면 사회적경제 운동이 발전하고 발전된 사회적경제기업들은 다른 사회적 관계와 활동이 지속되도록 도와주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음.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는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상호 대등하며 실질적 책임과 권한을 부여를 받게 될 것임.

- **셋째,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실제사례가 출현해야 함**

사회적경제운동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추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함.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연속적으로 이뤄질 때 사회적경제 운동이 성장하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임.

## □ 2024년 여건 전망

### ○ 경제 여건 전망

#### □ 세계경제 전망

- 2023년보다 낮은 2.8%(-0.2%p) 정도 성장률 예측 : 미국 1.5, 유로 1.1, 일본 1.0, 중국 4.5, 아세안 4.6(이상 KIEP)
- 세계교역성장률은 23년 1.7 → 24년 3.5%로 증대, 서비스시장 중심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임(여전히 상품시장은 불안)
- 중국 고성장 미실현 상황 지속, 미중갈등 완화 예상(미 대선으로 리스크있음)
- 지난 3년간 원자재(가스, 석유) 및 공급망 불안으로 야기된 인플레이션 진정 전망 : 2% 내외 (하지만 이미 진행된 인플레이션의 결과로 서민의 삶의 질은 하락)

- 공급망리스크는 점차 완화, 하지만 여전히 원자재발 인플레이 리스크는 존재하고 있음.
- 미국 인플레이율 감소 및 경기활성화 하락세 전망으로 24 하반기 금리인하 가능성(최근 정보는 5월 전후로 1차, 최대 3차까지 0.25%p씩 감소 전망.(한미 금리차 2%를 감안하면 미금리 변동에 따른 한국금리변동 영향은 미미할 것)
- 중동 전쟁 확산은 석유 가격 상승 및 구미 경제 악영향(난민, 테러 등)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중요 세계경제 관련 트렌드는 한국경제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것임.
- AI용 반도체 산업에서 하이닉스 빠른 대응, 삼성의 추적 개발 등으로 수출 확대 예상. 2024년 수출 여건은 23년보다 좋아질 것으로 보임
- 중국 경제 상승 저하 및 반한 감정으로 국내 수출 활성화 제약은 계속될 것임.
- 석유가격은 하락하고 있으나, 천연가스의 고공행진은 여전히 한국 무역수지 개선에 저해요인이 될 것임.
- 미국의 중국 견제에 따른 대체 효과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가 중기적 한국경제에 미치는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임

#### ○ 한국경제 전망

- 상품수출이 주도하는 국내총생산의 호조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임.
- 소비자 인플레이션도 2.4% 수준으로 진정될 것으로 보이나, 공공요금(전기, 가스)의 급격한 상승으로 서민들의 인플레이션 체감도는 훨씬 높을 것으로 보임. 특히 공공요금발 인플레이션이 전망됨(생활물가지수 및 외식 등)
- 국회 중요 경제 지표 중기예측(2023. 10)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실질국내총생산(RGDP)	2.6	1.1	2.0	3.0	2.6	2.3
최종소비	4.1	2.2	2.2	2.3	2.1	2.1
민간소비	4.1	2.4	2.2	2.2	2.1	2.1
정부소비	4.0	1.9	2.2	2.4	2.2	2.0
총고정투자	-0.5	1.4	2.4	3.5	3.1	3.0
민간투자	0.4	1.5	2.6	4.0	3.4	3.3
정부투자	-5.1	0.9	1.0	0.7	1.4	1.4
총수출	3.4	0.3	7.0	6.6	6.3	5.9
총수입	3.5	2.2	7.5	5.6	5.7	5.9
경상수지(억달러)	298	280	360	430	500	570
상품수출(통관)	6.1	-9.6	7.2	7.1	7.1	7.1
상품수입(통관)	18.9	-10.5	5.7	6.4	6.5	6.6
GDP디플레이터	1.3	1.1	2.2	2	2.2	2.1
소비자물가	5.1	3.4	2.4	2.2	2.2	2.1

#### ○ 정책제도 여건 전망

- 중요 정치일정 : 22대 총선

- 4월 10일 22대 총선 결과에 따라 향후 정국에 큰 영향을 보일 것임.
- 총선에서 야당이 큰 폭으로 이긴다면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민생경제 살리기에 대한 국민적 여론에 묻혀 완화되거나, 민생경제 활성화 정책 속에서 사회적경제 정책이 다시 증가할 수 있을 것임
- 반면 여당이 이긴다면 사회적경제에 대한 압박과 사회경제문제는 심화될 것으로 보임
- 현재까지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야당에게 유리한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적 문제, 여야의 혁신경쟁, 선거제도를 둘러싼 야당 내부의 갈등 등의 영향으로 신중하게 관찰해야 함
- 야당 측에서 보는 총선 승리의 기준에 대해 최소 범진보 야당 과반, 중간 민주당 1당, 최대 범진보 180석 이상 당선 중 하나가 될 것이며, 여당 측에서는 최소 120석 확보, 중간 국민의힘 1당, 최대 과반 확보를 목표로 할 것임.
- 따라서 총선 후 야당이 180석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여당과 야당의 평가가 다르게 나타나며, 정국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임.
- 국제적 정치 일정 중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미국의 11월 5일 대통령선거와 대만의 1월 13일 총통선거 두 가지임.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따라 미중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한국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 여부와 중동의 전쟁 확산 여부도 국제경제와 연결되어 우리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사회적경제 정책 및 예산

- 사회적경제 예산은 24년 정부안에서 대폭적 감축이 이뤄졌으며, 이에 대해 민간의 대응활동으로 일부 증액되었음.
- 사회적기업 지원 및 협동조합활성화 사업 예산은 정부안에 비해 총 52억원이 증액되었음

사업명	정부안	증액	합계
사회적기업 지원	28,589	4,401	32,990
협동조합활성화사업	780	800	1,580
합계	29,369	5,201	34,570

- 협동조합 예산은 교육과 판로지원 영역에서 증액되어 증액 부문에 대한 효과적인 사용을 주장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예산의 구조를 보면 지난 5년 이상 지속되었던 사회적경제박람회도 진행되기 어렵거나, 협동조합의 날 행사의 일부를 결합하여 형식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임. 민간이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전체 사회적경제 예산이 확정된 후 봐야 하겠지만, 변화된 정책, 예산 여건에서 민간의 대응 전략에 대해 사회미션별, 부문별로 검토할 때 함께 민간의 자원을 최대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광주는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30억원을 확보하였음. 이와 비슷한 지방정부의 대체 예산 편성에 대한 정보 및 자체적인 사업예산을 파악하여 상호전파할 필요가 있음.

구분	23본예산	24정부안(A)	24확정안(B)	증감액(B_A)
총액	7,508	780	1,580	800
출연금	6,045	500	1,100	600
교육	453		200	200
설립인가(중간지원기관 등)	2,500	70	70	0
감독 및 경영공시	573	390	490	100
판로지원 및 홍보	603	40	240	200
사업화 지원 및 평가(창업지원사업 등)	1,686			0
협동조합 등 정책개발	230		100	100
협동조합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370	253	253	0
기타사업비	1,093	27	227	200
협동조합의 날 행사	460		200	200

## ○ 사회 여건 전망

### □ 먹거리

- 이마트 유통산업연구소는 2024년 소비유통 환경을 1)인구 구조 변화(25년부터 초고령사회:65세 이상 20% 진입), 세대 변화(1~2인 가구 비율이 66.0%) 등에 따른 고객 속성 재정립, 2)상품 뿐만 아니라, 경험 충족을 위한 서비스까지 유통범위 확장, 3)인건비 상승 시대(24년 최저임금 9,860원, 2.5%↑)에 비용 상쇄를 위한 운영 효율화, 4)중장기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 및 K-푸드 수요 증가 반영 수출, 직접투자 등 해외 진출 모색, 5)탄소·에너지 비용 증가를 헷지할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 및 운영방안 모색 등 5가지 키워드를 제시하였음
- 이 속에서 식품 관련 트렌드로는 1)가성비:간편식 수요 상승, 2)친환경 및 로컬생산 상품 소비 확대, 3)소비자 니즈의 파편화로 인한 특정성분 가감 제품 확산 및 건강기능식품 세분화, 4)경기둔화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식품으로 해소하려는 즐거움 추구(특이한 식재료 활용), 5)AI를 활용한 맞춤형 식사 솔루션 확대 및 비용절감 등을 위한 생산·유통 과정의 ICT를 통한 자동화 확대, 6)지역고유성을 강조하는 경향의 6가지를 제시하였음
- 이상 유통산업 대기업에서 전망하는 먹거리 동향을 볼 때 로컬푸드 및 생협에게 약간의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지만, 온라인 마켓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른 오프라인 매장 경쟁력 약화와 대형유통업체의 친환경, 로컬, ESG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기존 사회적경제 영역의 이미지를 잠식해 들어올 것으로 보임.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욱 효과적인 시스템 정비 및 연대사업 개발 등 사업개선이 지속되어야 할 것임.
- 2024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전망되어(KDI), 23년 3.4% 보다는 완화되겠지만, 중동과 우크라이나 등의 사태 변화에 따른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단기적 농식품 급등락이 우려됨. 또한 23년 동절기 가스요금 인상과 24년 총선 이후 전기요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어, 공공요금발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음.
- 이들의 영향으로 농식품의 가격 불안정은 물론, 외식비용의 증가가 추가적으로 예상됨.
- 코로나 종료 후 먹거리 소비 패턴이 변화되었음. 외식은 2022년도 16.6% 증가한 반면, 신선식품은 4.9% 감소하였음. 농식품 수입이 정상화된 2024년에는 이런 경향이 더 강화될 것

으로 보임.(농촌진흥청 패널조사 결과) 생협의 운영에는 부정적으로 보임.

○ 주거생활

- 2023년 전국 주택매매가는 -3.7% 하락하였으며, 2021년 9.9% 상승 후, 2022년 -4.7% 하락하여 전국적으로는 2020년 수준이 되었음.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전망		
					한국건설 산업연구원	교보증권	하나금융 경영연구소
매매	전국	9.9	-4.7	-3.7	-2.0		
	수도권	12.8	-6.5	-3.3	-1.0	-5.0 이상	소폭 상승
	지방	7.4	-3.0	-4.0	-3.0		
전세	전국	5.1	-5.6	-1.1	2.0		

자료 : 한국부동산원 주택종합매매가격지수 및 전망은 각처 보고서 활용

- 2024년 전망은 발표 주체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 차이는 현재 주택에 대한 유효수요(투자 포함)에 대한 해석, 2030 영끌 막차 세대의 지지력 수준, 24년 금리인하에 대한 예측 등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임
- 어떤 경우이든 올해보다 주택매매가는 더 하락할 것으로 보임. 하지만 주택구매 수요가 전세로 머물면서 전세가 변동은 매매가 변동에 비해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함
- 비수도권 주택가격의 흐름은 2022년부터 계속 -3.0% 이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2024년에도 그 추세가 계속 될 것으로 보고 있음.
- 사회적경제의 주요 관심사는 청년주택의 공급 물량과 사회주택 정책의 변화, 주거복지 관련 정책의 변화에 따른 산업변화임.
- 다음 표에서 주거 불안정 저소득층 임차료 보조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포함된 2024년도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23년보다 1,702억 원(6.6%) 인상된 2조 742억 원임. 증액 예산은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과 급여 상승률 등을 반영한 것임.
- 장애인 주택개조사업과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여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소폭 감소하였다고 할 수 있음.

○ 보건·의료·돌봄

-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관심은 노령화 및 저출생 저해요인 해소(육아돌봄) 등의 이유로 계속 높아지고 있음. 노령 인구가 많아지면서 건강보험 등 장기적 의료수요 및 사전 보건관련 산업도 증가하고 있음.
- 특히 ICT와 결합한 보건산업은 글로벌 기업들의 새로운 수익창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
- 이런 추세를 감안하여 트렌드 코리아 2024에서도 10대 트렌드로 “돌봄경제”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여, 사회적인 주목도가 올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봄.
- 지역사회종합돌봄을 주창해온 사회적경제 진영이 이런 확장되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영리기업의 시장진출을 허용하게 될 것임
- 2024년 기초생활보장 예산(정부안)

구분	2023년 본예산(A)	2024년		증감	
		요구안	정부안(B)	증감 (B-A)	증감률
〈총계〉 (1)+(2)	19,135,491	20,859,666	20,826,157	1,690,666	8.8
기초생활급여 (1)	16,405,912	17,956,831	17,923,322	1,517,410	9.3
생계급여	6,014,148	7,541,072	7,541,072	1,526,924	25.4
의료급여	9,098,368	8,937,713	8,937,713	△160,655	△1.8
해산장제급여	38,210	43,416	42,613	4,403	11.5
간급복지	315,486	361,587	358,494	43,008	13.6
자활사업	693,573	772,416	748,440	54,867	7.9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	227,646	281,375	275,780	48,134	21.1
근로능력 심사 및 평가 운영	18,479	19,227	19,203	724	3.9
생업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	2	25	7	5	250.0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0	0	0	0	0
〈타 부처 소관〉 (2)	2,729,579	2,902,835	2,902,835	173,256	8.6
주거급여 지원	2,572,266	2,742,436	2,742,436	170,170	6.6
교육급여	157,313	160,399	160,399	3,086	1.96

※ 출처: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 정부도 경기 위축,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인한 복지수요가 늘어난 것을 반영하고, 2024년 중위소득 기준도 대폭 높이고(541만원 → 573만원 : 4인가구 기준, 6%↑),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상향 조정하여 기초생활급여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예산도 증가시켰음.
- 자활사업 예산은 7.9% 증가하였고,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예산은 21.1% 증가하였음.
- 농식품부에서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이 처음으로 추진되어, 농어촌지역 돌봄 사각지대를 줄일 것으로 보이며, 농어촌지역 사회적경제조직, 특히 사회적농업 관련 기업들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임.

### ○ 사회적경제 주체 영역 전망

**\* 이 부문은 충분한 통계나 자료가 없어 서술 방식 고민. 희망의 단초만 하나 설명함**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개소수 각년도 현황

연도	월												총합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2017	11	15	18	20	15	13	16	26	18	16	25	28	221
2018	25	15	39	33	16	21	25	21	16	22	53	43	329
2019	55	27	44	41	50	30	53	30	40	52	33	68	523
2020	47	32	50	34	43	31	76	107	131	82	99	111	843
2021	85	74	68	84	98	88	82	51	93	48	79	85	935
2022	58	53	65	52	52	68	72	38	49	42	54	69	672
2023	57	60	72	41	65	64	68	59	56	65	62	-	669

- 2024년 11월까지 기재부 협동조합 설립 통계 중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개소수 추이를 보면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은 전년에 비해 거의 줄어들지 않았고, 12월까지 합계하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제도적 정비가 정책의 후퇴에도 불구하고 지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민간의 다양한 연대활동의 방식에 대해 영감을 준 것으로 보임
- 지속적으로 진입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등 신규 사회적경제 주체에 대한 지원방식 및 홍보방식을 고민해야 할 것임.

##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보고회

2023. 12. 14(목). 오전 10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주 최: 더불어민주당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위원장 진선미),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공동주최: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주 관: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참여단체(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외 89개 단체):** 광주사회적경제연합회, 강원사회적경제연대, 대구사회적경제가치연대,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인천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충남사회적경제연대,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 (준)세종사회적경제연대, 세상만사, 한밭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경기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협의회, 두레생협연합회,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임팩트얼라이언스, 전국협동조합협의회, 한국자활기업협회,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지역자활센터플러스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연합회, 전국주민협동연합회, 한국의료(사협)연합회,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 전국학교(사협)연합회, 시민발전이중협동조합연합회, 일하는사람들의협동조합연합회, 강원사회적경제센터, 사회연대은행, 사회투자지원재단, 성공회대학교\_사회적기업연구센터, 밴드, 경기제일신협, 경동신협, 서울행복신협, 단원신협, 동작신협, 빠띠, 장안신협, 주민신협,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협동조합연구소, 함께하는재단, 한국마을연합, (준)통합돌봄(사협), 가슴기살균제피해자단체, 천안사회적경제연대, 강원도사회적기업협의회, 안산시시민발전협동조합, 살림, 신나는조합, 경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상생나무, 여수시사회적경제마을통합지원센터, 원주협동사회네트워크, 춘천사회적경제협의회, 영월사회적경제협의회, 광진구사회적경제협의회, 옥천사회적기업네트워크, 옥천순환경제공동체, 칼폴라니연구소, 인라이프케어이중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경제활성화\_충북네트워크, 산림형사회적경제협의회, 한국사회주택협회, 대전동구사회적경제연합회, 사협마을살림공작소, 서울시재생기업협의회(준), 광주의료복지(사협),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서울자치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연대회의, 로컬프루이중협동조합연합회, 건강한의료복지(사협), 시흥희망의료복지(사협), 강원의료복지(사협), 전주의료복지(사협), 인천평화의료복지(사협), 느티나무의료복지(사협), 살림의료복지(사협), 안산의료복지(사협), 행복한마을의료복지(사협). 충북 사회적기업육성사업 13기.

## □ 2024년 사회적경제 사업 예산 편성안에 대한 증감 현황

○ 23년 예산(1,118,351) → 24년 예산(479,966) / 삭감규모 및 비율: -634,585(56.7%)

(단위: 백만원)

중앙부처	사업명	부문	2023 (A)	2024 (B)	증감 (B-A)	증감율
금융위	신용보증기금 사회적경제 보증사업	금융	150,000	0	-150,000	-100%
	서민금융진흥원 사회적경제 대출지원	금융	10,000	0	-10,000	-100%
	사회투자펀드 조성 및 운영	금융	300,800	0	-300,800	-100%
기재부	협동조합 활성화	비금융	7,500	780	-6,720	-90%
교육부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비금융	500	0	-500	-100%
과기부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지원	비금융	1,272	636	-636	-50%
행안부	마을기업 육성	비금융	6,995	2,695	-4,300	-61%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비금융	3,500	0	-3,500	-100%
문체부	스포츠산업 예비초기 창업 지원	비금융	6,968	0	-6,968	-100%
	문화재 사회적 기업 육성	비금융	0	500	500	신규
농식품부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비금융	5,900	0	-5,900	-100%
	농업농촌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비금융	900	0	-900	-100%
	농촌 사회적경제 서비스공급 기반조성	비금융	900	0	900	-100%
산림청	산림형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비금융	650	0	-650	-100%
	산림일자리발전소 운영	비금융	3,900	0	-3,900	-100%
	신품종 생명자원 활용 공동체 활성화	비금융	4,000	0	-4,000	-100%
산업부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비금융	21,000	9,440	-11,560	-55%
중기부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지원	비금융	2,560	2,560	0	0%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비금융	12,600	12,600	0	0%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사업	비금융	4,851	4,851	0	0%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사업(수지차보조)	비금융	17,031	16,480	-551	-3%
	소셜벤처 육성	비금융	2,000	0	0	-100%
	소셜임팩트 보증	금융	265,800	265,800	0	0%
	사회적경제기업 정책자금 지원	금융	70,000	70,000	0	0%
환경부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금융	15,000	15,000	0	0%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육성	비금융	1,300	0	-1,300	-100%
고용부	사회적기업육성(지원)	비금융	93,880	28,589	-65,291	-70%
	사회적기업육성(지특)	비금융	103,377	47,665	-55,712	-54%
	사회적기업육성(제주)	비금융	4,937	2,370	-2,567	-52%
여가부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활성화지원	비금융	230	0	-230	-100%
합계			1,118,351	479,966	-634,585	-56.7%

## □ 사회적경제 예산삭감의 문제점

- 사회적경제 사업을 추진하는 주요 부처의 2024년 사업 예산을 아래와 같이 대폭 삭감하여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었음

부 처	내 용
고용 노동부	○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 23년 2,022억원 24년 786억원 59% 삭감 - 지원기관 운영예산 23년 42.2억 24년 전액삭감 - 사회적기업가 육성 예산 23년 411.9억 24년 46.7억원 88.7% 삭감
기획 재정부	○ 협동조합활성화 등 예산 23년 79.6억원 24년 7.8억 91% 삭감 ○ 민간참여가 확대하고 있는 대한민국사회적경제박람회 예산 전액 삭감
중기부 산자부	○ 사회적경제 기업 성장 집중 지원 25.7억원 24년 전액삭감 ○ 사회적경제혁신성장 23년 210억원 24년 94.4억원
복지부	○ 모든 정부에서 정부 차원의 자활기업 지원에 대한 별도 항목이 없었음.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자활기업을 일부 지원하고 있음. ○ 민간주도 사회서비스 혁신, 본체는 '시장화', '산업화'임
행안부	○ 23년 예산 70억원에서 24년 예산 27억원으로 59.7% 삭감 - 신규마을기업 육성 전액 삭감 및 우수마을기업 발굴·육성 전액 삭감

### 첫째, 취약계층의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붕괴

- 2021년 말 기준 사회적기업의 고용인원은 63,034명으로 이중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노동 취약계층이 38,597명(61.2%)을 차지함
- 최근 3년간 취약계층에게 지원된 예산 5,624억여원 중 정부가 문제 삼는 부정수급 사례는 71곳으로 전체 사회적기업 중 1.1%이며 수급액 23억원은 전체 지원금 예산의 0.4%에 불과
- 한편, 정부의 인건비 지원을 받는 이들은 전체 노동자의 10.7% 정도에 불과하고 89.3%는 사회적기업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 있음

### 둘째, 신뢰보호원칙 위반, 시스템 붕괴

- 정부의 정책은 예상 가능해야 함. 그러나 이번 예산삭감은 정부의 정책이 기대 가능한 수준을 넘은 것으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임.
- 만약, 현재와 같이 24년 예산이 확정되면 사회적경제 분야의 일자리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지난 10여년 간 구축한 지원 시스템이 붕괴되며 이를 회복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들고, 인적 자원의 유출은 단기간 회복 불가

### 셋째, 정부 발표는 기존 정부 발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

- 사회적경제 지원의 효과가 부족하다는 언급은 이미 정부의 수차례 발표한 자료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
- 한편, 정부의 예산삭감은 ILO는 제110차 총회 및 UN 제66차 총회 결정에 따라 사회연대경제활성화를 권고한 것에 정부가 서명한 것에 정면으로 위배 되는 행위

# 1. 중앙 활동 \_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하재찬 상임이사

## □ 공대위 출범 과정

- 22년 기재부의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을 축소 통폐합 <사회적경제과 + 협동조합과 = 지속가능경제과>에 대한 깊은 우려 표명. 성명서 및 국회기자회견 등 진행
  - ↳ 정부의 예산삭감 등 사회적경제 지우기의 순서로 인식하여 예산에 대한 강력한 항의. 이에 대하여 기재부는 예산삭감 등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함.
- 23년 4월 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회 차원의 <사회적경제 정책모니터링> 계획 수립
  - ↳ 22년과 23년 예산 분석 및 정책모니터링 과정을 통한 24년 예산 분석 계획 수립
- 23년 5월 기재부 및 고용부 등 주요 부처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 삭감 감지에 따른 감시
  - ↳ 국회 각 상임위의 사회적경제 관련 국회의원실과 협력하여 17개 부처의 예산 분석 등 예산안 감시
  - ↳ 전국협 등 주요 현장 협의체에서 기재부, 고용부 등 예산편성 계획에 대한 문의 및 확인

### <2023년 기재부 1차관 및 부총리 협동조합 예산 관련 답변>

(5월 임시국회, 1차관) 사회적경제 조직 관련 예산은 금년 예산 기준으로 3천억이 좀 넘는데요. 줄지 않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에 관련해서는 그동안도 기재부에서 계속 정책적으로 잘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협동조합 활동하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6~7월: 지원기관전국협의회 등 사회적경제 주요 협의회, 민주당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 및 사회적경제연대포럼 참여 국회의원 등을 통해 큰 폭의 예산 삭감 가능성 인지.

>>> 6월 25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고용부의 예산삭감 1차 통보 사실 진흥원 노조 밝힘.

- ↳ 국회의원실 및 주요협의체 등을 통해 예산 삭감 규모에 대한 Cross Check
  - 정부의 예산편성안에 대한 대응을 위해 지원기관전국협의회가 다양한 노력을 기울임.
  - 이와 함께 국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부안을 확인 노력함.
    - : 정부가 강력한 엠바고를 걸고 있음과 함께 상상초월 예산삭감이 예상된다는 것을 확인
- ↳ 연대회의 집행위원회를 통해 대응방안 필요 공감
  - 정부안 발표 전 성명서 발표를 통한 현장의 강력한 우려 표명
  - 이사회 및 대표자 회의 소집 필요 확인

- 진흥원장 면담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 8월: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활동 진행

>>> 8월 17일 진흥원으로 고용부 58.7%, 협동조합 91.0% 삭감(안) 통보 사실 진흥원 노조 발힘.

- 연대회의 공동대표단 진흥원장 면담  
: 예산 대폭 삭감 및 재정지원, 육성사업 등 사회적기업 주요 예산 대폭 삭감 확인
- 8월 중순 성명서 초안 준비하여 대표자 논의를 통해 8월 말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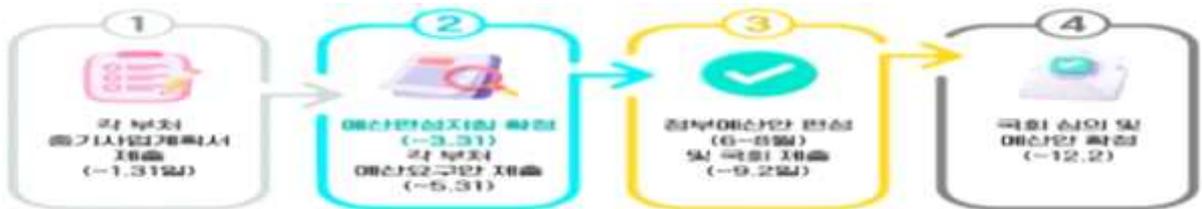
○ 9월: 정부안 확인 및 예산 평가, 그리고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평가

- 이사회 대표자 회의 제안 → 대표자회의를 통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공동대책위원회’> 추진 결정

### 예산삭감 대응을 위한 대표자회의 내용 및 결과

#### 정부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부정적 프레임 씌우기 및 지우기 대응방안 마련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공동대책위원회] 가동>>

- 공대위 참여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야 함.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참여하지 못 하는 사회적경제 주체와 공동 목표와 전략 속에 역할을 나누어 공동전선을 형성하는 것이다.
  - ↳ 연대회의 회원은 참여를 기본으로 하나 열린 참여가 가능하며, 한기협/창업주체/지원조직 등 공대위에 꼭 참여하여야 할 주체들과는 보다 적극적인 방식의 소통 필요
  - ↳ 개인/조직/협의체, 연대회의 회원 여부와 관계없는 폭넓은 참여 및 소외되지 않는 역할 필요
- 정책적 대응 기초를 바탕으로 하며, 국회가 정치적 대응을 하도록 하는 활동을 병행한다.
  - ↳ 정부에 대한 평가가 아닌 정책에 대한 평가  
: 국제토론회 및 다양한 토론회나 포럼 진행 등을 통한 다양한 정책 평가 실시 등
  - ↳ 삭감된 예산을 복원하기 위해 국회가 역할을 하도록 하며 그 근거와 명분 제시  
\* 국회 및 정부(부처)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경우 드러낼 전략과 그렇지 않은 전략 고려
- 일자리를 잃는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와 목표의 우선순위가 설정되어야 한다.
  - ↳ 아래와 같은 단계별 목표와 영역을 구체화하여 단단한 논리구조를 가진 대응



- : 국회 심의\_ 국회 각 상임위(예결산소위원회) 논의와 국감(10월)을 거쳐 예결산위원회에서 확정
- \* 각 상임위 예결산소위원회 대응 → 국감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거론 → 삭감된 예산 재편성 시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 복구(사회적경제 예산을 민생예산으로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

→ 예산편성안 복구와 이것을 넘어서는 중장기 계획으로 위원회를 가동해야 한다.

- ↳ 예산편성안 복구의 성과를 넘어 사회적경제가 성숙하고 단단해지도록 해야 함.

→ 최대 목표와 최소 목표를 가지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최대목표:

• 최소목표: 사회적경제의 연대와 협력 그리고 시민사회와의 연대와 협력 강화

→ 대응활동 대상 및 단계에 따른 보다 구체적인 논리구조와 대응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 객관적인 데이터와 자료에 근거한 사회적 성과 제시 및 대응 논리 마련

↳ 사경 내부 이해관계자(참여 주민, 노동자, 조합원 등)와 일반 시민, 국회, 정부로 나누어 대응

↳ 개인에서 연대체까지 각 층위별 역할 및 개인(1인 시위 및 캠페인 등)에서 총궐기대회와 같은 대규모 집회, 그리고 ILO/ICA 등과의 국제연대 등 대응활동의 폭을 최대한으로 확장하여 고려

→ 개인에서 국제연대까지, 개별에서 전국까지 대응 스펙트럼을 최대한으로 확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 국제연대까지 고려한 사회적경제 계 내부의 공동대응

↳ 사회적경제를 넘어 시민사회, 복지 및 자원봉사계 등과의 폭넓은 연대 대응

※ 국유재산 매각은 사회적 활용을 축소하는 것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지는 것으로 시민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일 수 있음.

<참고> “나라땅 18~23% 싸게 팔렸다”... 16조 국유재산 또 헐값 매각 될라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64154.html](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64154.html)

→ 연대회의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업종/유형 부문> 등 10명 내외의 실행조직 둔다.

→ 공대위 출범을 위한 향후 단계 및 과제: 명칭 및 구성, 구성을 위한 제안문과 소통과정 필요. 실행위원회 구성 등의 출범을 위한 과제가 남아 있으며 연대회의 집행위원회를 통해 빠르게 진행하고자 함.

#### <중요 논의 내용>

- 그 동안 사회적경제의 성과를 가져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중간지원체계가 사라지는 것에 대하여 매우 큰 우려가 있음.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위해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중간지원체계가 필요.

- 지방정부의 경우 현재 편성된 예산안으로 진행할 경우 폐쇄되는 부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행정 공무원과의 협력 지점이 있음.

\* 일부 지역의 경우 사회적경제 현장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이야기 하는 공무원들이 있다고 함.

- 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및 자활 등으로 지금의 정부 압박이 확장될 가능성이 높으며, 정부는 부채 해결을 위해 예산 삭감에서 (자활)기금 환수?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진선미 의원실(민주당 전국사회적경제위원장)에서 대책 마련을 위한 미팅 제안: 9월 7일 진행  
: 예산 편성안 해결을 위한 논의 및 21대 국회에서 정리할 법안 등 제도개선 과제 제시

- 서삼석 예결위원장 면담: 연대회의,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통합지원기관전국협의회 참석

: 예산을 조정할 때 명분도 있고 논의 안건 상위에 배치될 수 있도록

: 상임위(예결산 소위)에서 사회적경제 예산 복구 관련 언급과 국감에서 문제 제기가 중요하다고 함

- 효과적인 국감 준비를 위한 참고인 세우기 진행: 통합지원기관 및 한기협 등과 협력 중

: 기재위(진선미 의원)\_통합지원기관에서 참고인 참여 신청, 환노위(이학영 의원)\_연대회의 하재찬 참여 신청

- : 환노위(이수진 간사 or 박정 위원장)\_고진석 대표 참고인 세우기 노력 중
- 9월 18일 사회적기업 성과 토론회 긴급 진행(한기협) 고려 22일 국회 토론회 기조 변경
- 9월 19일 예산편성 관련 활동 요청
  - : 추석 전까지 각 상임위 예결소위 및 전체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됨. 각 영역별 해당 상임위 예결소위 위원 및 상임위 위원 면담 필요. 지역구에서 지역구 의원을 만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
  - : 추석 전 대략적인 국감 전략을 각 의원실에서 수립한다고 함. 사회적경제는 연대회의에서 국감이 필요한 것을 수집하하고, 22일 토론회 내용과 금요일까지 수집된 것을 사회적경제 관련 의원들과 협력하려고 함.
  - ^ 국감 내용이 있으면 간단한 근거와 함께 최대한 빨리 최소 금주 중으로 요청
- 9월 22일 국회토론회 진행
  - : 연대회의, 사회적경제 예산 삭감 공동대책위원회 제안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37616>
  - : 사회적경제 관련자 '92%' 현 정부 사회적경제 정책 '부정적' 평가  
<https://www.socialimpact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245>
  - :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민생예산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하라"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6140>
  - : 사회적경제, 국민통합 이뤘나 대표정책, 예산축소 우려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37590>
  - : 현장소통도 없이 정부 내년 사회적경제 예산 대폭 삭감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09967.html](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09967.html)
- 9월 25일 공동대책위원회 추진을 위한 준비회의 진행
  - : 10월 17일(14시) 또는 18일(14시) 중 국회에서 출범식을 갖기로 하며 공대위 참여 제안서 및 기획안을 범 사회적경제계에 제안하기로 함.
  - 공대위 출범에 대하여 한번 더 신중히 토론하며 공대위 추진에 다시 한번 모두 동의함.

## 공동대책위원회 제안설명 및 준비회의 결과

□ 9월 19일 연대회의 대표자회의에서 제안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공동대책위원회'>를 화상으로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안 설명을 진행함. 아래와 같이 논의 및 협의하였고 9월 23일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회의를 진행하기로 함.

□ 강원 및 원주/춘천/영월, 대전, 세종, 충북 및 청주, 충남 및 천안, 제주, 전북, 서울 및 광진, 광주, 안산, 자활기업, 광역 권역별 지원기관협, 전국협, 한마협, 활성화네트워크, 시민발전, 생협 등을 포함한 개인적으로 관심있는 분들 40명 정도 함께 함.

### <주요 논의 및 협의내용>

○ 누구도 소외되지 않으니라 함은... ① 지금의 문제에 대한 영향의 크기가 다 다르지만 사회적경제를 지우고자 하는 의도를 막기 위한 활동으로서 함께 해야 함. ② 공대위 참여여부를 떠나 전선을 명확히 하여 대응 활동의 협력과 역할분담을 해야 함. 내부적으로 화살을 돌리는 것은 대

응 활동이 정리된 이후해도 늦지 않음.

- 전국적인 규모로 공대위가 활동하고 있음을 조직도에서 드러내는 것 중요  
: 중앙 = 광역 = 기초 = 개별 조직과 개인  
: 이와 더불어 10월 초와 10월말이나 11월 초에 대규모 집회가 연결되어 진행되어야 함.  
: 개인활동을 다양하고 폭넓게 하도록 활동의 장을 열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해야 함.
- 우리 목표를 명확히 드러내면서도 시민과 사회적경제 내 우리 노동자와 조합원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공대위 명칭과 슬로건이 필요함.
- 총선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함. 지역 언론 연계와 지역 여/야 시도당 압박 등
- 공대위 발족 전이라도 사회적경제인이 가볍게 참여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바로 실행해야 함.
- 활동이나 데이터가 쉽게 공유되고 모아질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활동해야 함.  
: 연대회의 차원에서 빠띠 믹스를 다음 주 부족하더라도 오픈하고자 준비 중
- 실행위원회와 실무단 구성이 중요하며 오늘 회의에 참여한 분들이 실행위원회와 실무단에 참여하는 것으로 제안됨.
- 대응활동을 위한 기금을 조성해야 함. ← 연대회의 차원에서 계좌 공유 필요
- 진흥원이 예산편성안과 관련하여 부처를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과 협력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이후라도 강력히 평가해야 함.

<23일 20시 진행하기로 한 차기회의 주요 안건>

- 각 주체별 참여 및 공대위 조직구성, 그리고 주요 행동과 일정 등

□ 9월 23일 준비회의를 통해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을 하기로 함.

공대위 활동의 핵심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사회적경제 정책 지우기>를 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며, 사회적경제 정책을 유지하도록 하는 가장 구체적인 것이 예산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임. 이에 <예산 원상복구>를 명칭에서 명확히 드러내며 목표를 구체화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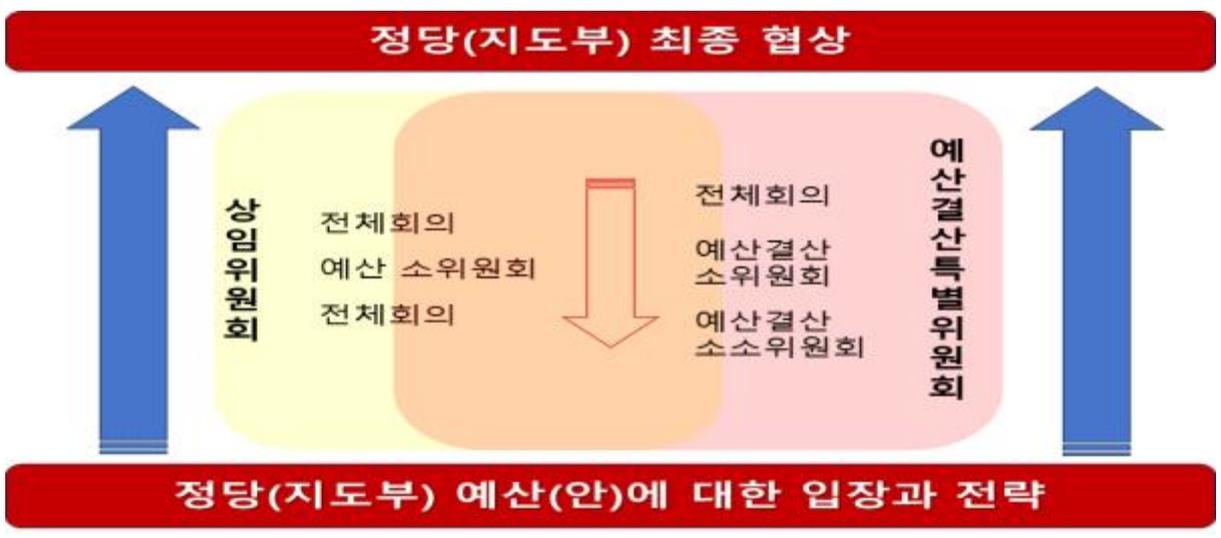
1. 명칭: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을 명칭에서 제외하되 운영 원칙으로 세우고 활동과정에서 구현하고자 함.
2. 목표: 예산 원상복구 & 사회적경제 연대 및 조직력 강화
3. 조직: 행동과 실행에 초점을 둔 구성과 운영 필요  
▶ 공동대표단 → 실행위원회 → [ 기획국 + 홍보국 + 투쟁국 ]
  - 공동대표단: 효과적인 논의를 위한 구성과 범위 고려 필요
  - 실행위원회: 각 국장 및 연대회의 집행위원회 등 참여
  - 3개 국: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주체 및 연대회의 집행위원회 제안 등으로 구성
4. 공대위 출범: 10월 17일 또는 18일 중 국회본청앞 계단에서 14시에 진행
  - 공대위 조직 시간 및 국감 초기이자 예결위 전으로 이 때가 적당한 시기로 판단됨.
  - 국회의원 협조가 필요함으로 행정적 절차와 국회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함.
  - 이에 17일(14시) 또는 18일(14시) 중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더 많이 선호하는 날짜로 잡고, 국회 사정상 17일이나 18일 중 정해진 날에 하여야 하면 그 날로 진행하기로 함.
  - \* 공지사항에 내일(27일) 저녁까지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회본청 300명 이상 참여가 보장되어야 유효한 출범식이 될 수 있으므로 적극 참여 필요함.

>>> 준비회의에서 정한 것을 공대위 단독'SE로운 길 열기'에 참여한 주체 및 연대회의 대표자 단독에 공유하여 추가 의견을 수렴함. 두 단독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를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제안자로 하여 범 사회적경제 주체에게 제안함.

- 10월: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및 공개적인 대응활동 진행
  - 10월 10일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참여 제안
    - : 10월 18일 15시 국회본청 계단에서 대 규모 출범식 진행 및 공대위 제안서 발송
    - : 출범식 준비를 위한 공대위 전체회의 10월 16일 진행
  - 10월 18일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진행
    - :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사회적경제위원장, 홍익표 원내대표, 위성곤/김영배/민형배 의원 참석, [정의당] 강은미 의원 참석,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참석

### □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및 대응 활동

#### ○ 국회내 예산 확정 프로세스



- 정당(지도부) 면담: **정당의 예산 전략은 9월 말 10월 초 확정**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홍익표 원내대표: 공대위 출범식 참석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 발언 및 민주당 공식회 이에서 같은 취지의 발언, 진선미 의원(실) & 공대위 차원에서 보좌진과 적극적인 소통
    - 이개호 정책위의장: 생협과의 인연과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민생예산인 사회적경제 예산 복구에 적극 고려 의사 표명, 보좌관과 간헐적 소통 진행
    -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9월 연대회의 중재로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와 통합지원

기관전국협의회가 함께 면담을 진행하여, 예산 대응에 대한 기본적인 프로세스와 대응에 대한 조언을 받았고 (서면)질의가 중요하다는 사실과 민주당의 협상안이 정리될 때 상위에 배치되도록 하는 것과 예산결산위원회로 넘어 올 경우 챙겨 보겠다고 함. 예산결산위원회 논의 전 사회적경제 관련 (서면)질의 현황 조사 등 협력을 위한 노력을 함.

-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공대위 차원에서 장애인, 여성, 청소년 등 시민사회 쪽 삭감 예산을 하나의 요구 안으로 묶어 <민생살림예산 패키지> 민주당 요구. 패키지 차원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당차원에서 개별 법안에 대한 상임위 차원에서의 대응 요청 진행

□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윤재옥 원내대표**

- **유의동 정책위의장:** 약 1시간 정도의 성의있는 소통 진행. 삭감의 심각성 인식, 일자리 관련 예산에 대한 당 차원에서의 복원노력 약속. 보좌진과 간헐적 소통 진행

- **윤재옥 원내대표...** 공문 및 수업은 전화 요청에도 불구하고 면담 및 보좌진 소통도 못 함.

민생살림예산 패키지 토론회 및 공동행동 추진을 위한 시민사회 협력 활동	
▶ 10월 4일? 구도 제안	
▶ 10월 24일? 시민사회활성화네트워크에 공식 문건 제안	
▶ 11월 2일 시민사회 간담회	
▶ 11월 14일 박주민 간담회	
→ 10월 초 당 차원에서 예산 대응 전략이 수립되었고, 11월 초에 상임위 차원의 예산 논의가 진행된 상태여서 패키지 차원의 대응 불가	
→ 당 차원(수석부대표)에서 해당 상임위에 추가 논의가 진행될 시 고려해 줄 것으로 각 주체별 요구안을 바탕으로 상임위 간사 및 위원장에게 요청	

○ **상임위원회 예산 편성안 심의**

전체회의 안건 논의 및 질의

→ 예산소위원회 심의

→ 전체회의 상임위 의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달

□ **상임위별 소통 의원(실)**

상임위원회	소통 진행 의원	비고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이수진(비례) 간사, 이학영, 전용기, 진성준_예산소위 간사, → 공대위 차원에서 주요 요구 사항 관련 (서면)질의 진행	초기 한기협 단일 소통 후 공대위 소통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김태년, 정태호_예산소위 간사, 박광온, 정의당 장혜영_예산결산위원, 국힘 송언석_예산결산위 간사, 국힘 김영선, → 공대위 차원에서 주요 요구 사항 관련 (서면)질의 진행	
행정안전위원회	이형석_예산결산위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현장 소통 부족

상임위원회	소통 진행 의원	비고
	→ 현장 소통(대응) 부족으로 (서면)질의 여부 확인 불가	
농림수산위원회	위성곤_예산결산위원, 국힘 이달곤_예산결산위원	실질적 현장 이슈 無
산자위	이용빈_예산결산위원, 김정호, 박영순,	대응 주체不在
중소벤처위	공대위와 현장 주체 간 소통하여 예산 대응을 현장이 별도로 진행하기로 함.	
교육위원회	도종환_예산결산개수위원, 김영호_예산결산위원 → 현장 소통(대응) 부족으로 (서면)질의 여부 확인 불가	현장 소통 부족
보건복지위	국힘 강기윤, 정의당 강은미,	실질적 현장 이슈 無
예산결산위원회	기동민_예산결산개수위원, 김승원, 강훈식, 조승래, 홍기원, 김병욱, 김수홍, 허영_예산결산개수위원, 박상혁,	서면질의 및 협상 대응

※ 박주민\_민주당 수석부대표, 박범계, 김영배, 민형배, 황운하

- **환경노동위원회:** 박정위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소통, 대응 초기 민주당 내 사업개발비 중심의 협상으로 가이드라인 형성된 측면이 있었음. 이후 공대위 소통 개입하여 일자리 중심의 논의로 강력하게 진행. 이수진(비례) 간사에 의해 공대위 논의가 논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음. 민주당 의원들의 적극적인 구두 및 서면 질의, 사회적경제 현장 진술인(하재찬 상임이사) 요구도 진행되었으나 국힘 반대로 진행되지 못 함.

※ 진흥원장이 민주당 예산 인상 요구안과 국민의힘의 반대가 작용하여 사업개발비 중심으로 민주당 내 가이드라인 형성된 것으로 예상함.

-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실) 중심으로 적극적인 구두 질의 및 서면 질의가 이루어졌고, 김태년, 박광온, 정태호 등 민주당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이루어짐. 정의당 장혜영, 국힘 김영선 의원은 전국협에서 대응하였고, 국힘 송언석 의원은 공대위에서 대응하였음.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구두 및 서면 질의가 진행되었고, 사회적경제 현장 진술인 요구도 진행되었으나 진행되지 못 함.
- **행정안전위원회:** 광주에서 민주당 이형석 의원 면담을 진행하였고, 이를 이어 받아 공대위 차원에서도 마을기업 서면질의가 들어올 경우 협력을 약속함.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서면질의 등 협력을 약속함. 공대위 차원에서 마을기업 쪽과 소통이 부족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 함.
- **교육위원회:** 충북지역과 협력하여 공대위 차원에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주요 요구 사항에 대한 서면질의를 해 주었고, 이것에 보테어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서면질의도 진행함. 도종환 & 김영호 의원 모두 학교협동조합 관련 서면질의에 대해서도 협력하려고 하였으나 현장 주체와 공대위 차원의 소통이 부족하여 진행하지 못 함.

## ○ 예산결산위원회

- 상임위원회에서 부족했던 서면질의에 대한 협력이 이루어짐
- 예산결산소위원회(개수위원회)

- 협상안과 목표안을 설정하여 협상을 진행하는 전략을 민주당(도종환 의원 외)과 진행함.
- 그러나 협상안을 마련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진행하지 못 함.
- ※ 진흥원 & 한기협 요구안이 매우 낮은 수준의 협상안으로 협상 메시지 조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현장 소통 및 간접비 관련 예산 요구에 대한 한계가 있었음.
- 정부예산안(세부항목)에 따른 우리 요구안을 우선순위로 설정하여 예산 증액 논의에 대한 여러 상황에 대한 대응안을 민주당과 마련함.
- 진선미 의원실을 중심으로 하면서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관련 의원실과 논의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속 대응을 위한 소통을 진행함.

### >>> 핵심 요구안 부록 참조

- 예산결산 소소위원회
  - 각 당의 예산 협상안을 중심으로 비공개 회의 진행으로 세부적인 모니터링은 어려웠으나, 사회적경제 관련 민주당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감지되었음.
- ※ 현재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4인 협상으로 예산 협상 과정이 넘어왔고, 12월 20일 본회의에서 통과하는 것으로 협의한 상태만 확인되고 있음.
- ※ 예산 복구의 중요 걸림돌: ❶ 삭감된 예산만큼 증액되어야 하나, 정부 예산이 예년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으로 수립되어 적극적인 삭감의 한계가 있음. ❷ 진흥원보다 빠르게 예산 대응을 하지 못 하여 국회(민주당)에 이종으로 요구됨.

## □ 정리 및 소회

- 사회적경제계가 정부의 정책지우기에 대하여 투쟁한 첫 사례
- 가장 큰 어려움이 있는 사람 중심의 <누구도 소외되지 않아야한다>는 연대와 그 가능성을 확인함.
- 사회적경제계는 시민사회 주체 중 가장 빠르고 적극적인 집단 대응을 함.
- <민생살림 예산 패키지>를 시민사회에 요구함으로 다양한 주체와의 연대와 협력의 기틀을 마련함.
  - 예산 대응 후 21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할 민생법안 대응 논의를 진행할 예정
- 보다 강력한 요구를 할 수 있었으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 주요 주체에 대한 관리를 하지 못하여 초기 국회(민주당)에 메시지(요구)의 혼란이 있었음.
- 공대위 차원에서의 예산 원상복구 대응은 적극적이면서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각 프로세스별 진행한 것으로 국회에서 평가해 주고 있음. 진선미 의원실에서 프로세스별 필요 대응을 선 안내하기도 함. 단 국회에서의 예산 협상 논의 과정별 대응 시점을 보다

빠르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함.

→ 9월 중 하순 예산에 대한 정당의 대응 방안이 수립됨

## 1. 중앙 활동 \_ 전국협동조합협의회 / 김대훈 사무총장



## 주요경과

2022년 3월 \_ 제20대 대통령 선거

2022년 5월 \_ 윤석열 정부 출범

- 국정과제에서 사회적경제 정책 실종
- 사회적경제 정책의 급격한 퇴보, 후퇴 예상
- 극히 일부 분야(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만 사회적경제 언급

2022년 12월 \_ 사회적경제과 & 협동조합과 -> 지속가능경제과로 축소, 통합

2023년 3월 \_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발표

- 이전 기본계획 대비 협동조합 정책 소극화 & 주요 전략과제 퇴보, 실종
- 지속가능한 발전의 주체로 협동조합을 활성화한다는 슬로건을 뒷받침할 미래 전략, 핵심 정책 실종 (자금조달 및 금융정책, 제도개선 및 규제 샌드박스, 협동조합 사이의 협동 촉진 등)
- 교육, 창업 정책에서 있어 당사자, 연합회의 역할 강화 등의 정책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

2023년 9월 \_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발표

- 사회적기업에 대한 의도적 부정적 평가

2023년 9월 \_ 윤석열 정부 2024년 예산(안) 국회 제출

- 사회적경제 예산 대폭 삭감
- 예산을 통한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무력화 시도

## 대외활동

2023년 3월 22일 \_ 윤석열 정부 2년차,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발표

- 라이프인 & 전국협동조합협의회 공동기획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전문가 리뷰 연재 (7회)

2023년 7월 2일 \_ 101th 세계 협동조합의 날 기념 포럼 개최

- 주제 : 지속가능한 세상을 향한 상상협동행동 "지방정부와 사회연대경제&협동조합 간 협력의 사례와 임팩트"
- 주최 : 신협중앙회, 사회연대경제전국지방정부협의회, 전국협동조합협의회

2023년 9월 6일 \_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실효적 추진방안 국회 토론회

- 윤석열 정부의 협동조합 정책 퇴보 및 2024년 예산 편성 관련 협동조합 현장의 의견 공개 및 정리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정의당)과 공동주최

2023년 9월 6일 \_ 협동조합 예산 91% 삭감과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무력화에 대한 성명 발표

2023년 9월 27일 \_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실효적 추진방안에 관한 의견서 제출

-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실효적 추진방안 및 2024년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서 제출 (국회, 정부)

2023년 10월 \_ 국정감사 대응 준비 (진선미 의원실과 긴밀히 공조)

2023년 10월 10일 \_ 2023년 국정감사 대비 협동조합 분야 주요 국정감사 이슈 제출 (국회)

2023년 11월 2일 \_ 2024년 협동조합 활성화 예산 재편성(증액) 의견서 제출 (국회, 정부)

## 핵심요점과

**2023년 9월 6일 정책토론회** :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장혜영 의원, 전 김진욱 보좌관-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좌관-, 조현수 보좌관)

-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근거로 하여 협동조합 정책의 퇴보에 대한 지적 및 예산 대응 시작

**2023년 10월 국정감사** :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진선미 의원, 구슬기 보좌관)

- 탁월한 정책분석을 통해 예산을 통한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무력화에 대한 문제 제기

**기획재정위원회 및 예산소위** : 소위원장 정태호 의원(김준하 보좌관), 김태년 의원(신동림 보좌관), 박광온 의원(김하림 보좌관) 등 면담 및 기재위 예산소위에서 적극 대응

- 진선미 의원실 국정감사 자료 및 전국협 의견서, 요구서를 바탕으로 예산소위 적극 대응 요청
- 서면질의 제출 : 진선미 의원(진선미, 양경숙, 홍영표, 서영교) 및 정태호 의원
- 성과 : 김태년, 정태호, 박광온 의원 집중 질의 -> 차관, 국장, 과장 참석하여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무력화의 문제점 일부 인정, 약 20억원(교육 및 판로 등)의 예산 증액의견 제시
- 결과 : 기획재정부가 약 20억원의 증액에 동의하였으나 더 많은 증액협상을 위해 상임위 단계에서 합의하지 않고 부대의견을 달아 예결특위로 넘김

**국회 예결특위** :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소속 의원 서면질의 제출 (원상복구 의견)

- 서면질의 제출 :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예결특위 간사) &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박재호, 양경숙, 이수진, 이용빈, 홍기원, 강훈식(예결특위 간사), 김승원, 허영(김용철 보좌관), 신동근, 이용우, 조웅천) & 정의당 : 장혜영(조현수 보좌관)
- 현재 예결특위, 소위 과정을 거치고 소소위 차원의 예산 협상 과정 진행 중 (비공식, 비공개)

**국회 예산 심의 절차 및 대응전략 자문**

-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실(손낙구 보좌관) : 국회 예산심의 절차(비/공식) 및 대응 전략 자문

## 주요성과

-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근거로 2024년 협동조합 정책의 퇴보, 예산(안)의 문제 제기 및 공론화 (정책토론, 국정감사, 상임위, 예결특위)

- 국정감사 및 상임위 예산심의 단계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실의 적극적인 협조와 대응 조직

- 더불어민주당 다수 의원, 정의당 및 국민의힘 소속 의원까지 협동조합 예산의 원상복구를 기본으로 하는 서면질의 제출 (기재위, 예결특위)

- 더불어민주당 : 협동조합 예산의 원상복구를 당 입장 및 예산 협상의 기본입장, 목표로 설정하고 단계별 (증액)협상 진행 중 (진선미 의원, 허영 의원, 홍익표 원내대표, 이개호 정책위원장, 강훈식 예결특위 간사)

- 12월 20일 2024년 예산(안) 본회의 상정 예정... 최종 결과는?

## 에필로그

- 2023년 한해 동안 여러가지 정책적, 제도적 문제들과 그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제출, 주문했습니다.
- 그러나 관심을 표명하고 관련 부처에 문제를 확인, 개선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해당 부처에 직접 문의해보라는 답변과 소극적인 대처가 매번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주무부처의 정책의지가 확연하게 퇴보하는 현상을 절감하고 또 재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이었습니다.
- 삭감된 예산의 복구는 최소한의 협동조합 생태계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예산 그 자체도 중요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부의 최소한의 정책의지를 유지하고 되살려내는데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므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 II. 지역활동 \_ 대전사회적경제비상회의 / 송승민 세상만사 팀장



### 1. 활동목적과 방향

- 윤석열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폐기의 문제점 알리기
- 사회혁신을 향한 사회적경제의 노력과 성과, 한계 성찰
- 지역과 공동체 기반의 통합연대의 필요성과 과제 설정

### 2. 활동계획



### 3. 활동내용

진행일정	활동내용	비고
사회적경제예산삭감 대책마련 비상회의를 위한 제안 모임		일시 : 23년 10월 12일 장소 : 공간'이음' 내용 : 제4차 사회적경제기본계획안 및 예산삭감 현황공유, 전국 공대위 활동 및 지역공대위 결성 제안

진행일정	활동내용	비고
<p>전국 공대위 발대식 참석</p>		<p>일시 : 23년 10월 18일          장소 : 국회본청앞          내용 :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규탄 및 공대위 발대식          참석 : 대전사회적경제기업 및 단체, 지원 기관 총 30명</p>
<p>사회적경제 정책 정상화를 위한 대전비상공동대책 회의</p>		<p>일시 : 23년 10월 19일          장소 : 기독교연합봉사회관 (2층 컨벤션홀)          내용 : 정책축소와 예산삭감 상황공유와 대책수립 및 운영조직 논의(상황실 구성), 비상공동대책회의 결의문 낭독          참석 : 사회적경제주체 100여명</p>
<p>대전사회적경제 공동행동의날</p>		<p>일시 : 23년 11월 21일          장소 : 대전시청북문앞 보라매공원          내용 : 사회적경제 대시민대상 홍보부스 운영, 사회적경제인 문화공연, 자유 발언 및 대전공동체 연대발언, 대전비상공동대책회의 결성 결의문 낭독          참석 : 300여명의 대전시민 및 관계자          ※ 축전 : 박범계, 조승래, 박영순, 장철민 국회의원</p>
<p>사회적경제 대토론회</p>		<p>일시 : 23년 12월 14일          장소 : 대전NGO지원센터          내용 : 예산삭감 정책 비정상 문제 분석, 위기진단과 새로운 발전방향, 사회적경제토크쇼, 송년의밤          참석 : 온-오프라인 100여명</p>

- ※ 대전사회적경제비상회의 상황실운영(매주 1회 정기회의 진행)
- ※ 11월 2일(화) 1차 대전공동체비상회의 공동행동의날, 12월 5일(화) 2차 대전공동체비상회의 기자간담회 활동연계

## ※ 첨부1

# 사회적경제 정책 정상화를 위한 대전비상공동대책회의 결성 결의문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20년간 사회적 양극화를 해결하는데 앞장서 왔다. 사회적경제는 노동 시장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안식처이자 지역문제 해결사였다.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복지사각을 없애고, 환경문제에 혁신적인 대안을 제안하여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지켜온 중요한 주체였음을 자부한다.

그러나 현 정부는 편향된 시선으로 사회적경제를 바라보고 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사회적경제의 우수성을 홍보하던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지금은 무능, 무책임, 정부의존 등으로 매도하는 현실을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 정부가 직접 돌보지 못한 틈새까지 살피며 사회안정망을 보강해 왔던 사회적경제인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공공가치 실현을 신념으로 정부가 세심하게 챙기지 못하는 등잔밑을 챙기며 녹록치 않은 환경에서도 무너지는 지역을 세우고 있으며 공동체와 이웃이 사라지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민생의 현장이다. 벼랑 앞의 버팀목인 사회적경제가 이와 같은 조롱과 비난을 받을 이유는 없다.

우리는 비정상적으로 치닫는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사회적경제의 연대와 협력을 우습게 본 지금 정부의 태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도록 우리의 힘과 신념을 함께 모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하나, 정부는 사회적경제 예산 삭감을 중단하고 즉시 정상화하라.
- 하나, 정부는 사회적경제 정책을 정상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라.
- 하나, 국회는 사회적경제 예산 삭감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예산 복원에 나서라.
- 하나,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조롱과 비난을 멈추고 모든 사회적경제인 앞에 사죄하라.
- 하나, 대전광역시와 각 자치구는 사회적경제의 혁신 성과를 인정하고, 실효적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라.

사회적경제 정책 정상화를 위한 대전비상공동대책회의 참여자들은 위와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연대와 협력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며, 사회적경제가 만든 우수한 혁신성과에 대한 옳은 인식과 공감을 위한 대시민 홍보와, 더 새롭고 더 이로운 사회적경제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한다.

2023년 10월 19일

사회적경제 정책 정상화를 위한 대전비상공동대책회의 참여자 일동

## ※ 첨부2

### 대전 사회적경제 공동행동 결의문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지난 20년간 사회적 양극화를 해결해 왔다.  
모두에게 평등한 일자리를 만들고, 복지사각을 없애 왔으며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를 불편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현 정부의 태도는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사회적경제는 이념이 아니며 공동체와 이웃을 위한 민생의 현장이다.

사회적경제가 이룩한 그간의 혁신 성과 앞에 정부와 지자체는 다른 말을 할 수 없다.  
공공의 빈자리를 채우고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지켜왔던 사회적경제인들은  
더 이상 참지 않고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다.

우리는 비정상적으로 치닫는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사회적경제의 연대와 협력을 우습게 본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도록 우리는 힘과 신념을 함께 모을 것이며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사회적경제 예산 삭감을 중단하고 즉시 정상화하라.

하나, 정부는 사회적경제 정책을 정상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라.

하나, 국회는 사회적경제 예산 삭감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예산 복원에 나서라.

하나, 대전광역시와 각 자치구는 사회적경제의 혁신 성과를 인정하고,  
실효적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라.

2023년 11월 21일

사회적경제 공동행동의날 참여자 일동

#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 강원공동대책위원회 활동보고

2023.12.8. 강원사경연대 사무국

- 9월 9일. 강원사경한마당 행사 이후 강원도사회적경제긴급확대간담회 (원주시 기후변화교육관)
  - 이승석 연대회의 상임대표, 배재국 강원사경연대 공동대표 등 약 50여명 참석
  - 비상한 행동이 필요하다, SNS 의견게시 등 당장 가능한 일부부터 시작하자, 기존 연대조직을 포함해 개방적이고 폭넓은 대책기구를 구성하자, 강원도비상대책기구(?) 첫 회의는 15일 원주에서 하되 각 시군,업종,부문별로 의견을 비상회의를 갖고 의견을 모아보자. 원활한 소통을 위해 카톡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운영하자.
  - 9월 10일. 강원공대위 오픈채팅방 개설. (139명)
  
- 9월 15일. 강원사경비상대책회의 (원주시 소셜캠퍼스온강원)
  - 강원사경연대, 영월군사경협, 원주협동사경네트, 춘천사경네트, 강릉협동사경네트, 강원사경센터 25명
  - 회의 참가 지역을 기본으로 공대위를 출범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문자 발송, SNS챌린지, 기업 피해 실태조사(84개 기업 참여) 등 행동과 통합지원기관 연서명 요청 등 참여 결정.
  - 9월 18일. 강원공대위 대표단 단톡방 개설. (13명)
  
- 9월 18일. 원주투데이.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중단... 취약계층 어쩌나?” 기사 게재.  
<http://www.wonju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555>
  
- 9월 25일. 원주투데이. “사회적기업 지원 중단 소식에 원주비대위 구성” 기사 게재  
<http://www.wonju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657>
  
- 9월 27일. 강원도민일보. “사회적경제 기업 예산 급감... 강원기업 존폐 기로” 기사 게재.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206163>
  
- 10월 10일. 원주투데이. “32개 사회적기업의 일자리는 어디로?”(원주협동사경네트 이사장) 시평 게재  
<http://www.wonju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871>

- 10월 16일. 원주투데이. “원주 사회적경제, 코로나 보릿고개 넘겼을까?” 기사 게재  
<http://www.wonju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903>
- 10월 17일 박정하 국회의원(국민의힘, 원주시갑) 면담신청  
- 국감일정 이유로 고사
- 10월 18일 전국공대위 출범식 참석  
- 28명 참석
- 10월 23일. 강원공대위 제작 카드뉴스(12장) 배포 (사회적기업 소박한풍경 후원)
- 10월 23일. 원주투데이. “구슬을 꿰는 5%’를 믿는다” 독자투고(길터사협 밤새라면 TF) 게재  
<http://www.wonju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093>
- 11월 1일 원주투데이 시민토론회, “위기 직면한 원주 사회적경제 - 활성화방안 모색”  
- 발표 : 원주시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결과와 의미, 원주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중단 의 의미와 파장
- 11월 6일 원주투데이 “원주형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필요” 사설 게재  
<http://www.wonju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311>  
11월 6일 원주투데이 “정부 재정지원 중단, 워주시가 완충 역할 해야” 기사 게재  
<http://www.wonju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307>
- 11월 20일 춘천KBS “사회적기업 예산 60% 삭감... ”복지사각,일자리 감소 우려“ 보도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22105>
- 11월 24일 강원공대위 워크숍 (원주시 상지대 벤처창업관), 사경활성화강원네트워크 후원  
- 9명 참석. 공대위 향후 활동방향 토론. 토론결과 별첨 #1
- 11월 26일 영동mbc 시사반장 “역대급 지방세수 결손 각종 예산 삭감 비상’ 출연(강사연 사무국장)  
<https://www.mbceg.co.kr/post/111135>

## 별첨 #1

### 강원공대위 워크숍(23.11.24) 공대위 향후 활동방향 토론결과(요약)

- 연대회의 중심으로 예산관련공대위 활동을 하고 있으나, 지역의 활동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상황. 전반적으로 역량의 부족을 느끼고 있음.
- 예산 문제를 넘어 제도/지원 의존성 등에 대한 내부적인 성찰과 향후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
- 서울, 경기 등 지역별로 또는 한기협중앙회 등 부문별로 이해관계나 공감대에 차이가 존재. 연대회의의 리더십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
- 강원도의 경우 시군 네트워크와 센터의 역할을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할 필요가 있음.
- 예산, 정책 또는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스스로의 지원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준비해야.
- 강원도 역시 리더십이 잘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음. 시군네트워크도 활동 및 사업적인 정체성을 명료하게 정비해야.
- 당위나 대의만으로는 리더십이 만들어지기 어렵고, 사업적인 필요가 조직되어야. 예를 들어, 강원사경연대의 경우 공제기반의 사회적금융사업이 구체적으로 작동되고 있어서 실체가 인정되고 있음.
- 자활기업협회의 경험이 시사하는 바는 구체적인 사업적 필요가 모아지고, 해결될 수 있어야 동력이 생긴다는 점.
- 사회적경제 내부에서 보호된 시장 등을 중심으로 경제공동체 또는 사업연합체를 조직하는 방법이 필요.
- 초기 사회적기업가 중심으로 형성되었는 신뢰 자본, 사회적 자본이 취약해졌음. 신뢰 자본을 재구축하기 위한 노력 필요.

## 전라북도 공대위 활동

- 10.10.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동대응 결의』
- 10.14. 한병도 국회의원 간담회
- 10.18.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동대응위원회 출범식』참석
- 10.18. 현재 시군 사회적경제조직 순회 대응활동 홍보
- 10.21. 이원택 국회의원 간담회
- 10.23. 전북도의회『제4차 사회적기업기본계획 수정 촉구 건의안』 발의
- 11.08. 전북도의회 전용태 의원 5분 발언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촉구 및 전북의 역할 강화』
- 11.11. 김수홍 국회의원 간담회
- 12.12. 사회적경제 토론회 (전북도의회,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 전남 공대위 활동 : 사단법인 상생나무

- 10.13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동대응위원회』 참여 결의
- 10.18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동대응위원회 출범식』 참석
- 10.26 상생나무 사회적경제 상생포럼 ‘정부정책 탐구 및 대응’ 개최  
정부정책 진단 및 여수형 사회적경제 육성 관련 집담회
- 10.27 김희재 국회의원(전남여수시울, 예결산위원회 위원) 간담회
- 11.07 사회적경제 10문 10답 페이스북 게시(상생나무, 여수사경센터)
- 11.10 서삼석 국회의원(전남영암무안신안) 서면질의 송부

## 광주 공대위 활동 : 광주사회적경제연합회

- 09.14. 강은미 국회의원 간담회
- 09.22. 사회적경제 정책 토론회
- 10.10.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 복구를 위한 공동 대응 결의
- 10.13. 사회적경제 예산 삭감 및 대응 방안 관련 집담회
- 10.18.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 복구를 위한 공동 대응위원회 출범식 참석

- 10.24. 사회적경제 예산 관련 박수기 광주광역시의원 간담회
- 10.27. 사회적경제 별별포럼  
거버넌스를 통한 사회적경제 가치 창출 활성화 방안  
사회적경제 국면 전환을 위한 지방 자치 단체의 역할
- 12.14. 2024사회적경제 전망 토론회 예정

## **충북 공대위 :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

- 09. 19 공대위 추진을 위한 연대회의 회의 결과 및 협의회 차원의 대응 논의 제안
- 09. 22 사회적경제 정책 토론회 참석 및 내용 공유
- 09. 25 협의회 대표자회의\_예산삭감 대응 방안 및 공대위 참여 논의
- 09. 26 공대위 추진 2차 회의 결과 및 참여 제안서 초안 공유  
공대위 출범식 일정 및 활동계획 제안
- 10. 10 공대위 참여를 위한 부문별 참여의사 확인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 공대위 참여 결정
- 10. 12 충북사회적경제 페스티벌 사회적경제인의 날 성과포럼 개최
- 10. 16 공대위 전체회의 참석, 회의내용 공유와 출범식 조직 현황 및 참석자 파악  
공대위 활동기금 참여제안 : 특별회비 추렴 결의
- 10. 18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 10. 31 공대위 확대 실행위 참석 및 결과 공유  
예결위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 면담 등 대응 활동 논의
- 11. 07 사회적경제 예산 10문10답 공유 및 배포
- 11. 07 국민의힘 국회의원 엄태영 의원실 보좌진을 통한 예산 원상복구 협조 요청
- 11. 18 민주당 국회의원 도종환 의원 면담
- 12. 14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 공동대책위원회 보고회 참석
- 12. 20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 확대회의  
공대위 활동보고회 결과 공유  
부문 및 지역별 현황 공유  
2024년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 및 충북사회적경제 활동 방향 논의

# 국회활동

구슬기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보좌관

##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 공동대책위원회 보고회 <국회 활동>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기획재정부 2022년 결산안 심사(8.22)
  - 전체회의 전날인 8월 21일 협동조합 활성화 예산 91% 삭감 인지
- 2024년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9.1)
- 사회적경제 정책 토론회 윤석열 정부 사회적경제 정책 및 예산삭감 평가(9.22)
-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 공동대책위원회 설립 및 출범식(10.18)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10.19)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기획재정부 2024년 예산안 심사(11.7)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결소위: 기획재정부 2024년 예산소위 심사(11.8~9)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기획재정부 2024년 예산안 의결(11.13)

### N. 특이사항 가. 기획재정

-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중 2023년 대비 약 67억원 감액 편성된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2023년 수준으로 복원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중간지원기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므로 정부가 동의 가능한 수준(교육 및 판로지원 등 19억 6천억원)의 증액 또는 정부 원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11.1~10)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11.11~11.26)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11.27~12.2)
- 4인회(12.11~)

# 향후과제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 공대위 보고회 발표자료>

## 사회적경제 정책현황과 전환을 위한 연대와 협동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강 민 수 정책기획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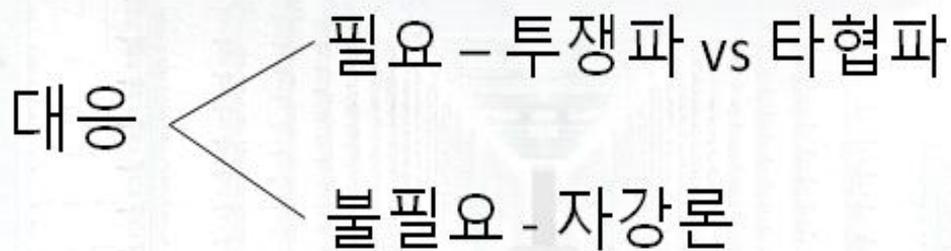
## 윤석열정부의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정책

01

I. 사회적경제 정책

### 윤석열정부 사회적경제 정책

○ 현 상황을 대하는 민간의 입장



입장의 차이와 관계없이 사회적경제를 둘러싼 정책에는 큰 변화가 있고 이 변화(정책 퇴조기)에 사회적경제가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매우 중요한 시점임

01

I. 사회적경제 정책

### 윤석열정부 사회적경제 축소에 맞서 단기 대응을 하는 것은 당연

○ 사회적경제예산삭감의문제점

첫째, 취약계층의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이 붕괴 됩니다.

- 2021년 말 기준 사회적기업의 고용인원은 63,034명으로 이중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노동 취약계층이 38,597명(61.2%)을 차지함

- 최근 3년간 취약계층에게 지원된 예산 5,624억여원중 정부가 문제 삼는 부정수급 사례는 71곳으로 전체 사회적기업중 1.1%이며 수금액23억원은 전체 지원금 예산의 0.4%에 불과

-한편, 정부의 인건비 지원을 받는 이들은 전체 노동자의 10.7% 정도에 불과하고 89.3%는 사회적기업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 있음

둘째, 신뢰보호원칙 위반, 시스템 붕괴

- 정부의 정책은 예상 가능해야 함. 그러나 이번 예산삭감은 정부의 정책이 기대 가능한 수준을 넘은 것으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에 해당함

- 만약, 현재와 같이 24년 예산이 확정되면 사회적경제분야의 일자리가 사라질 뿐 만 아니라 지난 10여년 간 구축한 지원 시스템이 붕괴되며 이를 회복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들고, 인적 자원의 유출은 단기간 회복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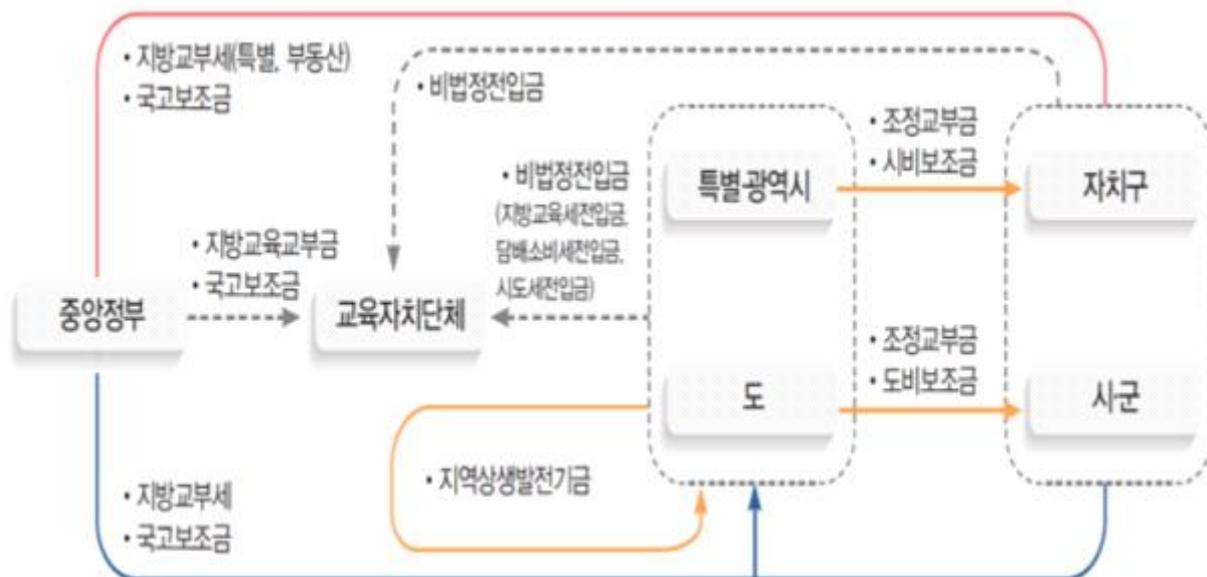
셋째, 정부 발표는 기존 정부 발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

- 사회적경제지원의 효과가 부족하다는 언급은 이미 정부의 수차례 발표한 자료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

- 한편, 정부의 이번 예산삭감은 ILO는 제110차 총회 및 UN 제66차 총회 결정에 따라 사회연대경제활성화를 권고한 것에 서명한 정부의 결정을 정면으로 위배 되는 행위

## 01 I 사회적경제 정책 윤석열정부 사회적경제 정책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교육자치단체 재정구조



24년 지자체로 이전되는 교부세는 66조8천억원으로 올해(2023년 본예산 기준)에 견줘 8조5천억원(11.3%) 감소. 교육청 재원인 교육교부금도 올해보다 6조9천억원(9.1%) 감소한 68조9천억원

24년 감액 규모는 15조4천억원(10.2%)에 이릅니다

사회적가치 대분류를 삭제하고, 경영관리 및 경영성으로 통합 → 사회적가치개념의 후퇴

< 기존(2022년 편람) >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지속가능 경영 (26)	리더십 (15)	경영층의 리더십
		전략경영 혁신성과
	경영시스템 (11)	조직·인사관리
		재무관리
사회적 가치 (37) ('23년 통합)	일자리 확대(8)	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립
	사회적 책임 (29)	소통 및 참여
		윤리경영
		재난·안전관리
		지역상생발전
경영성과 (37)	주요사업 (17점 내외)	주요사업 세부 지표
	경영효율성과 (12점 내외)	경영수지 관련 지표
	고객만족성과	고객만족도

< 변경(2024년 편람) >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경영관리 (26→50) ※ 사회적 가치(37) 통합·조정	리더십 (12)	경영층의 리더십
		전략 및 혁신
	경영시스템 (19)	조직·인사관리
		윤리경영 재무관리
경영성과 (37→50) ※ 정부정책 이행성과 별도관리	사회적 책임 (19)	지역상생발전
		안전 및 환경 소통 및 참여
	주요사업성과 (17점 내외)	주요사업 세부 지표 ※ 맞춤형 지표 추가
경영효율성과 (15점 내외)	경영수지 관련 지표	경영수지 관련 지표
		고객만족도
	고객만족성과 (8)	정부정책 이행실적

\* 2022. 12. 19. 발표자료. 2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개편안(지방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관련 지표)

[ 한국 사회적경제 기업의 거래네트워크 구조 ]

한국 사회적경제 기업의 거래네트워크 구조에서 가장 핵심적인 업종은 지방행정 집행기관, 음식료품 제조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

> 산업 간 거래 네트워크에서의 핵심 업종

- '지방행정 집행기관'의 중심성이 가장 높음
  - 공공구매
- 농업 및 음식료품 제조업 산업 중심으로 농협, 농업회사 법인, 영농회사법인 등과 거래가 강함
- 그 외 거래가 활발한 업종
  - 사업 지원 서비스업
  - 출판업
  - 개인 서비스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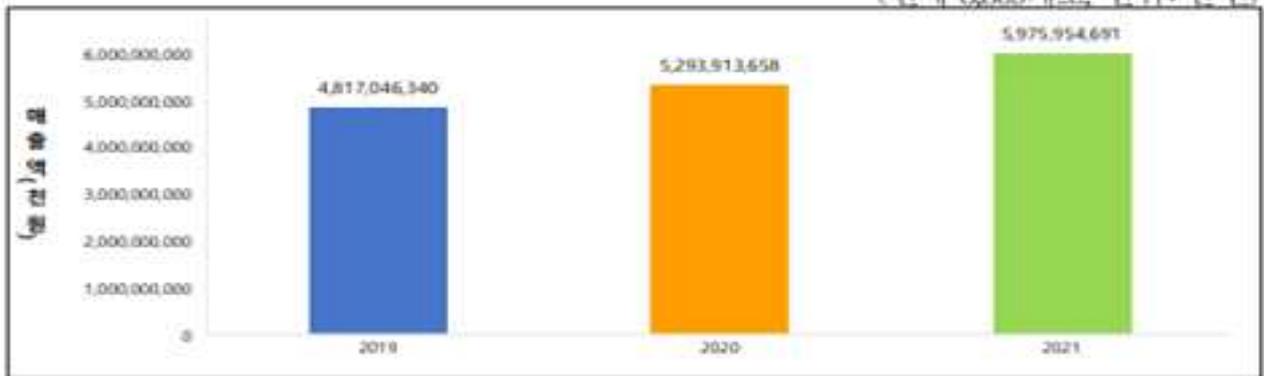


<기업 간 메인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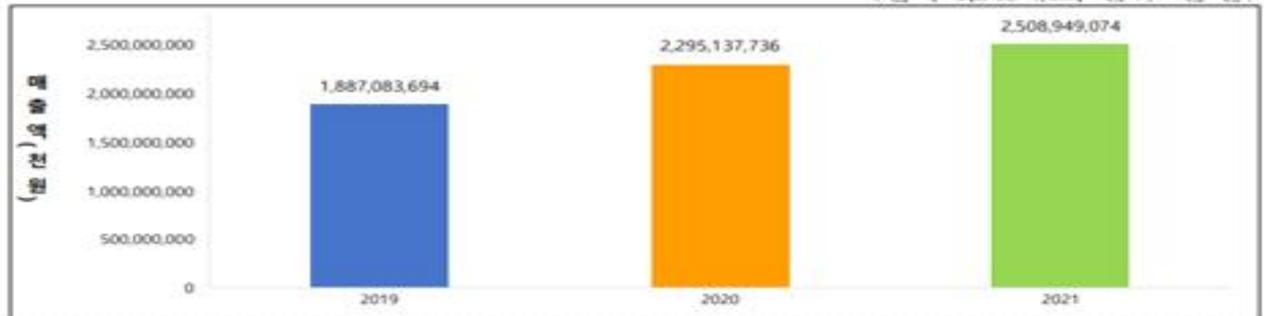
출처 : 2023 한국협동조합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사회적기업매출액과 공공시장 매출

(전체 3,500개소, 단위: 천 원)



(전체 1,948개소, 단위: 천 원)



**사회적경제의 지속발전을 위하여 생각해 볼 문제들**

**02**

Ⅱ. 사회적경제 정책  
대응방향 - 장기



현 이슈가 정리되고 나면 남는 장기적 대응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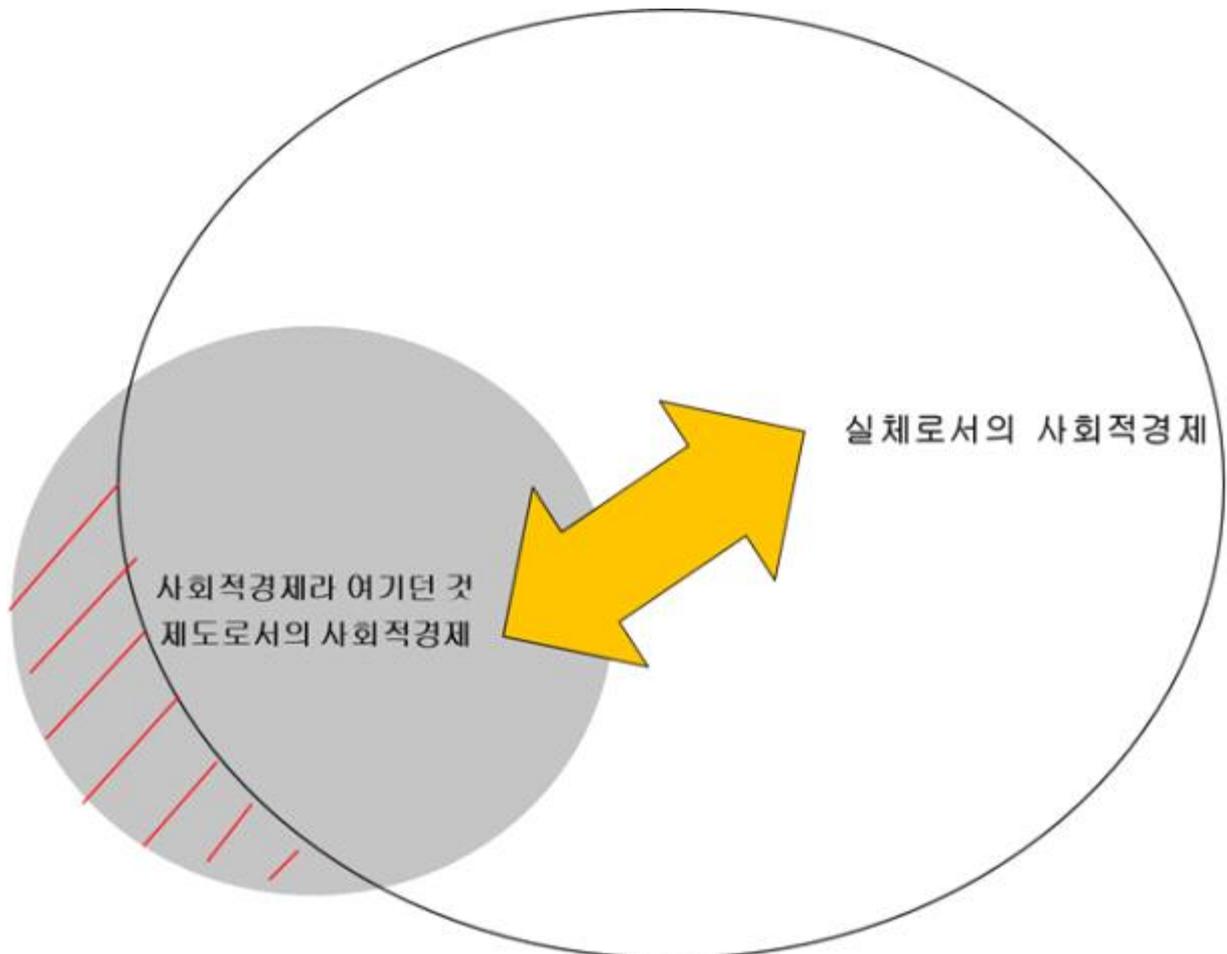
## 사회연대경제

## 사회적경제에서 사회연대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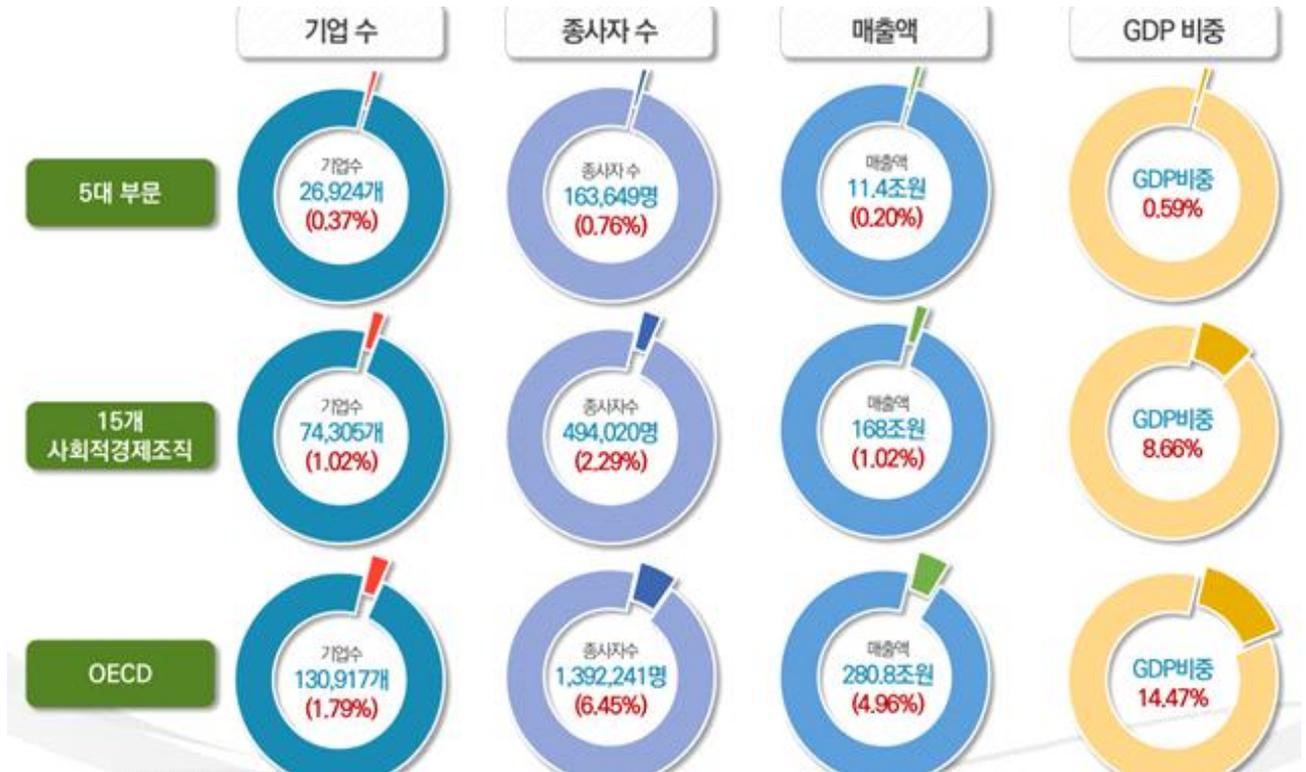
2013년, 유엔 사회연대경제 태스크포스(UNTFSSSE)가 발족한 이후 유엔은 공식 용어로 사회연대경제(Social and Solidarity Economy)를 사용

물론, 용어만 사회적경제에서 사회연대경제로 바꾸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님

오히려 우리의 경우 정권의 교체와 관계없이 사회적경제조직이 상호성, 민주성, 연대성을 기반으로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면서 동시에 지역사회의 잠재력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와 맥락으로 받아들여지면 좋겠음



## 2020년 기준 전체 GDP에서 사회적경제비중



출처 : 한국의 사회적경제현황 및 성장 과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23)

## 02 II. 사회적경제 정책 대응방향 - 생태계



첫째, 만들어진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발전을 돕는 사회적경제방식의 판로를 개척

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공구매 가점제도가 급격히 축소되었고 시장상황이 어려우니 더욱 그렇다.

두 번째, 사회적경제의 고유한 특질을 연구하는 사람과 기관을 늘려야 한다. 주식회사 기업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대학에서 경영학과를 통해 주식회사기업의 경영에 대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 있지만 사회적경제기업은 그렇지 않다. 민간연구기관을 만들고 지난 20년 성장한 사회적경제를 연구하는 대학과 사회적경제가 연계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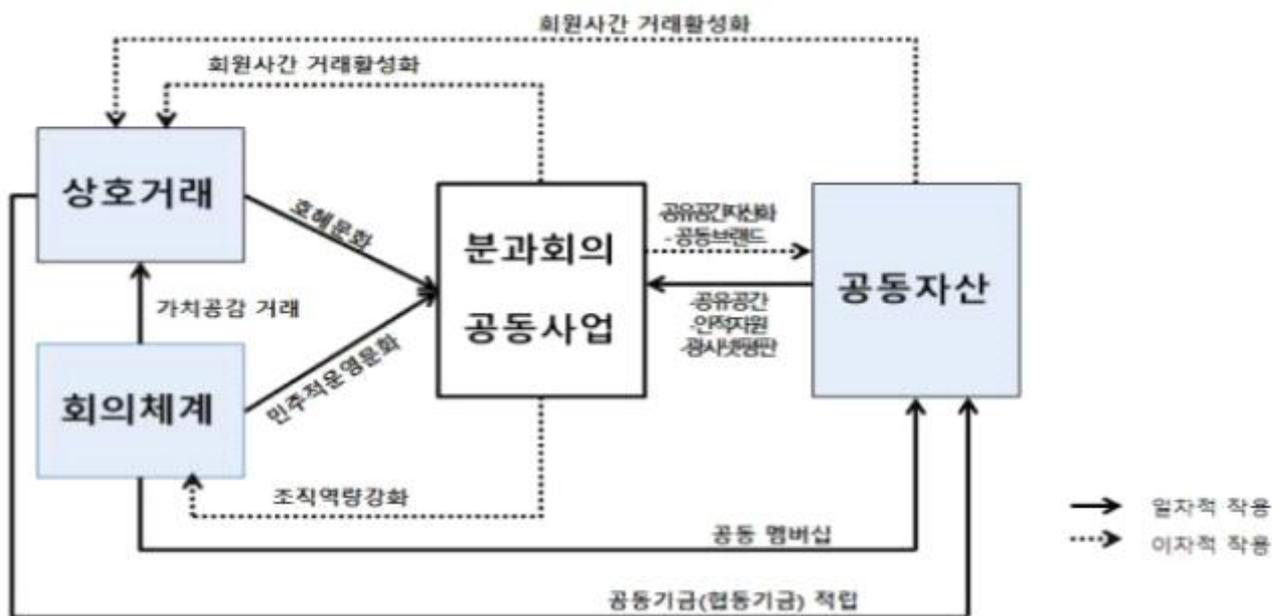
셋째, 새로운 세대가 사회적경제분야에 진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존의 방식으로 창업지원 사업을 할 수 이유도 필요도 없다면 우리 방식의 창업지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업종이나 부문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자신과 함께 할 젊은이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면 낭비를 줄일 수 있고 굳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숫자를 많이 늘릴 필요도 없다.

넷째,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연대연합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적경제가 경제 6단체가 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시장과 주식회사기업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늘 필요한 것이고 정부의 개입이 기존 사회보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것에 쓰여 져야 한다는 주장을 게을리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연결하는 자조금융을 조성하는 것이다. 사회적경제의 성장에 따라 다양한 자금 수요가 있고 동시에 사회적경제를 이해하고 사회적경제의 자산 형성을 지원 할 금융은 늘 언제나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렇다.

**02** II. 사회적경제 정책  
대응방향 - 협동의 지역사회

협력의 장치/제도 간 상호의존관계도



출처 : 시민적 협력의 작동 방식에 대한 연구 : 사회적협동조합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협력 경험을 중심으로 (이은주)

02 II. 사회적경제 정책  
대응방향 - 사례

더센몰 3월 3일 오픈



<https://www.coniaworld.com/seoulcoop>

02 II. 사회적경제 정책  
대응방향 - 원칙을 경영적으로 구현

협동조합의 상호거래와 협업 성과: 공유공간 매입 추진

한밭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대전시민사회연구소  
치유공간마을의술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치협

로컬크루이중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지역화폐협동조합

카페 단비(단비 사회적협동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장교육학부모회  
대전복지공강  
공용 회의실



출처 :협동조합의 상호거래와협업성과(이원표)

03 대전환을 위한 질문

대전환을 위해 사회적경제에게 필요한 질문

1. 21세기에도 협동조합(사회연대경제)운동이 필요한가?

- 인간은 사회 속에서 경쟁과 협동하지만 경쟁이 효율적이라고 한다.
- 정말 그런가? 만약, 경쟁이 인간사회의 본질이라면 협동운동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

2. 사회는 어떻게 출현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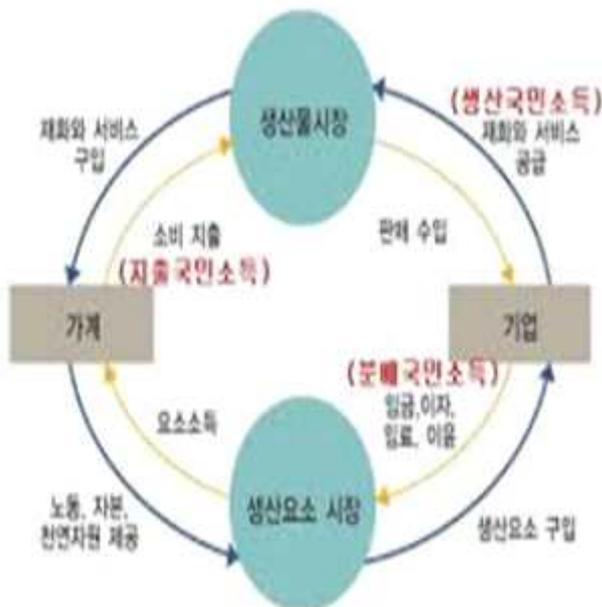
- 우리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회' 는 언제, 어떻게 출현했을까?
  - 지구의 역사에서 대략 5억 가지의 대형 종(種, species)이 출현했고 이중 오직 17개 종만이 발달된 사회를 이루고 산다.
  - 어떻게 인간은 사회를 이루고 살 수 있었을까?
  - 도대체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인가?

3. 인류세의 인간, 우리의 삶은 지속가능한가?

-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속가능한가?
- 역사는 끝났다. 과연 자본주의 너머의 시대는 존재하는가?
- 만약, 아니라고 대답한다면 그 대안은 있는가?

### 03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선택

지구(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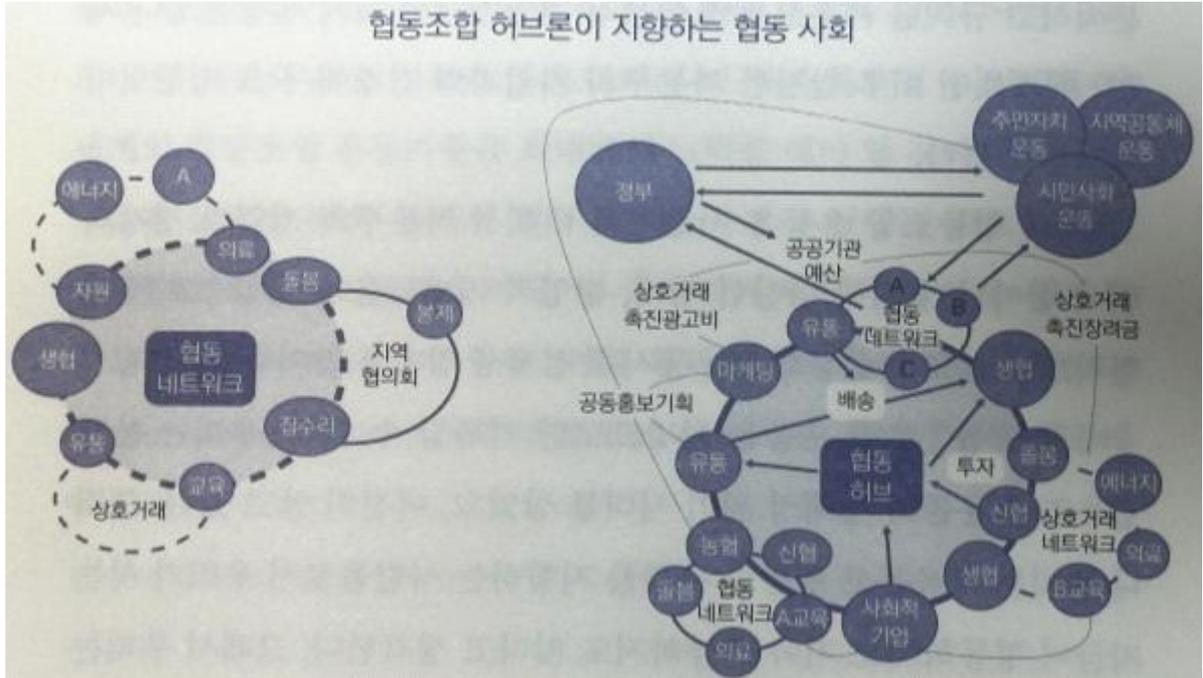


허먼데일리, 성장을 넘어서

인간과 지구의 공존을 다룬 '도넛 경제학'



케이트 에이원스 옥스퍼드대 교수의 저서 '도넛 경제학'



출처: 다시, 협동조합을 본다

20세기 복지국가모델 역시 확장적 경제모델에 기반했던 화석연료 시대 성장 의존형 경제모델이었음

지구의 생태적 한계 내에서 성장 아닌 발전을 추구하는 경제체제는 국가, 시장, 그리고 공동체의 역할에 대해 고려하면서 전체 경제 내 공공이 책임지는 비중을 늘리고 현재 과도하게 큰 이윤이 목적인 기업들의 거래의 비중을 줄여나가면서 장기적으로 공동체(어소시에이션, 협동조합, 커먼즈)에 의한 이용이 목적인 거래의 비중을 늘려나가야 함

### 03 대전환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미션과 비전

## 한국 사회적경제의 미션과 역할

**(미션)** 국가와 이윤기업에 의해서 충족되지 못하는 다양한 시민사회의 필요에 대응하는 것을 통해 사회에 배태된 경제의 기능(본래 시장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을 회복하도록 하는 거시적 혁신자가 되어야 함

**(역할)** 거시적 혁신자로서 사회적경제는 우리사회가 처한 불평등(자산/소득), 양극화, 기후위기, 지역소멸과 같은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자로서의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어야 하며, 파편화된 개인을 연결하는 '사회적 접착제'가 되어야 함

**(과제)** 공동체(어소시에이션, 협동조합, 커먼즈)에 의한 이용이 목적인 거래의 비중을 늘려나가야 함

## < 부 록 >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공동대책위원회> 제안문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선언문

민생살림 예산 패키지 토론회 및 공동행동 제안(초)

공동대책위원회 핵심 요구안

##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제안문**

###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절박한 활동에 함께 해 주십시오>**

사회적경제 구성원 전체가 아닌 밤중에 된서리를 맞았습니다. 사회적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느 기업도 받아주지 않는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온 사회적기업에게 한시적인 인건비 보상은 일반 기업의 원리와 맞지 않다면서 신규 보상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최저임금에 가까운 월급을 받으며 2년 한시 고용의 불안정한 일자리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시군구의 현장을 밤낮으로 뛰어 다니던 500여명의 중간지원조직 활동가들은 중간지원조직 예산 전액 삭감으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2만5천여 협동조합에게 배정된 70억여원 정도의 알량한 최소한의 예산도 90% 가까이 삭감했습니다. 산림청, 중기부, 행안부... 이런 식의 폭력적인 예산 삭감은 지난 수십년의 국가예산 수립에서 없었던 일입니다. IMF 때도 이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이런 폭력적 삭감에 대해 현장의 관계자들에게 어떤 협의와 조정도 없었습니다. 예산 삭감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불과 몇 개월 전에 자랑하던 사회적기업을 세금을 훔치는 도둑으로, 자립성이 없는 기업으로 매도했습니다.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것도 정도가 있습니다. 정부는 선을 넘었습니다.

지난 20여년간 열심히 사회적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여러 사업에 여념없었던 기업인들과 종사자, 중간지원조직의 활동가들은 이런 상황에 맞닥뜨려 황당해 하다가 점차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현장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된다고, 어떻게든 우리의 분노를 보여줘야 한다고 합니다. 수많은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들고, 소멸해 가는 농산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더 편안한 돌봄을 제공하여 저출생노령화를 막아내고 있는 사회 문제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일하던 우리 사회적경제기업들의 활동이 지속되도록 예산을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목소릴 높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현장의 분노를, 현장의 피터지는 요구에 대답해야 합니다. 사회적경제의 원칙은 “협동과 연대”입니다. 각각 움직이는 것보다 함께 모여서 행동하는 것이 더 큰 힘을 만들고, 더 큰 영향력을 보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24년 예산의 희생자이며, 우리 모두가 공동행동의 주체입니다. 공동대책위원회에 함께 참여하여, 반드시 사회적경제 예산의 원상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행동합시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연대조직 뿐만 아니라 개별단체, 지역, 사회적경제 구성원 개개인들 누구에게 열려 있습니다.

##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대위 출범 선언 및 결의문

### 사회적경제 구성원들은 공대위로 뚝뚝 뭉쳐, 최대한의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무원칙, 비민주적으로 삭감된 사회적경제 예산을 원상복구 시킬 것이다.

우리는 경악했다. 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사회적경제 예산안은 수백 명의 일자리를 무책임하게 없애 버리고, 취약계층의 사회적 참여를 뿌리째 뽑아 버리고 있다.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맞이하고 있다. 수백 명의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수천 수만 명의 취약계층들은 이제 안정적인 일자리를 잃고 다시 소극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분노한다. 지난 20여년간 힘든 여건 속에서도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가치를 만들어 내기 위한 혁신과 분투의 과정을 마치 세금이나 빼 먹는 파렴치한 행동으로 몰고 가는 정부의 비상식적인 행태를 참을 수가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사회적경제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경제를 말려 죽이려는 일체의 시도에 대해, 사회적경제의 자존심을 걸고 저항하려 한다.

정부의 사회적경제 대한 잘못된 시각을 고치고, 정부가 재를 뿌린 사회적경제의 이미지를 다시 되돌리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당장 우리는 아무런 절차적 정당성도, 민관협치의 정신도 없이 정부가 졸속으로 축소시킨 사회적경제 예산안을 원상복구하는 투쟁부터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예산 복구에서 멈추지 않는다. 정부가 짓밟은 사회적경제의 명예를 회복하고,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 더 깊고 더 넓게 성장할 것이다. 그 결과 사회적경제의 성과를 더 확대하고, 대다수 국민과 함께 더 큰 사회적가치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예산 원상복구는 첫 단추를 함께 끼는 우리 모두의 주장이며, 국회와 정부를 향한 명령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전국 방방곡곡 사회적경제인의 분노와 의지를 모아 지금 여기 국회의사당 앞에서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한다. 공동대책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공동대책위원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하며, 실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 우리의 결의 -

- 하나, 우리는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 대한 비난이나 폭력적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가장 아래에서 약한 사람과 함께 하려는 선한 의지를 굽히지 않을 것이다. 협동과 연대의 활동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 하나, 우리는 기후위기와 지역소멸의 대응,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한국사회의 중요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최전선에서 지속적으로 사회적가치를 만들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 하나, 우리는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 예산삭감의 부당성을 전 국민에게 설명하고, 국민들과 함께 예산의 원상복구를 이뤄낼 것이다. 나부터 먼저 최소 100명의 국민에게 공대위의 취지를 설명한다.
- 하나, 우리는 우리 결의를 더 잘 드러내기 위해 1인당 1일 이상의 1인 시위를 2024년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전국 방방곡곡에서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 하나, 우리는 국회가 이번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 복구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확신한다. 모든 사회적경제 관계자는 지역구별 국회의원을 면담하고, 원상복구를 강력 요청한다.

# 민생살림 예산 패키지 토론회 및 공동행동 제안(초)

제안: 사경 예산원상복구 실행위원회

## 1. 상황인식

- 민생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가치를 만들어 내며, 중장기적인 국가발전을 위한 정부의 투자와 관련된 예산을 “민생살림예산”이라고 할 수 있음
- 윤 정부의 2024년 예산안은 많은 영역에서 민생살림예산을 삭감하고, 대신 총선용 토목예산을 증액하는 등 국가 및 민생의 발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음
- 특히 사회적경제(최대 92% 감액), R&D(초유의 10% 감액), 지방교부금(최대 40조 이상 감액), 여성, 아동예산 등을 삭감함으로써 취약계층을 지원하거나, 기초과학, 아동 등 국가 미래와 관련된 영역에서 어렵게 일하는 사람들의 일자리와 이후의 공공적 삶의 전망까지 위협하고 있음
- 따라서 24년 예산안에 분노하고, 각 부문의 활동을 통해 예산을 복구하거나 일부 증액하려는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음
- 국회는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일단 삭감된 예산의 증액은 국회 내의 강한 합의 및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볼 때 어려움이 예상됨

## 2. 민생살림예산 패키지 공동행동 필요성

- 각 영역의 개별적 예산 원상복구 활동은 위의 상황에 비쳐볼 때 쉽지 않음. 따라서 정부에 대해 국회에서 일괄적으로 요구하고, 민간의 요구 주장도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는 공동행동이 필요함
- 민생살림예산 패키지를 24년 예산에서 가장 피해가 크거나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들이 합의하여 제안함으로써 국회의 증액 및 원상복구 주장에 힘을 실어 줄 수 있고, 공동행동을 통한 동일한 주장을 펼치면 전국민적 관심을 끌어 내는 데 용이할 것임
- 총선을 4개월 앞둔 12월 상황에서 여당에게도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국회의 합의가 원활하게 되도록 유도할 수 있음.

## 3. 공동행동 제안 사항

- ☑ 11월초 공동토론회 개최
- ☑ 공동행동 활동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 개최(주요 시점에 2~3회)
- ☑ 여야 당대표 민생살림예산 패키지 공동 전달
- ☑ 각 영역의 예산활동에 대한 상호 지원 및 상호 홍보

가. 11월초 공동토론회

- 시기 : 정부 세부예산안 국회 전달 후 10일 이내
- 주최 : 사경연대 등 공대위 참여단체, 자치분권운동네트워크, 한국마을연합, 여성, 아동 관련 단체, 알앤디 대표 활동 단체 등 예산삭감 관련 직접 피해 및 활동 진행 단체들을 포괄
- 내용 : 세부예산안에 나타난 각 부문 문제점 주장  
민생살림예산패키지 정리 및 일괄 통과 주장  
민생살림 외면하는 현 정부에 대한 비판과 원상복구 권고
- 준비사항 : 10월말 관련 단체 공동토론회 및 공동행동 제안 및 참여 결의  
국회를 통해 세부예산안 조속히 확보 및 각자 분석  
*(행정에서 넘어오는 날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작업)*  
민생살림예산 패키지 작업
  - 참여 각 부문 연구책임자 워크숍 통해 초안 작성  
*(세부예산 확보일로부터 3일 이내)*
  - 대표자 모여서 초안 합의(4일 이내+토론회 확정)
 국회 공동토론회 준비 실무 진행*(역할 분담): 조직/홍보팀 협력*

나. 공동행동 활동을 위한 기자회견 개최

- 시기 : 1회 : 공동토론회 이후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  
2회 : 예결위 일정 보면서 결정  
3회 : 여야 협의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선정
- 내용 : 1회 이후 2~3회는 상황을 추적하면서 협의하여 내용 생산

다. 여야 당대표 민생살림예산 패키지 전달

## □ 사회적경제 예산 증액 관련 핵심 요구

- 사회적경제 예산 중 민간의 자구노력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을 제외하고, 취약 계층 고용, 생산적 복지,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지속성 보장 등 국가가 해야 할 책무와 관련된 영역의 예산에 대해서만 집중 요구하는 것임. 취약계층의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고용과 지역소멸 우려 지역의 활성화를 견인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의 양적, 질적 확대는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이며,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시도별 중간지원조직 관련 예산도 △300명 이상의 전문가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현장 사경조직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
-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신규 인증 및 지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년 동안 기존 정책을 신뢰하며 준비해 온 예비사회적기업과 예비마을기업의 발전과 성장이 단절될 수 있음. 이는 고용부 3개 계정과 행안부 마을기업육성사업에 포함되어 있음. 기재부 협동조합활성화 사업은 2만5천여개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75억의 예산을 편성한 것도 다른 국가 정책에 비해 볼 때 상당히 미약한 수준임에도 7억 8천만원으로 90% 이상 삭감하여 민간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음. 기존 예산을 모두 복구해도 여전히 부족함.
- 이 요구안은 1년 가까이 민관이 협의하여 작성한 관계부처의 2024년도 예산요구 내용을 바탕으로 제안한 것임. 6천억 이상 삭감된 것 중 총액 1천억원 정도 24년 정부 예산 편성안에 추가되는 것으로, 4만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공고하게 하고, 불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회의 안전망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는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면 효과적인 국가예산 편성이 될 것임.

### <사회적경제 요구증액>

구분	23 본예산	24 예산안	조정안	요구 증액	관련 상임위원회 및 부처
총 계	216,667	82,099	179,380	97,278	
사회적기업 성장지원 외	202,194	78,624	165,689	87,062	환경노동위원회 : 고용노동부
협동조합활성화사업	7,508	780	6,726	5,946	기획재정위원회 : 기획재정부
마을기업육성사업	6,965	2,695	6,965	4,270	행정안전위원회 : 행정안전부

<사회적기업 : 환경노동위원회 : 고용노동부>

(단위 : 백만원)

구분	23 본예산	24 예산안	조정안	요구증 액	예산 코드	증액 사유 및 비고
합계	202,194	78,624	165,689	87,065		
사회적기업 지원	69,259	28,589	59,974	31,385	1037-311	
시도지원기관 운영	4,222	0	4,222	4,222	1037-3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 사회적기업지원기관은 그 간 예비 지정, 인증, 교육, 컨설팅 등 다양한 차원의 지원으로 사회적기업의 경영을 지원하고, 제도와 정책 효과를 높이도록 하였음. 해당 기관 직원은 10여년의 지원업무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조직도 축적되어 있음.</li> <li>○ 이 항목이 삭감된다면 3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지고(기재부 협동조합지원기관 예산 포함), 그 간 축적된 유무형의 지원 시스템은 붕괴될 것임. 이는 내년에 예산을 복원한다고 하더라도 돌이키기 어려운 것으로서 반드시 지속성을 유지해야 할 것임.</li> </ul>
청년등사회적 기업가육성	41,192	4,670	41,192	36,522	1037-3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부의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의 세목 사업의 하나로서 그 동안 청년 등의 다양한 초기 사회적기업가들에 대한 교육, 신규 기업의 설립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li> <li>○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의 첫 진입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인증 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소셜벤처나 플랫폼기업가의 양성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해 왔음. 지난 10년간 사회적기업진흥원과 고용노동부의 대표 사업으로 평가됨.</li> <li>○ 이 사업이 없다면 사회적기업가의 체계적 육성이 중단됨으로써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이 어려워짐. 또한 24년 예산안에 포함된 시도별 성장지원센터를 운영한다는 것도 뿌리없는 나무를 키우는 것에 불과함. 반대로 유지되면 청년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기업가 육성과 기업설립 및 운영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음.</li> </ul>
사회적기업 성장지원	8,817	4,938	7,222	2,284	1037-311	
사회적기업 (지특)	103,377	47,665	82,528	34,863	1037-3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 및 인증 사회적기업의 일자리예산을 지원하는 항목으로서, 현재 신규 인증 사회적기업 및 지정 예비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지원을 배제한 조건으로 24년도 예산안이 작성되어 있음. 이 경우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입법 취지를 위배하게 됨.</li> <li>○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취지를 행정부가 준수함으로써 사회적기업 생태계의 지속적인 유지와 사회적가치를 지향하는 기업가의 의욕을 지속시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예산으로 재정사업이 유지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산적 복지와 원활한 사회 재진입 기대</li> </ul>
사회적기업 육성	24,621	0	18,887	18,887	1037-301	
사회적기업 (지특제주)	4,937	2,370	4,300	1,930	1037-313	

<협동조합활성화사업 : 기획재정위원회 : 기획재정부>

구분	23 본예산	24 예산안	조정안	요구 증액	예산 코드	증액 사유 및 비고
총계	7,508	780	6,726	5,946	1331-302	
교육	866	150	850	700	1331-302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현 정부가 수립한 법정계획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핵심 전략과제 중 한 분야로 증액 필수 (총1,000백만원) * 주요 핵심사업: 협동조합 교육훈련사업, 전문상시상담, 경영공시 및 총회 교육, 온라인교육, 중간지원기관 종사자 및 공무원 교육
홍보	260	110	140	30	1331-302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시행되는 협동조합의 날 기념행사 및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일정 수준의 예산편성 필수 (총250백만원) * 주요 핵심사업: 협동조합의 날 기념행사, 대국민 협동조합 인식증진, 홍보사업 등
설립운영 지원	4,709	240	4,760	4,520	1331-302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현 정부가 수립한 법정계획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핵심 전략과제 중 한 분야로 증액 필수 (총5,000백만원) * 주요 핵심사업: 내실있는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자생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판로지원사업, 협동조합 전문 지원기관 운영 등
정책개발	210	0	250	250	1331-302	협동조합의 성숙을 위한 제도정비 및 정책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일정 수준의 예산편성 필수 (총250백만원)
종합정보 시스템	370	253	253	0	1331-302	협동조합 정책운영 및 현황, 정책홍보 등을 위한 플랫폼 구축, 개선, 운영비로 일정 수준의 예산편성 필요 (현 예산(안) 유지)
기타 사업비	1,093	27	473	446	1331-302	이미 개최지(인천광역시, 시장 유정복) 선정을 완료한 2024년 사회적경제박람회 개최 지원예산으로 전년 수준의 예산 편성 필요 (총500백만원)

<마을기업육성사업 : 행정안전위원회 : 행정안전부>

구분	23 본예산	24 예산안	조정안	요구 증액	예산 코드	증액 사유 및 비고
총계	6,965	2,695	6,965	4,270	3131-301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270	0	270	270	3131-301	마을기업육성사업 24년도 예산에는 신규 마을기업 지정 관련 예산이 제외되어 있음. 이는 최소 1년 최대 3~4년 동안 마을기업 지정을 위해 준비해 온 지방소멸 지역 및 기타 주민 주도 마을기업 희망자들에게 국가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것이므로, 순차적인 준비가 필요함. 24년 예산을 복구한 후 점차적인 조정이 이뤄져야 할 것임.
마을기업 육성사업	6,695	2,695	6,695	4,000	3131-301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후원 신청서

후원자 구분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회원단체 <input type="checkbox"/> 비회원단체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대표자명)			담당자 / 직책	
연락처 (핸드폰)			이 메 일	
주 소				
비 고	단체일 경우 담당자 및 직종 전환을 기록해 주세요			
기 부 방 법	정기후원 (CMS) <input type="checkbox"/>		비정기 후원(기부금) <input type="checkbox"/>	
	후원금액	월                  원	후원금액	금                  원
	예 금 주		입금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은행명/계좌번호		입금 예정일	년                  월                  일
이 체 일	5일 <input type="checkbox"/> 10일 <input type="checkbox"/> 15일 <input type="checkbox"/> 20일 <input type="checkbox"/> 25일 <input type="checkbox"/>	입금계좌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신협 137-008-594618	
안 내	* 신청서 제출 : ksen121121@gmail.com * 후원문의 : 010-3456-2387(하재찬 상임이사) * 후원금 사용내역은 연대회의 홈페이지( <a href="https://ksenetmixon.jp/">https://ksenetmixon.jp/</a> ) 및 총회자료집을 통해 확인 가능 ※ 주민등록(사업자등록)번호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또는 국세청 제출(소득공제)에 사용			
<b>【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b>				
수집항목 및 목적: 주민등록번호 기부금 영수증 발급 • 보유 및이용기간 정보폐기 요청 시까지 별도 요청이 없을 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 보유 • 동의 거부 시의 불이익: 고유식별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신청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동 의  <input type="checkbox"/>
<b>【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b>				
수집 및 이용목적: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수납 • 수집항목: 성명, 연락처,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 이용 동의 일로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 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그 경우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동 의  <input type="checkbox"/>
<b>【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b>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출금이체 신규등록 및 해지 사실 통지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연락처,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 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그 경우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동 의  <input type="checkbox"/>
2024년                  월                  일				
위와 같이 후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귀하				

서로가 꽃 / 나태주

우리는 서로가  
꽃이고 기도다

나 없을 때 너  
보고 싶었지?  
생각 많이 났지?

나 아플 때 너  
걱정됐지?  
기도하고 싶었지?

그건 나도 그래  
우리는 서로가  
기도이고 꽃이다.